

A Study on the Future Vision for the  
new Goyang City Hall through  
the Best Cases for Public Office Building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를 통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미래비전 제시

정 광 진  
조 해 송

A Study on the Future Vision for the new Goyang City Hall through the Best Cases  
for Public Office Building

## 공공청사 건립 우수사례를 통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미래비전 제시

### 연구책임자

정광진(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자

조해송(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1년 03월 31일

저자 정광진, 조해송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72

홈페이지 [www.gyri.re.kr](http://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74414-7-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요약 .....	i
<b>제1장 연구의 개요 .....</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b>제2장 공공청사 건립 사례 조사 .....</b>	<b>9</b>
제1절 설계 공모 이전 건립 사례 조사 .....	11
제2절 설계공모 건립 사례 조사 .....	28
제3절 사례 간 비교 및 시사점 .....	56
<b>제3장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 도출 .....</b>	<b>65</b>
제1절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 분석 .....	67
제2절 공공사업 시 갈등 사례 분석 .....	89
<b>제4장 신청사 건립 비전 설정 .....</b>	<b>121</b>
제1절 청사의 개념과 흐름 .....	123
제2절 주변환경 분석 .....	132
제3절 도시 비전 및 슬로건 분석 .....	146
제4절 시민 의견 분석 .....	173
제5절 고양시청사 건립 비전 설정 .....	179

<b>제5장 국제공모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검토</b> .....	<b>191</b>
제1절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절차 .....	193
제2절 신청사 기본설계지침(안) 제안 .....	207
<b>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b> .....	<b>217</b>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219
제2절 정책 제안 .....	223
<b>참고문헌</b> .....	<b>227</b>
<b>부록</b> .....	<b>231</b>
<b>Abstract</b> .....	<b>269</b>

## 표 목차

[표 1-1] 고양시청사 연면적 및 법적 기준면적 비교현황	4
[표 1-2] 사업추진경위	4
[표 1-3] 연구의 방법	7
[표 2-1] 표 용인시청사 개요	11
[표 2-2] 용인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12
[표 2-3] 용인시청사 본청사 층별 현황	14
[표 2-4] 용인시청사 의회청사 층별 현황	14
[표 2-5] 용인시청사 문화복지시설 현황	16
[표 2-6] 성남시청사 개요	19
[표 2-7] 성남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20
[표 2-8] 성남시청사 청사동 층별 현황	21
[표 2-9] 성남시청사 의회동 층별 현황	22
[표 2-10] 성남시청사 개방시설 현황	24
[표 2-11] 청주시청사 개요(예정)	28
[표 2-12] 청주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29
[표 2-13]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층별 계획	30
[표 2-14] 청주시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31
[표 2-15] 청주시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33
[표 2-16] 청주시청사 시민문화지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34
[표 2-17] 청주시청사 역사적·상징적 거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35
[표 2-18] 순천시청사 개요	37
[표 2-19] 순천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39
[표 2-20] 순천시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41
[표 2-21] 순천시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42
[표 2-22] 순천시청사 시민문화지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43

[표 2-23] 순천시청사 생태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44
[표 2-24] 종로구청사 개요 .....	46
[표 2-25] 종로구청사 건립 주요 연혁 .....	47
[표 2-26] 종로구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50
[표 2-27] 종로구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51
[표 2-28] 종로구청사 시민문화지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52
[표 2-29] 종로구청사 역사적 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53
[표 2-30] 행정안전부의 임대시설에 대한 의견 .....	54
[표 2-31] 종로구청사와 기타 설계공모 비교 .....	55
[표 2-32] 사례별 목적 및 비전 .....	56
[표 2-33] 사례별 규모 및 사업비 .....	57
[표 2-34] 사례별 설계·공모 방식 .....	58
[표 2-35] 사례별 시민문화공간의 비율 및 구성 .....	61
[표 2-36] 사례별 규모 및 사업비 .....	64
[표 3-1] 공공갈등 유형 이론 .....	68
[표 3-2] 참여예산의 정의 .....	75
[표 3-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특징 .....	76
[표 3-4] 수원 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	84
[표 3-5]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	85
[표 3-6] 갈등전개과정 .....	91
[표 3-7] 주요 이해관계자 .....	94
[표 3-8] 갈등 전개 과정 .....	98
[표 3-9] 주요 이해관계자 .....	101
[표 3-10] 갈등 전개과정 .....	104
[표 3-11] 주요 이해관계자 .....	107
[표 3-12] 갈등전개과정 .....	111
[표 3-13] 대구신청사 후보지 .....	114

[표 3-14] 대구시 신청사 건립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주요 입장 .....	115
[표 3-15] 핼피갈등 사례 종합 .....	119
[표 4-1] 청사의 법적 정의 .....	123
[표 4-2] 청사의 흐름 .....	125
[표 4-3] 현 고양시청사 현황 .....	127
[표 4-4] 현 고양시청의 문예회관 개요 .....	128
[표 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법 비교 .....	135
[표 4-6]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	136
[표 4-7] 생활서비스시설의 분석 방법 .....	137
[표 4-8] 고양시 문화시설 평균지표 .....	139
[표 4-9]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평균지표 .....	139
[표 4-10] 고양시 지역주민복지시설 평균지표 .....	140
[표 4-11] 고양시 보건소 평균지표 .....	140
[표 4-12] 고양시 도시공원 평균지표 .....	141
[표 4-13] 고양시 주차장 평균지표 .....	141
[표 4-14] 고양시 도서관 평균지표 .....	142
[표 4-15] 고양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평균지표 .....	143
[표 4-16] 고양시 청소년아동복지시설 평균지표 .....	143
[표 4-17] 고양시 보육시설 평균지표 .....	144
[표 4-18]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평균지표 .....	144
[표 4-19] 생활 SOC 분석 종합 .....	145
[표 4-20] 경기도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46
[표 4-21] 서울특별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47
[표 4-22] 인천광역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48
[표 4-23] 수원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50
[표 4-24] 용인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51
[표 4-25] 성남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	152

[표 4-26] 창원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153
[표 4-27] 부천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154
[표 4-28] 김포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155
[표 4-29] 파주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156
[표 4-30] 양주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157
[표 4-31] 비전 키워드 분석	158
[표 4-32] 목표 키워드 분석	158
[표 4-33] 국내 도시별 비전 및 목표	159
[표 4-34] 런던 LondonPlan의 비전 및 목표·전략	160
[표 4-35] 베를린 STEK의 비전 및 목표·전략	161
[표 4-36] 파리 PLU의 비전 및 목표·전략	162
[표 4-37] 뉴욕 OneNYC의 비전 및 목표·전략	163
[표 4-38] 에든버러 2050 Edinburgh City Vision의 비전 및 목표·전략	164
[표 4-39] 국외 도시 비전 키워드 비교	165
[표 4-40] 국외 목표 키워드 분석	165
[표 4-41] 국외 도시별 비전 및 목표	166
[표 4-42] 5차 국토종합계획	167
[표 4-4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67
[표 4-44] 경기도 종합계획	168
[표 4-45]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168
[표 4-46] 경기도 종합계획 내 고양시 발전 방향	169
[표 4-47] 고양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2030)	170
[표 4-48] 고양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2035)	171
[표 4-49] 고양시 관련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72
[표 4-5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자문단 의견	173
[표 4-51]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175
[표 4-52]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	176



[표 4-5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청직원 설문조사 결과	177
[표 4-54] 시민 의견 키워드 분석	178
[표 4-55]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률	180
[표 4-56] 친환경 건축에 관한 제도 변화	181
[표 4-57] 복합화 방안	183
[표 4-58]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 목표	188
[표 5-1] 공공건축 관련 제도	194
[표 5-2] 광역지자체 공공건축가 현황	196
[표 5-3] 기초지자체 공공건축가 현황	197
[표 5-4]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198
[표 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절차	199
[표 5-6] 설계공모에 필요한 절차	199
[표 5-7] 심사위원회 구성 요소	200
[표 5-8] 설계공모의 종류	202
[표 5-9] 설계지침서 내용(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7조)	203
[표 5-10] 설계지침서 내용	203
[표 5-11] 고양시 신청사 설계공모 방식	208
[표 5-12] 주요 설계공모전 공모방식	208
[표 5-13] 고양시 신청사 작품 제출 도서	209
[표 5-14] 2단계 제출도서 예시	210
[표 5-15] 주요 설계공모전 제출도서	210
[표 5-16] 고양시 신청사 건립비전 및 세부 목표	211
[표 5-17]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212
[표 5-18] 세부지침	213

## 그림 목차

[그림 1-1] 고양시 인구수 변화	3
[그림 1-2] 고양시 공무원수 변화	3
[그림 1-3] 연구의 내용	6
[그림 2-1] 그림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의 구성	13
[그림 2-2] 용인시청사 영역별 면적	13
[그림 2-3] 용인시청사 시민문화지원시설	15
[그림 2-4] 용인시청사 청소년수련관 내 체육시설	16
[그림 2-5] 용인시청사 문화예술원	17
[그림 2-6] 성남시청사 개방시설 및 프로그램	20
[그림 2-7] 성남시청사 영역별 면적	21
[그림 2-8] 성남시청사 의화동 시설(본회의장, Book돋움)	23
[그림 2-9] 성남시청사 개방시설(온누리, 프로그램 주차장, 하늘북카페)	24
[그림 2-10]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30
[그림 2-11] 청주시청사 영역별 면적	31
[그림 2-12] 순천시청사 현황 및 사업 대상지	38
[그림 2-13] 순천시청사 당선작	38
[그림 2-14] 순천시청사 영역별 면적	40
[그림 2-15] 시민참여 디자인단 운영 최종 조감도	45
[그림 2-16] 종로구청사 주변건물 및 기존건물 현위치도	47
[그림 2-17] 종로구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48
[그림 2-18] 종로구청사 영역별 면적	49
[그림 3-1] 그림 갈등전개과정	69
[그림 3-2] 경기도 갈등관리 절차	88
[그림 4-1]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체육관	129
[그림 4-2] 고양시청갤러리600	129

[그림 4-3] 고양시청사 내부 리모델링 전(위)과 후(아래) .....	131
[그림 4-4] 신청사 예정지 토지이용현황 .....	132
[그림 4-5] 신청사 예정지 건축물 용도 .....	133
[그림 4-6] 신청사 예정지 교통 현황 .....	134
[그림 4-7] 고양시 신청사 광역사회 역할 .....	184
[그림 4-8] 고양시 신청사 미래 비전 .....	187
[그림 6-1] 건립비전 도출 과정 .....	221
[그림 6-2] 그림 연구의 종합 .....	222
[그림 6-3] 정책 제언 .....	225



## 요 약

### 1. 연구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 고양시는 인구수가 25만명 이하였던 고양군 시절의 청사를 지금까지 시청사로 이용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법적 기준면적 보다 면적이 부족하여 인근 외부청사 9개소에 산재해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 발생
- 현재 고양시는 인구 108만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2022년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청사 건립 절실
- 이에 고양시는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 건립예정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 9월에 국제설계 공모 진행 예정
- 따라서 공공청사의 건립 비전 수립, 주민참여 방안 도출, 국제 설계공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공공청사의 성공적인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내용 및 방법

- 공공청사 건립 사례 조사를 통해 사례별 공공청사의 기능과 역할, 건립비전 및 목적, 규모와 사업비, 설계공모 방식, 복합화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공공사업 시 갈등유형 및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완화를 위한 공론화 방안 도출
- 고양시 신청사 건립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광역사회 역할, 지역사회 역할,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설정하여 제안
- 설계공모 지침 검토를 위해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의 절차 분석을 통해 일반지침과 설계지침 제안

## 2. 공공청사 건립 사례 조사

### □ 사례 간 비교 및 시사점

- 분석한 공공청사 사례는 모두 행정·대민 업무기능과 의회 업무기능, 시민문화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건립목적과 비전이 있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성, 지역성 강조
- 공공청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감안하여 증감이 가능하며 시민문화공간과 같은 기타 공간에 대한 기준면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설계공모는 크게 일반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로 나뉘며 설계공모의 흥행, 형평성, 신진건축가 참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설계지침서의 작성이 중요
- 공공청사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청사 내에 시민문화기능을 복합화 하거나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복합화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으며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화하여 시민문화기능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해야함

## 3.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 도출

### □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 분석

-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야기 하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발생
- 일반적인 갈등관리 방법으로 협상, 조정, 중재, 진행, 독립적 사실조사 등이 있으며 주민참여 기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 주민참여형 정책구상 및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대안적 해결방식 등으로 다양함
- 공공사업에서 갈등 유형은 국가적 정책결정에 의한 갈등, 지역사업 추진에 의한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사업 추진 중

## □ 공공사업 시 갈등 사례 분석

- 통합창원시 청사 건립 시 창원-마산-진해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시 분리론까지 등장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기습적으로 통과되면서 갈등 완화기제가 작동하지 못함
- 경기도청의 경우 광교신도시 내 이전으로 인해 수원시와 갈등이 시작됐으며 이에 용인시가 유치하려고 했으나 경기도는 기존의 계획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완화기제가 작동하지 못함
- 울산시 울주군청사 건립 시 다수의 군청사 후보지가 접수되어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중재개입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최종부지가 결정되었으나 위원회 구성과정 공개, 위원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부재
- 대구시 신청사의 경우 후보지 간의 경쟁으로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공론화 위원회 구성 후 시민의견조사, 시민원탁회의, 시민설명회, 시민참여단 등의 시민참여과정을 진행하여 갈등완화기제가 작동하였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공정한 공론화 추진 가능

## 4. 신청사 건립 비전 설정

### □ 건축물로서의 역할

-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청사의 개념과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디자인적 측면,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의 세 가지 고려사항 도출
-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등으로 설계공모가 활성화 되었으며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위상을 갖는 디자인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등으로 인해 안전과 친환경은 공공건축물의 필수요소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청사 건립 필요

- 공공청사의 역할은 시대별로 바뀌어 왔으나 그 본질은 행정업무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공공청사의 본질에 맞게 행정업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청사 구현 필요

#### □ 지역사회 역할

- 지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현 시청사와 신청사 예정지의 주변환경 및 생활 SOC 분포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지역 연계, 필요기능 설정 도출
- 현재 공공청사는 행정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복합화하는 추세이므로 고양시와 덕양구, 주교동 일대에 필요한 기능 설정 필요
- 공공청사는 주변 도시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나 청사 이전 시 주변지역과 단절 될 수 있으므로 주변 도시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 필요

#### □ 광역사회 역할

- 광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도시비전 및 목표, 고양시의 도시비전과 시민의견수렴을 분석하여 평화역사, 첨단·자족, 자연·생태, 문화복지, 균형·소통의 다섯가지 키워드 도출
- 고양시는 수도권권의 접경지역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평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경기지역의 발전을 이끌 최첨단 자족도시로서의 상징성 보유
- 한강수계와 인접한 도시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확보 노력을 병행해야함
- 특히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고밀도 주거지와 저밀도 주거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징성 필요



## 5. 국제공모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검토

### □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절차 분석

- 시정의 방향, 신청사의 건립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건축관리자(PA)와 운영위원회를 빠른 시간안에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공공건축관리자를 고양시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관장하도록 고려
- 설계공모의 성패는 심사위원에 달려 있으며 심사위원의 수준은 작품의 수준과 참가유도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므로 연령, 소속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 참신성을 추구해야 함
- 1단계, 2단계 설계공모 등 적절한 설계공모 방식의 선정과 함께 설계 제출도서의 간략화·디지털화를 통해 국제설계공모의 흥행 유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획설계를 통해 고양시 신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다양하게 제시 고려

### □ 신청사 기본설계지침(안) 제안

- 최근에 진행된 국제설계공모의 경우 심사를 포함하여 2단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설계공모의 흥행과 고양시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2단계 + 지명방식을 제안
-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후 2차 제출도서에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설계도면 제출 제안
- 건립비전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사회에 열려 있는, 지속 가능한 신청사로 제안하였으며 세부목표로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청사,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스마트 청사로 제시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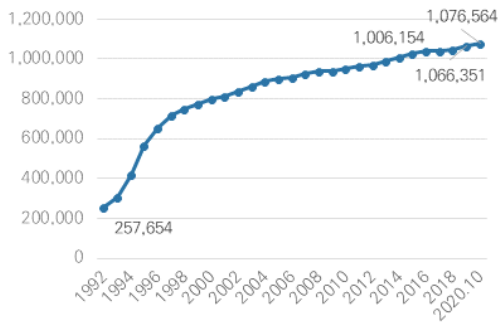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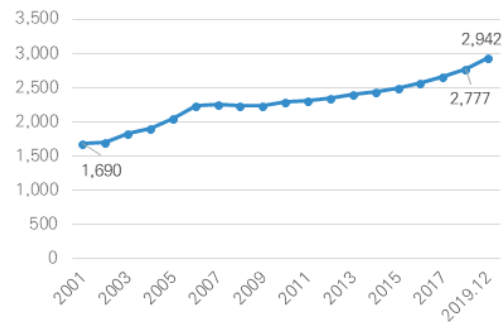
### 1. 연구의 배경

현재 고양시는 인구수가 25만명 이하였던 37년 전 고양군 시절의 청사를 지금까지 시청사로 이용하고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2000년 안전등급 D등급을 부여받아 매년 보수공사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제1기 신도시 개발 이후 급격한 발전을 통해 2014년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 면적 보다 부족하며 이로 인해 인근 외부청사 총 9개소에 산재해 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 비효율성 및 대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임차비용 발생(연 6~7억원) 등 많은 문제점의 노출로 위상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현 시청이 위치한 원당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인프라 구축이 미진한 지역으로 고양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신청사 건립 시 새로운 도심기능에 준하는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그림 1-1] 고양시 인구수 변화



[그림 1-2] 고양시 공무원수 변화



[표 1-1] 고양시청사 연면적 및 법적 기준면적 비교현황

구분		법적 기준면적(A)	현 연면적(B)	비고
본청	본관	사군 및 자치구 본청청사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사군 및 자치구 의회청사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합계 : 28,916㎡	6,534㎡	지하시설, 주민편의시설, 상황실, 사용수약허가시설 등 제외 가능시설까지 포함하면 부족면적 7,482㎡ 보다 더 증가 할 수 있음
본청+의회청사	신관		8,255㎡	
외부분청	제1별관		5,760㎡	
	제2별관		884㎡	
합계		28,916㎡	21,433.34㎡	-7,482.66㎡(B-A)

이에 고양시에서는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 2019년~2020년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주교제1 공영주차장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에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후 투자 심사를 거쳐 2021년 9월에 고양시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1-2] 사업추진경위

연혁	주요내용
2018.04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준공('18.12)
2019.04	• 신청사 건립 기금 확보(제1회 추경 - 500억원)
2019.06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시행
2019.08	• 제1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2019.10	• 제2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드론 현장 확인 및 후보지 배점관련)
2019.11	• 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20~2024년 고양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2019.12	• 제3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후보지 배점) • 신청사 건립 기금 추가 확보(2020년 본예산 - 500억원)
2020.01	• 제4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시정연구원 발표)
2020.02	• 제5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2020.03	• 제6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후보지 선정방법) • 제7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대곡역 논의)
2020.04	• 제8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후보지 심층 논의) •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 실시 (04.16~04.18.) •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0.04~2021.02)
2020.05	•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신청사 입지 후보지 확정- 주교제1공영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추진일정 : 타당성조사/투자심사('20.08~'21.07) → 신청사 투자심사 통과('21.09) → 신청사 국제설계 공모 ('21.09~'22.02) → 기본 및 시설계('22.02~'23.08) → 착공('23.03년) → 준공('25.10)</li> </ul>	

## 2. 연구의 목적

공공청사는 기존 행정중심의 이용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시설, 문화예술원, 문화체육공간 등의 복합화로 시민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청사의 공공청사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광역사회의 상징적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찰하고 고양신청사의 전체적인 건립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사 입지과정에서 일부 주민 갈등이 표출되었다. 현 시청이 소재한 원당지역 또는 대곡지역으로 이전 논의가 지속되면서 고양시청 원당 준치 추진위원회 등의 시위가 진행되었고 현 시청사와 인접한 주교제1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됐으나 앞으로의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설계공모를 위해 관련된 제도 및 가이드라인, 설계 공모 사례의 설계지침서 및 관련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공공청사 건립 사례 분석, 고양시 신청사 비전 설정, 설계 공모 지침 검토의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사례별 공공청사의 개요, 연혁, 기능과 역할 등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건립비전 및 목적, 규모와 사업비, 설계 공모 방식, 복합화 등에 대하여 사례 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사업 시 갈등유형 및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완화를 위한 공론화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광역사회 역할, 지역사회 역할, 건축물로서의 역할로 구분하고 광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의 비전 및 목표, 고양시의 도시비전과 시민의견수렴을 분석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주변환경 및 생활 SOC를 분석하였으며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청사의 개념과 흐름,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지침 검토를 위해 현재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의 절차를 분석하였으며 일반지침과 설계지침으로 나누어 각각 제안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내용

<p>공공청사 건립 사례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별 공공청사의개요, 연혁, 기능과 역할 등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건립비전 및 목적, 규모와 사업비, 설계 공모 방식, 복합화 등에 대하여 사례 간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li> <li>▪ 공공사업 시 갈등유형 및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갈등 완화를 위한 공론화 등을 제안</li> </ul>
<p>고양시 신청사 비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국내외 비전 및 목표, 고양시의 도시비전과 시민의견수렴을 분석하여 키워드 도출</li> <li>▪ 지역사회 역할: 주변환경 및 생활 SOC 분석</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청사의 개념과 흐름,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 및 역할 분석</li> </ul>
<p>설계공모 지침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의 절차 분석</li> <li>▪ 일반지침과 설계지침으로 나누어 제안</li> </ul>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청사 건립 시 비전과 기능, 역할의 시사점 및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고양시 신청사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고양시 신청사는 광역 및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넷째, 고양시 신청사는 주변지역과 자연환경, 기존 청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다섯째, 향후 설계공모 지침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로 설정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공청사의 흐름 및 개념에 대한 이론고찰을 통해 시대별 공공청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시 갈등 관리와 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공공청사의 건립이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 사례와 공공사업시 갈등유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청사 예정지의 현장조사와 주변환경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고양시 신청사의 건립 비전을 수립하였다. 각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신뢰성을 높였다.

[표 1-3] 연구의 방법

구분		내용
이론고찰	공공청사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사의 법적 정의 및 규모</li> <li>시대별 청사 관련 논의 변천</li> </ul>
	갈등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갈등의 정의, 형태 및 전개 과정</li> <li>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 유형</li> </ul>
사례조사	공공청사 건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공공청사 건립 배경 및 연혁</li> <li>목적과 비전, 기능과 역할 등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li> </ul>
	갈등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 및 전개 과정</li> <li>특히 공공청사 등 펌비 시설에서의 갈등 전개과정 및 주요 이슈 분석</li> </ul>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환경 분석</li> <li>대장천 등 자연환경 및 교통시설의 변화 분석</li> </ul>
관련계획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도시비전 비교 분석</li> <li>고양 도시기본계획, 장기종합발전계획,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시 시민의견 분석</li> </ul>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청사, 공공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li> <li>설계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li> </ul>



## 제 2 장

# 공공청사 건립 사례 조사

제1절 설계공모 이전 건립 사례 조사

제2절 설계공모 건립 사례 조사

제3절 사례 간 비교 및 시사점




## 제절 설계 공모 이전 건립 사례 조사

### 1. 용인시청사

#### 1) 건립 배경

용인시 시청사 건립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시설 확충의 필요성, 기존시설의 노후와 업무공간 부족 해소의 시급성,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화복지 시설 확충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청사건설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주민공청회와 같은 주민참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수요 예측을 미흡하게 하고 기준을 초과한 설계를 진행하여 과대청사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sup>1)</sup>.

[표 2-1] 용인시청사 개요

연도	2005년		
위치	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규모	대지면적		81,849㎡
	건축면적		14,596㎡
	연면적		76,214㎡
	건폐율		17.83%
	용적률		58.24%
주차규모	법정: 468면		<자료> 한일엠이씨
	수요: 574면 (법정대비 122.6%) 계획: 978면(지상 438면, 지하 540면)		
건물규모	본청사: 지하 2층~지상 16층		
	의회청사: 지하 1층~지상 5층		
	보건소: 지하 1층~지상 3층		
	복지센터: 지하 1층~지상 5층		
	문화예술원: 지하 2층~지상 3층		

<자료> 용인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2016.

1) “의회청사, ‘국민의 눈’ 무서운 줄 모른다”, 주간경향, 2009.12.15., 2020.09.23. 접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0912101358111>

## 2) 주요 연혁

용인시는 1996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시설 공고 및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 2001년에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 이후 공사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하였고 시청·의회청사는 2002년부터 착공을 하였으며 복지센터·보건소·문화예술원은 2003년부터 단계별로 착공하였다. 2005년 6월에 모든 시설의 준공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이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부지매입을 하였고 우체국, 세무서, 교육청 등이 이전하였다.

[표 2-2] 용인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연혁	주요 내용
1996.03.~1996.12.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기본계획 수립
1997.03.	도시계획시설 공고
2001.09.	중앙투융자심사신청
2001.12.	착공(부지조성공사)
2002.04.	도시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
2002.06.~2002.12.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2002.07.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
2002.10.	감사원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설계완료
2005.06.	준공

〈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 연구소, 지자체 청사 건설사례, 2008.

## 3) 목적과 비전

용인시청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과 지역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청사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예술원을 함께 도입하여 용인시의 문화, 복지,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더하여 다양한 시설의 종합적인 건설로 관련 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2)</sup>. 그리고 현재는 민선 6기 시정 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위해 시청사를 개방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 김중겸·제갈성, [프로젝트 리포트]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2005, 대한건축학회.

[그림 2-1]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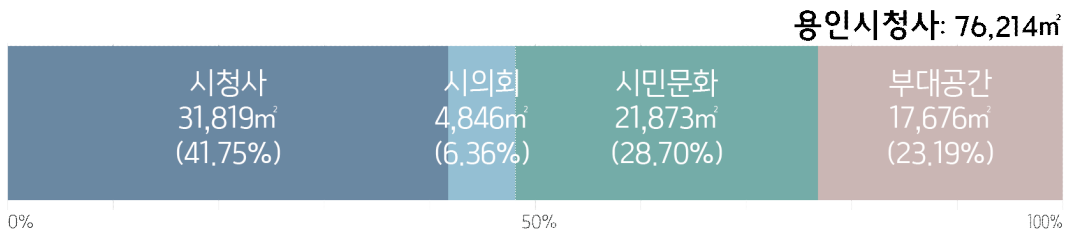


<자료> 용인시청

#### 4) 기능과 역할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크게 공공업무시설과 문화복지시설로 구분된다. 공공업무시설은 본청사와 의회청사로 구성되며 문화복지시설은 보건소와 복지센터, 문화예술원으로 구성되어 행정·대민 및 의회 업무공간과 시민문화공간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각 시설의 중심에 데크로 된 광장을 배치하여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지도록 계획되었다(강은진, 2014). 영역별 면적을 보자면, 행정·대민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청사의 경우 전체 연면적의 41.7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시의회는 6.36%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시민문화공간의 경우 28.7%로 다른 공공청사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용인시청사 영역별 면적



<자료> 용인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2016.

### (1) 행정·대민업무

행정·대민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본청사는 크게 업무공간과 부속업무공간, 기타공간, 공용공간,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공간(10,629㎡)은 시장실, 국장실, 각 과별 사무시설 등으로 본청사 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33.40%를 차지한다. 또한 부속 업무공간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3,720㎡로 전체 면적의 11.69%이다. 용인시청사의 경우 본청사 건물 외에 문화예술원이나 복지센터가 있어서 저층부의 일부 시설 외에는 행정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표 2-3] 용인시청사 본청사 층별 현황

본청사 (38,704㎡)	16층	복합심의회, 파트너스 룸
	15층	직원 레스토랑
	4층~14층	행정업무시설
	3층	행정업무시설, 에이스홀, 컨벤션홀, 브리핑룸 등
	2층	행정업무시설, 어린이집, 경기도의회상당실 등
	1층	행정업무시설, 민원여권과, 무한돌봄센터, 전시실 등
	지하 1층	드림스타트센터, 자원봉사센터, 종합문서고, 참전용사기념전시실, 지하주차장 등
	지하 2층	지하주차장, 전산교육장, 창고 등

〈자료〉 용인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2016.

### (2) 의회업무

의회업무가 이루어지는 의회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의 규모로 행정문화복지타운 전체 연면적의 6.77%에 해당한다. 본청사와 기단부를 분절하여 독립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본회의실(417㎡)과 업무 및 의원실(1,817㎡), 부속공간(893㎡)과 공용공간(1,719㎡)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민개방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4] 용인시청사 의회청사 층별 현황

의회청사 (6,376㎡)	4층~5층	본회의장, 방송실, 의회업무시설 등
	3층~지하층	의회업무시설, 지하주차장

〈자료〉 용인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2016.

### (3) 시민문화지원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시민문화를 지원하는 공간은 본청사와 문화예술원에 분포되어 있다. 본청사 건물에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에 시민문화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하층에 시민전산교육



장과 참전용사 전시실이 있으며, 1층에는 행정역사 전시실이 있어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3층에는 시민예식장과 공연장인 컨벤션홀과 에이스홀을 두었으며 15층엔 예식 시 피로연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구내식당이 있다. 또한 본청사 앞 7,697㎡ 규모의 1층 광장을 2015년부터 개방하여 공공목적에 위한 각종 단체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3] 용인시청사 시민문화지원시설



<자료> 좌: “용인시 시민예식장에서의 품격있는 작은 결혼식”, 용인시공식블로그, 2018.11.15., 2020.09.23. 접속, <https://blog.naver.com/govirodtnr/221398907123>.

우: “용인시청 광장 ‘사계절 잔디공원’으로 변신...시민의 품으로”, 아시아투데이, 2016.08.03., 2020.09.23. 접속, [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3010001444](http://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3010001444).

#### (4) 문화복지의 거점

문화복지행정타운의 보건소와 복지센터, 문화예술원은 용인시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는 4,982㎡의 규모로 용인시의회 건물과 인접하여 있으며 예방접종, 운동처방, 종합검진, 물리치료, 보건교육, 금연상담 등이 가능하다. 복지센터 내 청소년 수련관에는 실내수영장과 스쿼시장, 헬스장 등의 체육관 및 부대체육시설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게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시니어 시민을 위한 기초건강검진실, 바둑·장기실, 물리치료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담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약 286석인 마루홀과 전시실, 공연예술실,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사무실 등이 있어 다양한 공연·전시·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4] 용인시청사 청소년수련관 내 체육시설



<자료> 용인시청사청소년수련관

[표 2-5] 용인시청사 문화복지시설 현황

보건소 (4,982㎡)		3층	사무실, 상담실, 소장실, 소회의실, 금연상담실, 임산부 영유아 교육실
		2층	한방진료실, 종합검진센터, 한방허브 아로마 치료실, 보건교육실, 영양조리실, 영양정보실, 운동처방실
		1층	접수/안내, 예방접종실, 치과실, 구강보건실, 소아놀이실, 모유수유실, 모자보건실, 심전도실, 임상병리실, 보건관리실, 진료실, 촬영실, 촬영실
		지하층	주차장, 이동진료실, 목욕치료실, 정신보건센터, 세탁실, 창고
복지 센터 (11,960㎡)	청소년 수련관 (6,462㎡)	4층	배움터, 컴퓨터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3층	체육관, 선수대기실, 재단사무국, 상임이사실, 수련관사무실
		2층	헬스장, 에어로빅
		1층	스쿼시, 댄스연습실
	지하층	주차장, 수영장	
	노인 복지 회관 (4,825㎡)	3층	노인회사무실(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노인취업지원센터, 대강당, 경로식당, 사회교육실, 컴퓨터실, 서예실, 자원봉사자실
		2층	복지관사무실,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진료실, 건강정보실,아미용실, 쉼터
1층		장기, 바둑실, 수위실, 숙직실, 통신실, 임시탁아시설, 실외놀이터	
기타시설(673㎡)			전기실, 기계실
문화 예술원 (4,931㎡)	4층	동시통역실	
	3층	마루홀, 국제회의장, 용인문화원, 무대예술팀 등	
	2층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	
	1층	공연기획팀, 시립예술단사무국, 시립예술단사무실, 디지털정보도서관, 공연준비실, 연습실, 예술감독실, 제작실, 전시홀 등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지하주차장(9,261㎡)			주차장

<자료> 용인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2016.

[그림 2-5] 용인시청사 문화예술원



<자료> 용인문화재단

## 5) 이슈 및 시사점

### (1) 이슈: 규모·예산 논란

용인시청사의 경우, 개청 당시 70만명의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974억원 투입과 전체 대지면적 236,449㎡, 사업대지면적 81,849㎡으로 호화청사 비판이 제기되면서 ‘용인궁’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통보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건축연면적 및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지시하였으나, 용인시는 시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공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sup>3)</sup>.

이에 용인시는 인구증가추세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1996년 이후 인구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는 9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모의 청사를 짓고자 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청과 의회 건물만 있는 시청사가 아닌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를 위한 보건소와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행정건물로 타 지자체의 청사와 비교해서 대규모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sup>4)</sup>.

완공 후,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며 용인시의 랜드마크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 또한 용인시가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같이, 2017년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현재는 인구 109만명의 대도

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 연구소, 지자체 청사 건설사례, 2008.

4) “용인시 새청사 당치 시비”, 서울신문, 2005.07.14., 2020.10.05.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0715202001>

시가 되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1300명에서 29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조직도 1실5국21과에서 2실6국49과로 크게 늘어나 과거 대규모 논란과 달리 업무공간의 부족을 겪고 시청사 밖의 인근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쓰는 부서도 있는 상황이다<sup>5)</sup>.

## (2) 시사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입지선정과 문화·복지·행정 시설의 복합화

용인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유입된 인구에 의해 급격히 성장한 도시로 유사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복지 시설의 낙후된 정도가 심하였다. 그에 반해 시민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고 재정자립도도 높아 용인시는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하였다(유성현, 2006). 그리고 급속개발지역과 개발지연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중앙 지점에 위치한 용인시청사 부지(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문화와 복지, 행정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에는 공공업무시설 외에도 문화복지시설, 유관공공기관,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용인시청사는 공공청사의 복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시점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화를 하여 최초의 행정타운을 건립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자연과 역사를 가진 구도심과 최근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신도심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채 성장해가고 있는 용인시는 부족한 행정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는 두 도심간의 불균형과 지역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는 새로운 복합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시청사의 주광장으로서 다목적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영역과 자연의 유입으로 치유와 휴식의 성격을 지닌 복지영역, 또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가 가능하며 많은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영역으로 대지를 구분하였고 각 영역의 중심에 데크광장을 구성하여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융화되도록 하였다.

-공간건축,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작품 설명

---


5) “용인시청사 ‘호화청사는 옛날’”, 경향신문, 2019.04.02., 2020.10.05.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22045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22045005)

## 2. 성남시청사

### 1) 건립 배경

1983년 건립된 성남시의 구청사는 인구 규모 3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진 청사로, 1990년대 분당구 신설과 2000년대 판교·도촌동 개발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과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행정조직이 외부 5개소에 분산되어 있어 직원과 시민 모두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다. 더하여 구시가지와 분당, 판교 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의 행정편의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도시의 광역화에 대비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표 2-6] 성남시청사 개요

연도	2009년	 <p>〈자료〉 성남시청</p>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일원		
규모	대지면적		74,327.4㎡
	연면적		75,611.8㎡
	건폐율		16.55%
	용적률		67.02%
	주차규모		1,108면(지상 476면, 지하 632면)
건물규모	청사동: 지하 2층~지상 9층 의회동: 지하 2층~지상 6층		

〈자료〉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성남시 의회·구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원가계산보고서, 2015.

### 2) 주요 연혁

성남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1년에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성남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2005년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부지매입과 설계 단계를 거쳐 2007년에 착공을 하였다. 이후 2년 만에 준공을 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이전하였다.

[표 2-기] 성남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연혁	주요 내용
1991.0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공청회 개최
2003.03.	성남-여수등 공공용지 매입 추진계획 보고
2003.0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승인
2004.06.	협의 보상
2005.02.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2005.07.	주민설문조사
2006.1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지매입)
2007.04.	건설사업관리계약
2007.09.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조달청)
2007.11.	착공
2008.03.	실시설계도서 제출
2009.10.	준공

<자료> “성남시청사 및 의회 건설지”, 건설지(건립백서), 2016.03.08., 2020.09.23. 접속, <https://blog.naver.com/doallcpswb/220648795396>

### 3) 목적과 비전

성남시는 ‘시민중심의 시청사’를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다. 개방형 청사로 최적의 대민 행정서비스와 문화 공간,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한 녹색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최첨단 전산시스템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009년 완공이 된 후, 현재는 ‘시민이 함께하는 청사’, ‘언제나 가까이하고 싶은 청사’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여러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그림 2-6] 성남시청사 개방시설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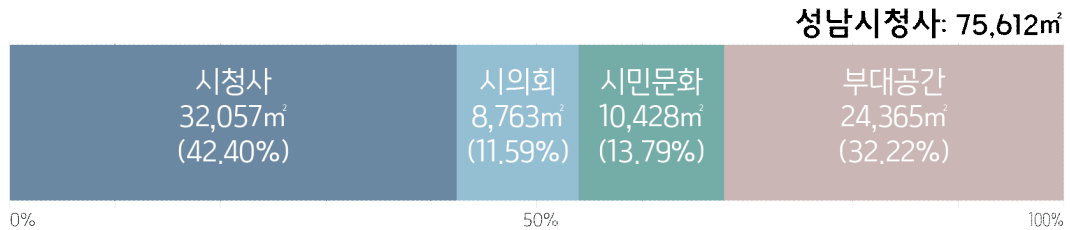
<자료> 좌: “성남시청 하늘복카페 인기 ”북강스 족“ 하루 400명 찾아”, 성남비전, 2019.08.14., 2020.09.23. 접속, <http://snvision.seongnam.go.kr/10622>

우 “성남시민 개방 시설 인터넷 예약 68개로 확대”, 성남비전, 2015.11.25, 2020.09.23. 접속, <http://snvision.seongnam.go.kr/4863>

#### 4) 기능과 역할

성남시청사는 크게 청사동(연면적 63,609.72㎡)과 의회동(연면적 12,002.17㎡)으로 구분되며 청사동은 아트리움을 기준으로 서관과 동관으로 구분된다. 시청사 로비의 역할을 하는 저층부 아트리움은 3층 높이까지 개방되어 있고, 고층부 아트리움은 4층부터 9층까지 개방되어 있다. 영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시청사가 42.40%, 시의회가 11.59%, 시민문화공간이 13.79%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20년 현재 성남시청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성남시청사 영역별 면적



<자료>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성남시의회구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원가계산보고서, 2015.; 성남시청

##### (1) 행정·대민업무

행정업무시설은 청사동의 1층부터 9층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각 층마다 민원인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시민이 서비스를 받고 쉴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과 관련된 종합민원실이나 민원안내실, 민원여권과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장실의 경우, 건립 당시 9층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민선5기에 2층 작은 도서관의 자리로 옮기고 개방하여 시민과 가까운 시장의 이미지를 주었다. 그리고 4층부터 9층까지 분포되어 있는 행정업무시설의 경우, 공원과 녹지와 생태하천과나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관련 부서끼리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다.

[표 2-8] 성남시청사 청사동 층별 현황

9층(2,649.18㎡)	성남시육아지원센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시민옴브즈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8층(5,324.92㎡)	재난안전관실, 도시정보통합센터,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감사관실, 정보누리실, 상권지원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등

7층(4,890.70㎡)	노인복지과,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회계과, 결산검사실, 세원관리과, 세정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등
6층(4,922.84㎡)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5층(5,405.43㎡)	환경보건국장실,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시설공사과, 도시정비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물관리정책과, 식품안전과 등
4층(5,606.19㎡)	도시균형발전과, 종합서고, 행정자료실, 체력단련실, 공보관실, 취재지원실, 교통기획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등
3층(4,070.54㎡)	구내식당, 구내매점, 산성누리, 탄천관, 모란관, 울동관, 한누리실
2층(3,330.94㎡)	시장실, 성남일자리센터, 성남시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종합홍보관(하늘극장) 등
1층(6,283.42㎡)	종합민원실, 민원여권과, 장애인복지과, 소비자정보센터, 민원안내 등
지하 1층(9,898.55㎡)	지하주차장, 중앙통제실
지하 2층(11,227.01㎡)	지하주차장, 기계실

〈자료〉 성남시청

## (2) 의회업무

성남시 의회동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시설로 청사동과 구분되어 있다. 2층~3층 규모의 본회의장이 있으며 의원실이 있는 층에는 민원상담실을 함께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의회자료실 및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Book돋움과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이 있다. 그리고 의회동 1층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시설 사용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9] 성남시청사 의회동 층별 현황

6층 (1,424.12㎡)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옥상정원, 체력단련실, 민원상담실
5층 (1,557.50㎡)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옥상정원, 민원상담실
4층 (1,672.56㎡)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옥상정원, 민원상담실
3층 (1,656.95㎡)	사무국장실, 의회사무국, Book돋움, 방청석, 속기사실, 사진실
2층 (1,329.06㎡)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대표의원실
1층 (1,122.50㎡)	홍보관, 안내,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 성남시의회



[그림 2-8] 성남시청사 의회동 시설(본회의장, Book돋움)



<자료> 좌: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성남비전, 2012.03.26., 2020.09.23. 접속,  
<http://snvision.seongnam.go.kr/2060>.

우: “「성남시의회, “BOOK 돋움” 도서관 개관식」가져”, 성남비전, 2018.03.21., 2020.09.23. 접속,  
<http://www.seongnamvision.com/10615>.

### (3) 시민문화지원

성남시청사의 시민문화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은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에게 개방된 시설 중 실내공간은 10,427.54㎡이고 실외공간은 62,157㎡으로 총 72,584.54㎡의 공간이 열려있다. 즉, 청사동 전체 면적(63,609.72㎡)에서 개방시설의 면적은 16.39%를 차지하며,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실사용 면적(29,750㎡)에서 개방시설의 면적은 35.05%이다.

먼저 실내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1층에는 600석 규모(1,259.42㎡)의 대강당인 온누리과 야외전시가 가능한 로비인 누리홀(2,037㎡)이 있다. 또한 문화강좌실(183.68㎡)도 2층에 있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층에는 식당과 상점이 로비와 연계되어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더하여 9층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른열람실, 어린이방, 집중공부방, 담소방 등 영역을 나누어 구성한 하늘북카페(887.47㎡)가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건립 당시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지은 체력단련실과 여성휴게실도 2010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외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이나 전시장, 바자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차장과 여가와 휴식 공간인 음악·바닥분수, 각종 휴식시설이 있다. 또한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마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

[표 2-10] 성남시청사 개방시설 현황

실내	9층	하늘북카페(887.47㎡)
	8층	민원휴게공간(53.46㎡)
	7층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6층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5층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실내정원(515.32㎡, 2개소)
	4층	민원휴게공간(136.14㎡, 2개소), 실내정원(165.19㎡)
	3층	식당(1,299.67㎡), 한누리(493.41㎡, 264석), 산성누리(232.14㎡, 73석), 탄천관(119.39㎡, 33석), 모란관(121㎡, 33석), 울동관(120㎡, 33석), 연금매점(158.02㎡), 민원휴게공간(106.92㎡, 2개소)
	2층	종합홍보관(818.39㎡), 문화강좌실(183.68㎡), 취업/소비자 정보센터(93.27㎡), 여성휴게실(168.17㎡), 민원휴게공간(106.92㎡)
	1층	종합여권민원실(662.54㎡), 은행(302.08㎡), 공중화장실(67.18㎡), 온누리(1,259.42㎡, 600석), 누리홀(2,037㎡)
실외	신청사 부지	프로그램 주차장(3,248㎡), 음악분수(3,938㎡), 바닥분수(170㎡), 생태연못, 숲숨마당, 문화의 거리, 주차장, 각종 휴식시설
	근린 공원	생태연못(1,424㎡), 벽천, 다목적 구장(897㎡), 배드민턴장(448㎡), 테마공원 및 각종 휴식시설

<자료> 성남시청

[그림 2-9] 성남시청사 개방시설(온누리, 프로그램 주차장, 하늘북카페)



<자료> 성남시청

#### (4) 친환경·최첨단 건축물

성남시 시청사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하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신 기술인 신재생 에너지와 최첨단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였다. 이때 시청사 설계과정에서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에너지 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였다<sup>6)</sup>.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시스템, 우수 재활용 처리시설, 조명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였다. 또한 주차관제유도 시스템, 음악분수 등으로 시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이슈 및 시사점

##### (1) 이슈: 규모·예산 논란

성남시 시청사는 건립 당시 규모 및 예산과 관련하여 호화 논란을 빚었다<sup>7)</sup>. 시청사 건립 예산이 3,222억원으로 2000년 이후 지어졌던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에 가장 예산 규모가 컸다. 특히 호화논란을 빚었던 용인시청이 1,97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248억원이나 더 많은 예산 규모였다. 더하여 용인시의 경우 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시청사 및 시의회 뿐만 아니라 보건소, 복지회관 등 다양한 시설 신축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었던 것에 비해 성남시는 시청사와 시의회 건립만이 포함된 예산이라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성남시는 인구와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될 것을 고려한 규모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과거 청사에서 공무원 1인당 면적이 6.7m<sup>2</sup>였던 것에 비해 1.5m<sup>2</sup> 정도가 넓어진 것 뿐이며, 대민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업무공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다<sup>8)</sup>. 이후 완공이 되고 난 후, 성남시청사는 과거 호화 논란과 달리 시민들에게 북카페, 체력단련실, 공연장, 야외결혼식장 등 다양한 공간을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sup>9)</sup>.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방청사 건설실태, 2010

7) “3222억, 성남시 ‘호화 시청사’”, 조선일보, 2008.10.23., 2020.09.23.접속,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00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0059.html)

8) “‘성남시청사 ‘호화’ 아니라니까’...1월 중 밝혀질 듯”, 뉴스한국, 2010.01.12., 2020.10.05. 접속,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112204914n5213](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112204914n5213).

9) “‘호화청사’ 아닙니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성남시청”, SBS 뉴스, 2017.06.02., 2020.10.05. 접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2762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27624).

## (2) 이슈: 에너지 효율 논란

2008년 이후,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이 이슈가 되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성남시청은 친환경·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청사를 건립하였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환경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검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은 받지 못하였다. 이는 현대적인 랜드마크 이미지 구현을 위해 외벽을 유리로 덮은 올글래스 커튼월 구조로 시공하였기 때문이다<sup>10)</sup>. 유리 외벽은 겨울에는 단열벽체보다 열손실이 커 난방효과가 적고, 여름에는 복사열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냉방효과가 적다. 이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태양광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었다. 또한 청사 내에서도 사무실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14℃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찜통-냉동 청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sup>11)</sup>.

성남시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외벽 단열재,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공조 설비 등의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로 생긴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단열재가 포함된 백 패널과 환기창 설치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하였다<sup>12)</sup>.

## (3) 시사점: 개방시설의 순차적인 증가

성남시청사는 완공 이후 열린 청사 운영정책으로 시민 개방시설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완공 당시에는 각 층별 민원휴게공간과 실내정원, 식당, 종합홍보관, 문화강좌실, 대강당 등이 개방시설로 계획되었다. 이후, 가장 높은 층에 447㎡의 면적을 차지한 이유로 ‘아방궁’이라는 오명을 샀던 9층 시장실을 2층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옮기고 기존의 시장실은 시민을 위한 북카페로 조성하였다<sup>13)</sup>. 또한 직원복리후생시설로 계획한 체력단련실

10) “‘찜통청사’ 성남시청이 친환경 건물?”, 그린포스트코리아, 2011.9.20., 2020.10.05. 접속,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

11) “성남시청 냉동청사... 화려한 외양 불구 에너지 효율 낮춰 찜통논란 이어 또”, 경인일보, 2011.11.21., 2020.10.05. 접속, <http://m.kyeongin.com/view.php?key=618470>.

12) “에너지효율 ‘낙제’...성남시 시설개선 나섰다”, 조선일보, 2010.11.17., 2020.10.05. 접속,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2211.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2211.html)

과 여성휴게실 또한 개방하였다. 체력단련실의 경우 공무원이 이용하지 않는 근무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고 여성휴게실은 아예 시민 전용 시설로 전환하여 개방하였다. 종합홍보관은 관내 66개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우리고장 성남’의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3년 기준 연간 70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시청사는 개청 당시 논란과 달리 순차적으로 개방시설을 확대했다. 그 결과 실사용면적 중 개방시설의 면적이 35.05%로 높아졌으며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13만 759명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성남시청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연한 공간의 활용과 시민 공간의 확대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13) “‘아방궁’ 성남시청 시장실이 달라졌어요”, 연합뉴스, 2010.06.28., 2020.10.08.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0062807200061>.

14) “성남시청사 개방 연간 100만명 다녀가”, 중앙일보, 2014.04.11., 2020.10.08. 접속, <https://news.joins.com/article/14418961>.

## 제2절 설계공모 건립 사례 조사

### 1. 청주시청사

#### 1) 건립 배경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자율형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었고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업무공간 때문에 본관동, 후관동, 별관동 등으로 부서가 나누어 배치되어있다. 이로 인해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비효율적인 분산배치로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질이 저하되었고 시민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협소한 지상주차장 이외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불편과 교통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2단계의 국제설계공모 심사를 마친 상태이다.

[표 2-11] 청주시청사 개요(예정)

연도	2025년 완공 예정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규모	대지면적	28,459㎡
	연면적	55,500㎡
	건폐율	80%(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000%
	주차규모	지하주차장 규모 24,000㎡, 800면 이상
	건물규모	지하 2층~지상 7층 (예정)

〈자료〉 청주시,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단계 지침서, 2020.

#### 2) 주요 연혁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보상협의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의를 진행하여 2020년부터는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설계공모는 2단계 설계공모와 지명설계공모 방식을 혼용하여서 진행하였다. 1단계 국제설계공모는 공개공모로 국내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당선자 5팀을 선정하였다. 2단계 국제설계공모는 지명설계 공모로 1단계 당선자 5팀과 지명초청건축가 3팀을 포함한 8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국제설계공모 최종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표 2-12] 청주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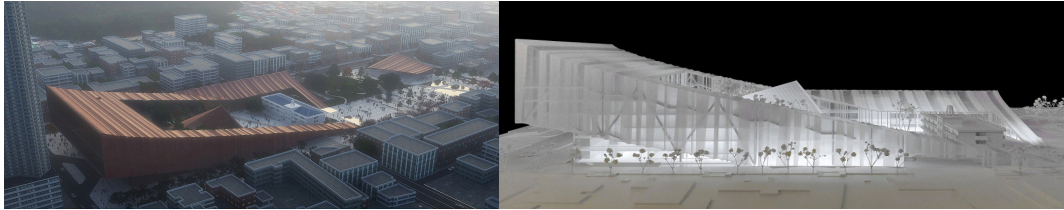
연혁	주요 내용
2013.06.	시청사 부지 선정(현 시청사 일원)
2014.10.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2015.05.	청사건립기금조례 제정,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2015.07.~2015.12.	청사건립방식 결정(신축, 리모델링)
2016.06	지방재정투자심사
2016.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2016.11.	보상계획 공고
2017.03.	시청사 건립 시한제한 아이디어 공모
2017.04.~2019.01.	보상협의 및 재감정평가 보상금액 확정
2018.10.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2019.01.	타당성조사
2019.08.	지방재정투자심사
2020.01.~2020.07.	국제설계공모(1, 2단계)
2021.	설계용역(예정)
2022.	공사착공(예정)
2025.	공사준공(예정)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9

### 3) 목적과 비전

청주시는 앞선 문제점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취득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국제설계공모 1단계를 진행하였다. 이때, 설계의 기본목표는 통합시청사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청사의 개방성, 업무공간의 혁신 및 효율화, 시민의 접근성 용이, 기존 본관동 활용방안 제시이다. 또한 획일화된 공공청사의 모습에서 탈피한 창의성, 청주시 랜드마크로서의 예술성,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으로서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것도 강조하였다. 국제설계공모 결과, 2단계 국제지명초청 공모에서 초청된 해외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그림 2-10]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자료> 좌: “Cheongju New City Hall”, 스노헤타 홈페이지, 2020.09.22.접속, <https://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  
 우: “미래 청주시청사 이렇게 짓는다”, 충청리뷰, 2020.07.22.,2020.09.22.접속, [areviewok.com/revs/articleNew.html?dno=27328](http://areviewok.com/revs/articleNew.html?dno=27328)

[표 2-13]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층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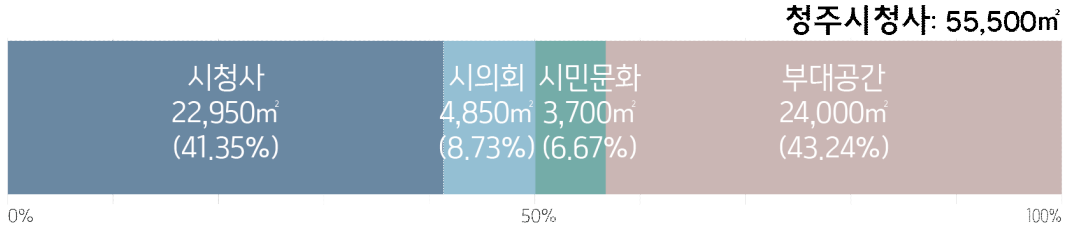
7층		
6층	시장실, 기획행정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프레스 센터 등	
5층		
4층		
3층		
2층		
1층	의장실, 회의실, 세미나실, 브리핑실 등	우체국, 전시장, 기념품 가게, 강당, 회의실 등
지하층	주차장	

#### 4) 기능과 역할

설계지침서에 따르면 실내공간 중 행정·대민 업무를 지원하는 시청사의 영역(41.35%)과 지하주차장인 부대공간 영역(43.24%)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에 반해 시의회와 시민문화 영역은 각각 8.73%와 6.67%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자율적 행정통합을 이뤄낸 청주시의 정체성을 디자인에 담고 공공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설계되었다. 설계지침서와 당선작을 기반으로 청주시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청주시청사 영역별 면적



<자료> 청주시,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단계 지침서, 2020.


(1) 행정·대민업무

청주시 현청사는 기존 건물의 부족한 업무공간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행정조직을 배치하여 업무 협력 및 소통,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청사의 건립 비전 중 하나로 업무공간의 혁신 및 효율화를 설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였다.

행정·대민업무공간에 있어서 가변성과 연계성, 동선의 분리 및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가변성과 관련하여, 차후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수직 증축을 고려하고 고정벽과 가변벽을 분리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시설 및 영역은 연계하며 지원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되, 주민편의공간과의 동선 분리를 명확하게 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표 2-14] 청주시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사 건축연면적: 21,890m<sup>2</sup></li> <li>• 시청사 포함 시설: 7개 국(36개 과), 3개 본부(10개 과)</li> </ul>	
<p>5.2.8. 시청사의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배치 및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5.2.10. 신청사 계획에 있어 차후 업무환경변화로 시청사의 수평이나 수직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p> <p>5.5.1. 업무공간과 주민편의공간의 명쾌한 동선 분리를 통해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p> <p>5.5.6. 기존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사무공간에서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공간 혁신 가이드라인(행안부)을 참고한다.</p>	<p>&lt;자료&gt;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스노헤타’</p>

<p>5.6.1. 업무공간, 의회공간, 주민편의공간 등 다른 성격의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개방성이 높고 공유 가능한 실들을 집적 구성하며,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간의 연결성을 증대시킨다.</p> <p>6.2.1.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별 주사용자(민원인, 직원 등) 중심의 시설로 계획한다.</p> <p>6.2.5. 각 부서에 들어선 내방객이나 타 부서 직원이 담당직원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 입구 부근에서 담당자와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p>	<p>당선”, C3KOREA, 2020.07.28., 2020.09.22. 접속.  <a href="http://www.c3korea.net/snohetta-wins-the-international-competition-for-cheongju-new-cityhall">www.c3korea.net/snohetta-wins-the-international-competition-for-cheongju-new-cityhall</a></p>  <p>〈자료〉 “Cheongju New City Hall”, 스노헨타 홈페이지, 2020.09.22 접속,  <a href="http://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a></p>
---	--

(2) 의회업무

의회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원별 독립공간을 계획하되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공간, 그리고 상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시민참여공간이자 주민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개방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된 동선으로 민원인 접근성과 직원 업무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의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2-15] 청주시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건축연면적: 4,850㎡</li> <li>• 시의회 수용 규모: 시의원 39명</li> </ul> <p>5.2.5. 의회공간은 미래지방자치 지방의회 활동 및 권한 상승에 따른 국민참여공간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주민소통 공간이 의회 내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p> <p>5.5.2. 의회공간이 상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소통 공간이 의회 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의회 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 접근성과 직원들의 업무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p>6.6.1. 시정업무 서비스의 특징을 감안하여 공간의 이용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자료〉 “Cheongju New City Hall”, 스노헤타 홈페이지, 2020.09.22.접속,  <a href="https://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https://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a></p>
---	---

### (3) 시민문화지원

시민문화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플랫폼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활용하도록 설계지침서가 작성되었다. 청사의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였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기존 청사 건물에 전시장이나 기념품샵, 상업시설, 강당, 회의실, 우체국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자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편의시설을 집적시켜두었다. 또한 개방된 외부공간에 위치한 파빌리온에 돌봄센터와 도서관, 강당을 두고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더하여 기존 청사 건물과 신청사 건물 사이에 중정 형태의 광장을 설계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표 2-16] 청주시청사 시민문화자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편의공간 면적: 3,700㎡</li> <li>• 주민편의공간 포함 시설: 대강당, 시민문화공간 등</li> </ul>	 <p data-bbox="848 755 1270 861">                 &lt;자료&gt; “청주시청사 조감도 공개”, 뉴스프리존, 2020.07.17., 2020.09.22.접속,  <a href="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48">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48</a> </p>
<p>5.2.4. 행정업무 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공간조성을 기본으로 저층부에는 시민과의 소통 공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p> <p>5.3.3. 성안길, 소나무길에서 청주역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청사 저층부에는 방문객 및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지원 공간을 제시한다.</p> <p>5.3.4. (생략) 외부공간의 조성 및 편의시설의 배치는 시청사 휴무시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p> <p>5.10.1. 시민 자유 및 권리의 공간 등 다양한 활동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이 되도록 한다.</p>	

(4) 상징적·역사적 거점공간

청주시는 시민 자율에 의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시이기 때문에 자율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하지만 상징성, 독창성, 창의성을 표현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위압적이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 청사 건물을 존치할 예정으로 이를 활용하여 새로 지어질 신청사와의 조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기존 청사 건물을 중심으로 사각형의 매스를 두른 형태이다. 이를 통해 영역성을 확보하고 고도를 다양하게 주면서 위압적이지 않게 배치하여 조화롭게 하였다. 또한 기존 청사 건물에는 공공공간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안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통합의 상징성이 담겼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sup>15)</sup>.

15)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스노헤타’ 당선”, C3KOREA, 2020.09.22. 접속,  
<https://www.c3korea.net/snohetta-wins-the-international-competition-for-cheongju-new-cityhall/>

[표 2-17] 청주시청사 역사적·상징적 거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5.2.1. 청주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시민 자율에 의해 통합된 시로써 자율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5.2.6. 본청사 활용과 관련하여 3층까지만 활용하고 4층은 철거할 예정으로 참가자의 개념에 따라 내부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제안한다.
- 5.2.7. 참가자는 현재 본관동이 존치됨에 따라 (구)본관동과 신청사의 조화방안을 마련하며 (구)본관의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제시안을 계획한다.
- 5.5.5. (생략) 기존 본관동 공간구성은 설계자의 제안에 따르며, 개방 및 공유가 가능한 영역으로 시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 5.8.1. 위압적이거나 과도한 상징성은 지양하며 공공성이 있고 청주시의 위상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자료> “Cheongju New City Hall”, 스노헤타 홈페이지, 2020.09.22.접속,  
<https://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

## 5) 이슈 및 시사점

### (1) 이슈: 2단계 지명초청공모 논란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단계 설계공모 방식에 지명공모를 혼용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1단계는 공개공모로 국내외 건축사가 참여하고 당선된 5팀은 2단계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단계 설계공모에서는 1단계 당선자 5팀과 운영위원회에서 지명초청한 해외건축사 3팀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지명된 해외건축사는 국내 건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국내 건축법 및 관련 법규 검토와 인허가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우수한 국내 건축사가 많음에도 1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해외건축사에게 2단계 참여권을 부여한다는 점, 1단계에 참여한 국내 건축사의 경우는 설계 컨셉과 디자인이 공개된 상태로 2단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sup>16)</sup>.

16) “해외지명 건축가 2단계 직행..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논란’”, 건설경제, 2020.01.17., 2020.10.08. 접속,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1161415423810120>.

이에 청주시는 우수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며 초청지명은 통상적인 국제설계공모 방식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전문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명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였다<sup>17)</sup>. 실제 2단계 지명초청건축가를 선정할 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회가 건축가의 경력과 작품이력을 검토한 후 청주신청사 건립 사업에 적절한 인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프리츠커상, AIA, RIBA 골드메달리스트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주시는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심사의 전 과정을 전면 공개하였다<sup>18)</sup>.

## (2) 시사점: 통합시의 상징성 강조

1946년 청주군이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분리된 후 1994년부터 통합을 시도해왔다. 1994년과 2005년, 2008년 3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2년 청원군은 주민 투표로,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통합결정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이 확정되어 지금의 청주시가 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국내 최초 시민 간 자율합의에 의한 통합이라며 이에 대한 상징성을 신청사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청주시와 청원군의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행정적, 기능적 통합을 상징하는 표현물로서의 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건립 비전에 명시하였다. 또한 설계공모심사 시 설계안이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하나의 주안점으로 삼아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지붕’이라는 컨셉으로 기와집 처마의 추녀를 닮은 설계안이 당선되었고, 통합 청주시의 상징성을 잘 표현했다는 심사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주시는 청주시만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한 건립 비전 및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17)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공정성 논란”, 충북일보, 2020.01.20., 2020.10.08. 접속,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08349>.

18)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전면 공개한다”. 열린뉴스통신, 2020.07.01., 2020.10.08. 접속,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0464>.

## 2. 순천시청사

### 1) 건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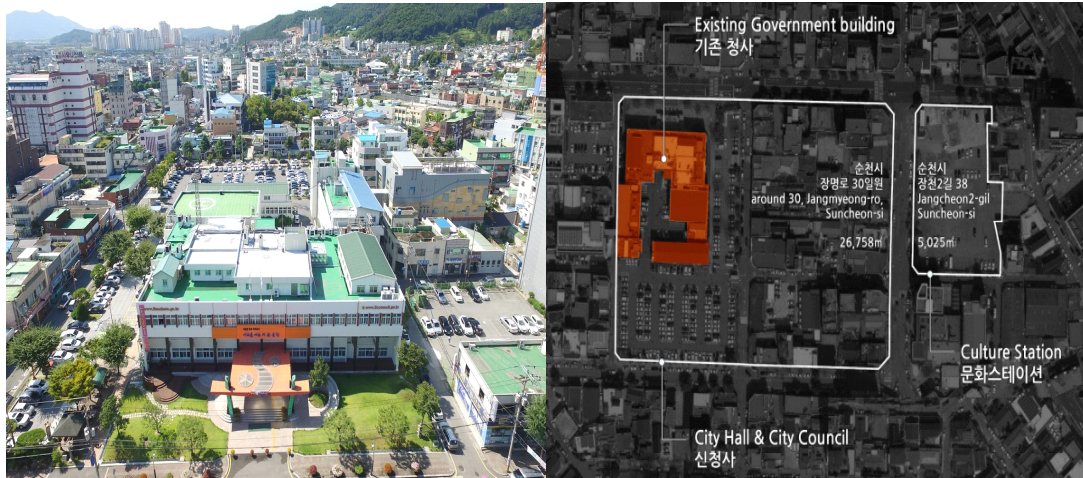
순천시는 1969년 순천시청사가 건립된 이후 공무원 수가 약 3배 증가하여 시청사의 임시적인 증·개축을 해왔다. 이로 인해 법정면적의 50%에 해당하는 협소한 업무공간과 7개의 건물로 분산되어 있는 부서로 인해 원스톱 행정이 어려워 직원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도 부족하였으며 안전구조진단 결과 C~D등급으로 나타나 매년 관리비로 약 10억원을 소요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고, 2016년 시민 설문조사 후 2017년 시청 내 청사 건립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였다.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와 에테르웍, 남정민이 공동출품한 순천의로가 최종 당선되었다.

[표 2-18] 순천시청사 개요

연도	2025년 완공 예정	
위치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4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규모	대지면적	31,783㎡
	연면적	58,995㎡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주차규모	총 800면 이상 - 신청사 주차장: 550면 이상, 지상 30면 내외 - 문화스테이션 주차장: 250면 이상
건물규모	신청사: 지하 3층~지상 10층 이내 문화스테이션: 지상 1층~5층 이내	

<자료> 순천시, 순천시 시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020.

[그림 2-12] 순천시청사 현황 및 사업 대상지



〈자료〉 좌: “순천시 신청사, 시민 주도로 기본계획 공청회 열린다.”, 순천광장신문, 2019.06.26., 2020.09.25. 접속, <http://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666>.

우: 순천시청.

[그림 2-13] 순천시청사 당선작



〈자료〉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http://www.snewcityhall-compe.org/>

## 2) 주요 연혁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1995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2016년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7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참여 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도 자발적으로 시민위원회 모임인 ‘순천의 미래 100년 신청사 갖기 범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여러차례의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타당성 조사와 토지 보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현재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형식으로 국내 건축사 또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 응모를 하는 국외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순천시청사 건립의 주요 연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9] 순천시청사 건립 주요 연혁

연혁	주요 내용
1995.	통합 시청사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2005.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16.	시민 설문조사 실시, 도시 기본계획 반영, 기금 조례 제정
2017.	자발적인 시민위원회 모임 구성 및 활동
2017.03.~2019.08.	순천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7.08.~2017.12.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2017.12.~2018.04.	전국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2018.12.	시민 공청회
2019.01.	건립 위치 확정(현 청사 동측 부지 확장)
2019.0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9.06.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9.03.~2019.08.	시민참여 디자인단 운영(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씽킹 용역)
2019.08.~2020.03.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19.09.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설명회
2020.04.~2020.06.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
2020.07.	토지 보상
2020.04.~2020.06.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0.09.	설계공모
2022.	착공(예정)
2025.	준공 및 입주(예정)

[자료] 송성욱 외,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2020.

### 3) 목적과 비전

순천시청사의 건립 비전은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이다. 또한 청사 건물은 크게 순천시 신청사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으로 나뉘는데, 건물에 따라 건립 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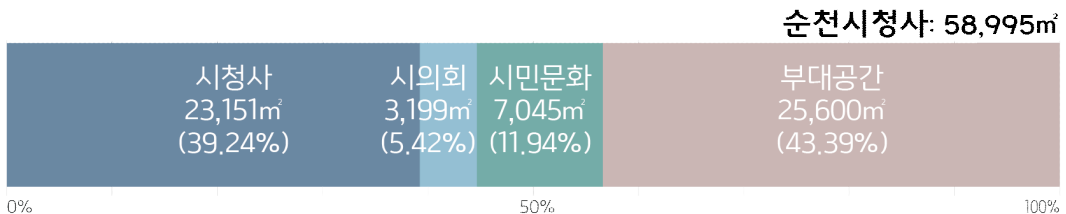
신청사 건물의 경우, ‘인생청사(人生靑史)’로 청사를 이용하는 누구나 소통하며 순천시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열린 청사, 자연·사람·건축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문화 확산의 기준이 되는 청사,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갖추고 4차 혁명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청사,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공공청사를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의 경우, 시민참여 및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소통 및 복지편의시설을 계획하며 원도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충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도심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시민로-시청사-원도심 문화스테이션-동천을 잇는 보행환경 공간과 조화시키고자 이후 관광자원화 하고자 계획 하고 있다.

### 4) 기능과 역할

순천시 시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시청사 영역은 23,151㎡로 전체 연면적 중에서 39.24%를 차지한다. 시의회 영역은 3,199㎡로 5.42%를 차지하며 시민문화공간은 시청사 내 문화공간과 원도심문화스테이션을 합한 공간으로 7,045㎡로 11.94%를 차지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인 부대공간은 전체 연면적의 43.39%를 차지할 예정이다.

[그림 2-14] 순천시청사 영역별 면적



<자료> 순천시, 순천시 시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2020.

## (1) 행정·대민업무

순천시청사에서 행정·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시청영역의 면적은 25,401㎡로 편의 및 문화공간, 설비·공용공간을 제외하면 14,741㎡이다. 세부적으로 사무공간은 5,914㎡, 사무지원공간은 6,156㎡이다. 설계지침서를 살펴보면, 4차 혁명시대에 맞추어 행정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및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공간을 요청하였으며, 확장과 변동이 가능한 가변성이 있는 공간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식과 업무의 병행뿐만 아니라, 보육과 업무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직원의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였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출입 동선에서 시민공간, 민원공간, 행정공간, 의회공간으로 나누어 동선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표 2-20] 순천시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 시청사 내 시청영역 건축연면적 23,151㎡ (편의 및 문화공간 제외)
  - 영역별 면적: 사무공간(5,914㎡), 사무지원공간(6,156㎡), 법정시설(2,671㎡), 설비공간(1,140㎡), 공용공간(7,270㎡)
- 
- 4.3.1. 통합, 융합, 경계소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혁명 시대에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Work-place로 계획한다.
  - 4.3.2. 행정변화와 조직의 가변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변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며 설비시설도 유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4.3.6. 업무공간과 직원 휴식공간은 유기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간섭받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4.3.7. 직원의 보육 및 돌봄을 위해 야근/주말 근무 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육과 업무가 공존하는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자녀들의 놀이공간은 직장어린이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5.2.1. 기존 청사는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행정업무를 위해 존치하며, 신청사 준공 및 이전 후 전체를 철거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5.5.4. 사무공간과 비사무공간의 동선을 명쾌하게 구별하여 각각의 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기능별 영역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혼잡성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 5.5.5. 사무공간에는 Co-Working 스페이스와 직원들의 휴게공간 및 복지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한다.
  - 5.8.1. 신청사 출입 동선은 시민공간, 민원공간, 사무전용공간, 의회공간으로 분류하며, 사무전용공간은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분하여 출입관리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2) 의회업무

순천시청사에서 의회영역의 면적은 3,199㎡으로 24인의 의원실 및 회의실(1,481㎡), 부속공간(738㎡), 공용공간(980㎡)을 포함한다. 의회영역 또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유동적이게 회의공간을 계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회의 공간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게 설계하되 민원인의 접근성과 직원의 업무효율을 낮추지 않도록 하였다.

**[표 2-21] 순천시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사 내 의회영역 건축연면적: 3,199㎡</li> <li>• 영역별 면적: 의원실 및 회의실(1,481㎡), 부속공간(738㎡), 공용공간(980㎡)</li> </ul>
---

---

<p>4.5.1. 의회공간은 고유 업무의 효율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은 물론, 미래 지방의회 활동 강화와 권한 상승에 따른 시민참여공간으로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주민소통 공간이 의회 내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p> <p>4.5.2. 시의회에는 24명의 의원별 독립 사무공간 및 회의실, 세미나실 등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한다.</p> <p>4.5.3. 상임위원회실은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의 대기실을 구성하여 출입이 용이하게 한다.</p> <p>4.5.4. 본회의장은 의원 24인, 집행부 25인, 방청객 55인을 기준으로 하여 회의공간을 계획하되, 향후 의원수 증가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p> <p>4.5.5. 의회 근무자 또는 이용자 등이 시청의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p> <p>4.5.6. 의회공간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며 의회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 접근성과 직원들의 업무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

---

## (3) 시민문화지원

시민문화지원은 시청사 내 편의 및 문화공간(2,250㎡)과 원도심 문화스테이션(11,995㎡)으로 나누어 크게 두 곳에 계획되어있다. 시청사 내 편의 및 문화공간의 경우, 시청사의 저층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세미나실·전시실·회의실·복카페·동아리실 등의 문화공간과 상담실·세탁소·문구점·금융시설 등의 편의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은 지상 5층 이내의 건물로, 노유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포함되어 시민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예정이다.

[표 2-22] 순천시청사 시민문화지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사 내 시민문화지원공간 건축연면적: 2,250㎡</li> <li>▪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축연면적: 11,995㎡ (주차장 7,200㎡ 포함)</li> <li>▪ 영역별 면적: 생활문화센터(1,200㎡), 가족센터(890㎡), 인생이모작센터(450㎡), 건강생활지원센터(496㎡), 로컬푸드 직매장(300㎡)</li> </ul>
--

---

<p>4.4.1.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며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 연계를 고려한 공간을 구성한다.</p> <p>4.4.2. 세미나, 전시 등 문화생활과 상담, 민원, 정보습득, 편의시설 등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어 관공서가 아닌 복합 문화시설의 이미지가 되도록 한다.</p> <p>4.4.3. 주요 시민공간은 문화시설로는 세미나실, 전시실, 동아리실, 워크숍실, 북카페 등을 구성하고, 편의시설로는 상담실, 세탁소, 문구점, 금융시설, 정보실 등으로 계획한다.</p> <p>4.4.4. 북카페는 형식적인 책꽂이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4.4.5. 공용공간에는 비즈니스룸(소규모 회의실), 상담, 만남이 가능한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직원 간, 직원과 시민 간, 시민과 시민 간에 대화가 용이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p> <p>4.6.1.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은 시청사와 기능적 독립성을 가지지만 연계성을 고려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p> <p>4.6.2.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 동천과의 연계를 위해 향후 공중보행로(육교 형식 등)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동천과의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p>
---

---

#### (4) 생태수도의 공공청사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으로 대한민국의 생태수도로 불리는 순천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생태, 조경, 경관, 환경 등에 유의하고 있다. 청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조경계획이 아닌 예술성을 가진 외부공간 설계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조망권과 가시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계지침서에 에너지 효율이 좋지 못한 커튼월 입면 계획을 지양하며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을 지향할 것을 명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였다.

**[표 2-23] 순천시청사 생태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 5.1.2. 생태수도 순천시의 위상을 반영하여 외부와 내부 공간을 계획하며, 청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정원의 도시 순천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 5.3.1. 국가정원 순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조경계획 및 시설이 아닌 예술성을 가진 외부공간을 계획하며, 시민과 직원들의 휴식·문화 활동 등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5.3.7. 조경계획은 건축물 내·외부 및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연계함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커뮤니티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 특성에 따라 공간에 영역성이 부여되게 하되, 차별·차음의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5.7.2. 주변 자연환경 및 기존 도심지와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법적 제한 내에서 조망권, 가시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5.7.3. 과도한 커튼월 입면 계획은 지양한다.
  - 5.10.1.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서의 제어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우수(중수) 활용,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취득 등을 감안한다.
- 

## 5) 이슈 및 시사점

### (1) 시사점: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과의 복합화

순천시청사 내 건물 중 하나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무조정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sup>19)</sup>. 순천시는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로 구성되어있는 원도심문화스테이션에 6,134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더하여 가족센터 건립 사업 또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고,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sup>20)</sup>.

### (2) 시사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순천시청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했다. 먼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OK 소통1번가 사이트(<https://www.suncheon.go.kr/sotong/>) 내

19)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0.09.17.),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건 확정」

20) “순천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선정, 국비 15억 확보”, 순천독립신문, 2020.09.03., 2020.10.19. 접속, [http://www.sunchon123.com/kr/bbs/board.php?bo\\_table=subpage\\_01&wr\\_id=1069](http://www.sunchon123.com/kr/bbs/board.php?bo_table=subpage_01&wr_id=1069).

‘신청사 건립 제안방’을 통해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기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또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시민아이디어 제안 공모(2017.08.16.~2017.12.15.), 시민 공청회(2017.11., 2018.12.),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2017.12.15.~2018.04.27.), 찾아가는 시청사 설명회(2017.07.~2018.12.) 등을 진행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하여 시민도 자발적으로 ‘순천의 미래 100년! 신청사 갖기 범 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사진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워크숍(2019.03.14.~2019.07.31.)을 진행하고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진을 그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시민 주도의 청사 건립이라는 평을 받았으며<sup>21)</sup>,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와 시민참여 기본계획안이 크게 다르지 않아 순조롭게 건립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sup>22)</sup>.

[그림 2-15] 시민참여 디자인단 운영 최종 조감도



<자료> 순천시,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2020.

21) “순천시 시민주도 신청사 건립한다”, 한국일보, 2019.06.25., 2020.10.19.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51413080021>.

22) “순천시 신청사 건립 탄력...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03.23., 2020.10.19. 접속,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98>.

### 3. 종로구청사

#### 1) 건립 배경

현재 종로구청사와 종로소방서는 중정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에 해당된다. 특히 종로구청사 건물은 1922년에 지어졌던 수송국민학교 건물을 구조변경하여 사용 중이다. 지어진 지 100년이 되어가는 건물인 만큼 누수 현상과 낮은 냉방효율, 낡은 배선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이 있다. 또한 업무공간 부족으로 인해 제 1별관과 제 2별관을 1970년대에 증축했음에도 협소하여 인근 이마빌딩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 문제와 공간 협소 문제 때문에 종로구청사와 종로소방서를 함께 통합 개발함으로써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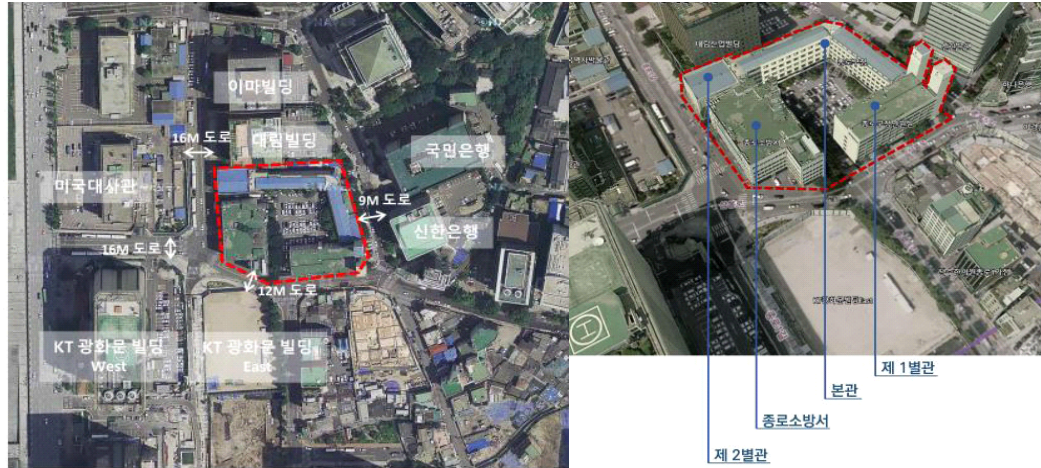
[표 2-24] 종로구청사 개요

연도	2024년 완공 예정	
위치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규모	<b>대지면적</b> 총 8,622.3㎡ - 종로구청: 6,635.3㎡ - 종로소방사: 1,987㎡	
	<b>연면적</b> 총 66,970㎡ - 종로구합동청사: 40,251.89㎡(주차면적 제외, 보건소 포함) - 소방합동청사: 14,627.33㎡ - 주차장영역: 12,092.37㎡ (종로구합동청사: 8930.91㎡)	
	<b>건폐율</b>	60% 이하
	<b>용적률</b>	기준 600%, 허용 700% 이하
	<b>주차규모</b>	부설주차장 250면 이상(주차설치 제한지역)
	<b>건물규모</b>	최고 높이 70m (지하 5층 / 지상 17층 예정)

〈자료〉 종로구,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지침서, 2020.



[그림 2-16] 종로구청사 주변건물 및 기존건물 현위치도



〈자료〉 종로구청

## 2) 주요 연혁

종로구청사는 청사만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2009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공개토론회,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종로구청사와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타당성 조사와 2019년 중앙투융자심사 후 매장문화재를 1차 시굴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현재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이 발표된 상태이다.

[표 2-25] 종로구청사 건립 주요 연혁

연혁	주요 내용
2018.06.	타당성 조사
2019.03.	중앙투융자심사(조건부 승인)
2019.04.	매장문화재 1차 시굴
2019.07.~2019.08.	기본 구상 및 사전기획 설계용역 시행
2019.09.	기본계획 변경 수립
2019.10.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05.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공고
2020.10.~2021.04.	기본설계(예정)
2021.04.~2021.05.	임시청사 이전 및 기존청사 철거(예정)
2021.05.~2021.12.	실시설계,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 실시(예정)
2022.05.	착공(예정)
2024.10.	준공 및 신청사 입주(예정)

〈자료〉 종로구,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2020.

### 3) 목적과 비전

종로구청사의 건립 비전은 ‘역사의 공간에서 천년을 꿈꾸는 열린 신청사’이다. 이를 위해 역사공간과 조화되는 청사, 역사·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청사, 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스마트한 청사, 구민과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 청사, 시의 재난컨트롤타워를 상징하는 청사를 건립 방향으로 설정하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그림 2-17] 종로구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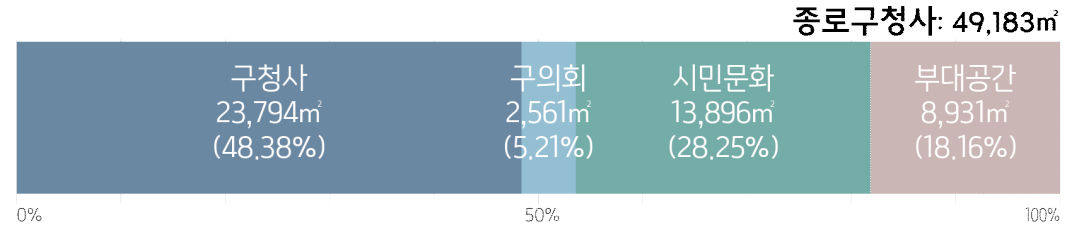


〈자료〉 운생동건축사사무소

### 4) 기능과 역할

종로구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종로구 통합청사는 크게 종로구 합동청사와 소방합동청사, 주차장영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종로구합동청사와 주차장 영역중 종로구합동청사에 계획된 면적을 기준으로 영역별 면적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종로구합동청사 내에서 구청사의 영역은 23,794㎡로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48.3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시민문화영역이 13,896㎡로 28.25%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할 예정이다. 구의회 영역은 5.21%를 차지하는 2,561㎡이고, 지하 주차장인 부대공간 영역은 8,931㎡로 다른 공공청사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18.16%로 적다.

[그림 2-18] 종로구청사 영역별 면적



〈자료〉 종로구,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지침서-시설별 세부지침서, 2020.

### (1) 행정·대민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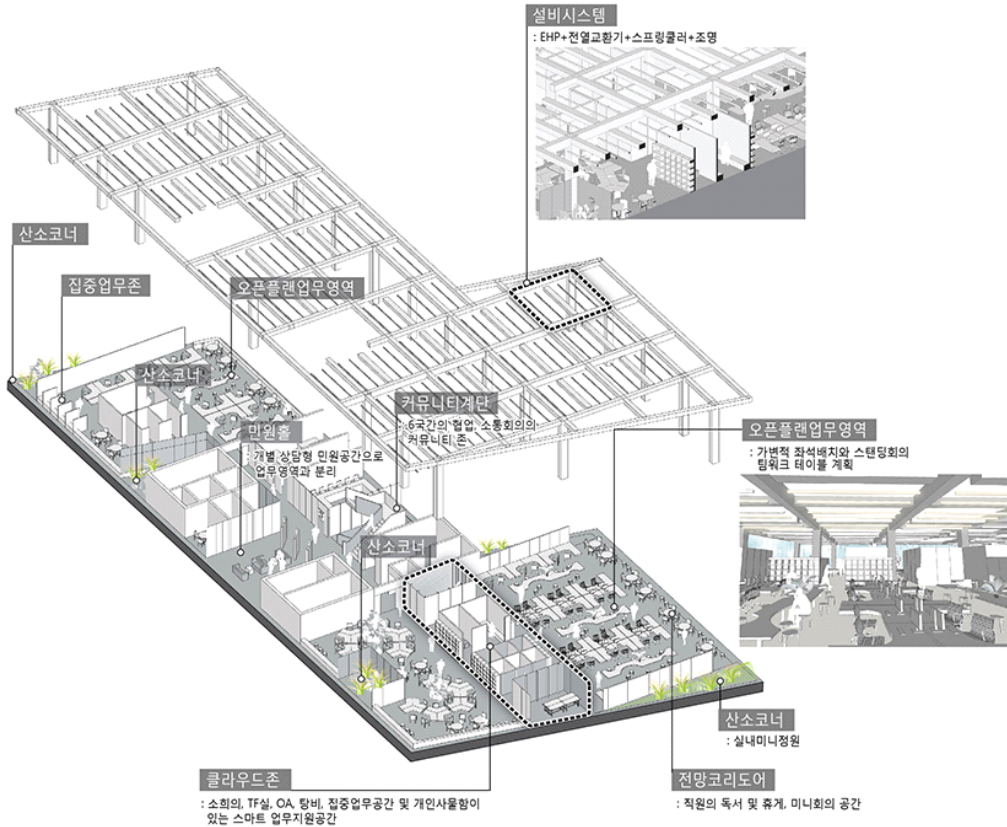
행정·대민업무와 관련하여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간혁신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파티션과 칸막이 없는 개방형 사무공간을 제시하며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요청하였다. 또한 업무공간에서 휴식공간의 중요성도 강조하여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였다.

시설별 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업무효율을 위해 특정과 마다 연계된 배치가 필요한 공간을 명시해 두었다. 예를 들어, 변호사실과 법률상담실, 사회복지과와 자원봉사센터를 함께 연계하여 배치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시설이 회의실 및 직원복지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유관부서 및 관련 시설과의 배치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고층부에 업무영역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업무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전용의 수직계단을 두어 6개국 간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픈형 오피스와 근집형 오피스, 개별 실을 분리 계획하여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실내 미니정원을 두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2-26] 종로구청사 행정·대민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종로구합동청사 내 구청사 건축연면적: 23,794.27㎡
  - 구청사 포함 시설: 6개 국(29개 과)
  - 영역별 면적: 사무공간(7,768.47㎡), 회의실(880.80㎡), 업무지원시설(4,204.17㎡)
- 
-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된 미래지향적인 업무방식과 조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계획한다.
  - 업무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통합 공간을 제시하고, 휴게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일과 휴식이 병행되는 업무공간을 계획한다.
  - 파티션과 칸막이 없는 개방형 공간으로 사무공간을 계획한다.
  - 보안영역은 업무공간(민원실 제외)으로 개방영역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승인받지 않은 자는 출입을 차단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업무시설 배치는 회의실 및 직원복지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2) 의회업무

종로구의회 공간의 경우, 11석의 의원석을 수용하는 회의공간 및 6개의 업무공간, 민원인 접견실·정책세미나실 등의 부속 공간으로 구성된다. 종로구청과 분리하여 계획하기를 명시하였고, 회의가 없는 기간에는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7] 종로구청사 의회업무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 종로구합동청사 내 구의회 건축연면적: 2,561.34㎡
  - 영역별 면적: 업무 공간(563.55㎡), 회의 공간(510.00㎡), 부속공간(763.61㎡)
- 
- 종로구청과 분리된 공간에 계획한다.
  - 11석의 의원석을 수용하는 회의공간으로 계획하며, 지방자치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공간이므로 회의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아울러 위치, 크기, 내부구성 시 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본회의가 없는 기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견학자 통로를 계획하고 본회의장 내부를 두러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 (3) 시민문화지원

종로구청사 내 시민문화지원공간에는 대강당과 소음악당, 전시실, 홍보관, 도서관, 문학관, 유구전시관 등이 있다. 지하와 저층부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목적이고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명시하였다. 특히 보행 계획에 주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지하층과 저층부에 개방공간과 문화공간을 배치하였다. 지하층에는 대강당과 소음악당, 그리고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다. 저층부에는 시민 라운지, 문학관을 배치하였고,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마당을 두어 보행과 자연 공간, 구청사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표 2-28] 종로구청사 시민문화지원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종로구합동청사 내 문화시설 건축연면적: 5,194.87㎡
- 영역별 면적: 대강당(600㎡), 소음악당(300㎡), 전시실(100㎡), 문학관(1,155㎡), 수장고(323㎡), 도서관(300㎡), 홍보관(100㎡), 유구전시관(1,400㎡) 등



〈자료〉 운생동건축사사무소

- 시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은 공연, 전시, 상업 등 복합 용도로 계획해야 한다.
- 시민들과 공유하는 개방공간은 시민들의 접근과 동선 효율을 높이도록 조닝계획을 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한다.
- 문화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지하나 저층부에 배치하여 구청의 업무시간 이외에도 사용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저층부의 공용공간은 전시장 등 다목적, 가변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상과 지하의 보행자(보행약자 포함)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지하를 포함한 지상 저층부는 문화시설 등 시민 공유공간을 계획하되 열린 청사 개념으로 설계자의 자유로운 제안도 가능하다.
- 개방영역은 종합민원실 및 문화 공간, 주민편의시설, 본관 옥상 휴게공간 등이며 평상시 시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단, 필요시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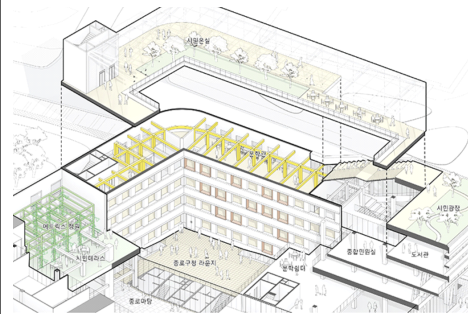
#### (4) 역사적 공간

건립방향 중 ‘역사공간과 조화되는 청사’에 맞게 설계지침서에도 역사공간과 관련된 지침들이 명시되어 있다. 매장 문화재 보존 계획에 대한 수립과 수장고 설계, 현 종로구청의 본관을 고려한 리모델링 방향 등 역사 공간에 대한 종로구청의 현재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요청하였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유구박물관과 지하 2층의 상점을 연계하여 지하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 1층에 수장고를 계획하였는데 오픈형 수장고로 전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현재의 종로구청인 수송초등학교 건물은 종로구청에서 제시하였듯이 문학관으로 계획하였고, 재해석 및 신축을 하여 온실과 정원, 테라스를 추가하여 입체적인 계획을 하였다.

[표 2-29] 종로구청사 역사적 공간 관련 설계지침서(일부)

- 부지 내 발굴이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안을 제시한다.
- 수장고는 지하에 계획하되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또한 작품 보관을 위한 향온·향습 조절기능 장치를 설계한다.
- 서울미래유산인 종로구청 본관(옛 수송초등학교)의 보존부분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수평적, 수직적 공간계획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한다.
- 보존 부분은 문학관으로 계획하여 역사적 공간의 보존이라는 의미와 ‘1920~30년대 종로 문학’ 컨셉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는 부분과 잘 연계하여 당시 활동한 작가들의 문학집필자료 전시 등이 포함되는 문학관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자료〉 운생동건축사사무소

## 5) 이슈 및 시사점

### (1) 이슈: 임대시설 설치

종로구청사와 종로소방서 통합개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임대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구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임대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재검토 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임대시설의 설치 불가 사유로는 위탁개발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임대시설을 건립하기에는 규모가 커 과대청사의 위험이 있고,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 추진 시 사회적 파장이 크며, 재정사업으로 임대사업 시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하여 임대수입이 낮고, 낮은 임대료로 시장질서 문란 유발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임대시설을 제외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표 2-30] 행정안전부의 임대시설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2018.06.18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장기 청사의 건립 및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공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임</li> </ul>
2018.08.14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목적(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기존에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로 취득하는 행정재산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li> </ul>

## (2) 시사점: 상세한 설계지침서

종로구청사는 구청사와 구의회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소방서, 방재센터, 소방재난본부 그리고 문학관과 수장고, 유구전시관을 포함하는 문화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간계획이 다소 복잡한 편이다. 이에 종로구청은 종로구청 설계공모를 위한 지침서를 크게 설계공모지침서와 시설별 세부지침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설계공모지침서는 공모배경 및 개요, 설계 대상·대상지 개요·현황·사업예산 등 기본 설계지침,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과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설별 세부지침서는 시설별 면적표와 시설별·실별 세부지침을 포함한다. 즉, 대부분의 설계공모에서 설계공모지침서 내에 포함하는 설계방향 세부지침 및 기능별 세부시설 면적기준을 종로구청은 시설별 세부지침서로 따로 작성한 것이다. 시설별 세부지침서는 총 27 페이지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공간과 특정과별 요구사항, 공간별 설명과 목적이 기술되어 있다.

상세한 종로구청사의 설계지침서는 복잡한 공간구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지만, 너무 상세하여 설계자의 개입이 적고 유연성이 떨어져 경직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해외건축사를 위한 부서별 행정업무 설명과 수요자인 기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특정과 별 요구사항은 제시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며 가변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31] 종로구청사와 기타 설계공모 비교

종로구청사 설계공모	기타 설계공모
<p>[설계공모지침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공모 배경 및 개요</li> </ul> </li> <li>2. 기본설계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의 대상</li> <li>• 대상지 개요 및 법적 고려사항</li> <li>• 도시적 조건 및 기존 시설물의 현황</li> <li>• 계획의 기본방향</li> <li>• 사업예산</li> </ul> </li> <li>3.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도서 작성기준</li> <li>• 유의사항</li> <li>• 고유식별번호 및 도판번호 기재방법</li> <li>• 작성의 예시</li> </ul> </li> <li>4.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li> <li>• 별첨</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공모 명칭 및 목적</li> <li>• 개요</li> <li>• 설계공모 방식 및 조직, 일정</li> <li>•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li> <li>• 등록</li> <li>• 질의접수 및 회신</li> <li>• 작품의 제출</li> <li>• 익명성</li> <li>•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설계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li> <li>• 저작권과 출판권</li> <li>• 당선 이후 조건</li> <li>• 기타규정</li> </ul> </li> <li>2. 설계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대상 및 범위</li> <li>• 공모의 추진 배경</li> <li>• 사업대상지의 입지현황</li> <li>• 현 청사 현황</li> <li>• 설계방향</li> <li>• 주요영역별 설계지침</li> <li>• 청주시청사 기능별 세부시설 면적기준(안)</li> </ul> </li> </ol>
<p>[시설별 세부지침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별 면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 통합개발 전체규모</li> <li>• 종로구 통합개발 시설(안)</li> </ul> </li> <li>2. 시설별, 실별 세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별, 실별 세부지침</li> <li>• 종로구청</li> <li>• 본관 리모델링 및 문화공간</li> <li>• 의회청사</li> <li>• 보건소</li> <li>• 근린생활시설</li> <li>• 소방재난본부</li> <li>• 서울종합방재센터</li> <li>• 종로소방서</li> <li>• 소방합동청사 공용시설</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기술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판 및 도서 작성방법</li> </ul> </li> <li>4.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공모 관련 자료</li> <li>• 설계공모 관련 서식</li> <li>• 기타 자료</li> </ul> </li> </ol>

## 제3절 사례 간 비교 및 시사점

### 1. 건립 목적 및 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공공청사는 행정·대민업무기능만을 수행하는 시설이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행정·대민업무기능에 의회업무까지 수행하는 시설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 이후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시민에게 개방된 시설로 시민문화지원기능까지 하는 시설이 되었다(염철호 외,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서 살펴본 공공청사 사례는 모두 행정·대민업무기능과 의회업무기능, 시민문화지원기능까지 포함하는 건립 목적과 비전이 있다. 나아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시청사는 목적 및 비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성, 지역성을 담고자 하고 있다. 청주시청사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율통합을 이뤄냈다는 통합시청사로서의 상징성을 강조하였고, 순천시청사는 생태수도에 맞게 생태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종로구청사는 종로소방서와 통합하여 건립하는 청사로 재난컨트롤타워를 상징하되, 서울미래유산인 기존 청사 건물(옛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존치하여 역사를 담고자 하였다.

[표 2-32] 사례별 목적 및 비전

구분	목적 및 비전
용인시청사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지역갈등 해소,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도입</li> <li>• 용인시 문화, 복지, 행정의 중심</li> <li>• 민선 6기 이후, '사람들의 용인'</li> </ul>
성남시청사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적의 대민·행정서비스, 쾌적한 문화 휴식 공간 제공</li> <li>• 시민 중심의 시청사</li> <li>• 언제나 가까이하고 싶은 청사</li> </ul>
청주시청사 (2025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 통합을 이루어 낸 통합시청사로서의 상징성</li> <li>• 공공청사의 개방성</li> <li>• 업무공간의 혁신 및 효율화</li> <li>• 시민의 용이한 접근성</li> </ul>
순천시청사 (2025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적이고 실용적이며 시민에게 열린 청사, '인생청사'</li> <li>• 누구나 소통하며 순천시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열린 청사</li> <li>• 자연·사람·건축이 조화를 이루어 생태문화 확산의 기준이 되는 청사</li> <li>• 4차 혁명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청사</li> <li>•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청사</li> </ul>

종로구청사 (2024년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의 공간에서 천년을 꿈꾸는 열린 신청사’</li> <li>• 역사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청사</li> <li>• 친환경적·미래지향적인 스마트한 청사</li> <li>• 구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청사</li> <li>• 시의 재난컨트롤타워를 상징하는 청사</li> </ul>
---------------------	---

## 2. 규모 및 사업비

규모 및 사업비와 관련된 이슈는 경제적인 문제로, 과도한 행정수요 예측 및 기준초과 설계 등으로 발생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논란이 된 시청사는 용인시청사와 성남시청사로 행정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설계하였으며,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용인시청사의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건축연면적 및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지시받았음에도 시예산으로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용인시청사와 성남시청사로 호화청사 문제가 주목받자, 중앙 정부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청사의 면적기준을 제시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공청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면적 규모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에는 직급에 따른 사무공간의 형태 및 일 인당 기준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감안하여 증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에도 본청사와 의회청사, 장의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민문화공간과 같은 기타공간에 대한 기준면적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표 2-33] 사례별 규모 및 사업비

구분	규모	사업비
고양시청사	73,096㎡	2,969억원
용인시청사	76,214㎡	1,974억원
성남시청사	75,612㎡	3,222억원
청주시청사	55,500㎡	2,312억원
순천시청사	58,995㎡	1,784억원
종로구청사	49,183㎡	2,541억원

### 3. 설계 및 공모 방식

2013년에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설계의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청사와 성남시청사의 경우 상기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으로 건립이 되었다. 용인시청사의 경우 설계는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아서 하였으며,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진행하였다. 성남시청사의 경우는 설계에는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신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였으며 시공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진행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후 건립을 추진 중인 청주시청사와 순천시청사, 종로구청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는 크게 심사방식에 따라 일반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로 나뉘며, 참여자에 따라 제안공모, 제한공모, 지명공모로 구분된다. 이때 순천시와 종로구는 일반설계공모를 참여자의 제한없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심사를 2단계에 거쳐 진행하였고 청주시는 2단계 설계공모에 지명공모를 혼용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 청주시는 1단계 공개공모를 하여 당선된 5팀에게 2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단계에 해외건축사 3팀을 지명초청하여 총 8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종로구 설계공모에서는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와 포스코 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공동참여한 설계안이 당선되었고, 청주시의 설계공모에는 지명 초청으로 참여한 스노헤타(Snøhetta)의 설계안이 당선되었으며 순천시의 설계공모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표 2-34] 사례별 설계·공모 방식

구분	설계·공모 방식
용인시청사	•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성남시청사	•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청주시청사	• 1단계 공개공모 + 2단계 지명공모 • 1단계에서 당선된 5팀과 지명초청 된 3팀이 2단계 공모 참여
순천시청사	• 일반설계공모(공개), 2단계 심사
종로구청사	• 일반설계공모(공개), 2단계 심사

설계공모 관련 이슈는 설계공모의 방식 및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공모 방식과 관련된 이슈와 설계지침서와 관련된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공모방식 이슈는 형평성의 문제로, 공모절차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설계지침서와 관련해서는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으로 작성하여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과도하게 세밀하거나 고급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엄철호 외, 2010). 먼저, 공모 방식과 관련해서 청주시가 2단계 지명초청공모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청주시는 1단계 설계공모는 공개공모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1단계에서 당선된 5개 팀과 2단계에서 지명초청한 해외건축사사무소 3개 팀 중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언론에 언급이 많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였다.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있음에도 해외 건축사사무소를 지명초청하고 1단계 없이 2단계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1단계에서 당선된 5개 팀은 설계의 핵심 아이디어가 노출된 상태로 2단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전문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 프리즈커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는 건축가를 지명했으며 심사의 전 과정을 전면 공개함에 따라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설계지침서와 관련해서는 종로구가 설계지침서와 시설별 세부지침서를 따로 작성하여 과도하게 세밀하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공공청사 설계공모에서는 설계지침서에 시설별 세부지침을 포함하여 작성 하지만, 종로구청의 경우 약 25페이지의 시설별 세부지침서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소방서, 방재센터, 소방재난본부 등의 공간에 대하여 상세한 면적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복잡한 공간 구성에 대해 상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였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지만,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이 과도하게 지침서가 작성되어 창의적인 설계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4. 공공청사의 복합화

공공청사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청사에 행정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복합화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화의 목적은 크게 한정적인 토지·공간의 활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다양한 기능의 집적 효과로 볼 수 있다(유성현, 2016). 이러한 목적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사 영역의 저층부에 시민문화기능을 복합화하거

나 시민문화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기도 하고, 시청사를 유관 공공기관과 함께 복합화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앞선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민문화기능의 복합화

시민문화공간은 청사의 비전에 따라 특색있게 구성되는 시설로 그 비율과 공간구성 방식은 사례마다 다르다. 먼저 시민문화공간 비율의 경우, 용인시청사와 종로구청사의 경우 전체 연면적에서 28% 이상이 시민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남시청사와 순천시청사는 11~13%정도로 시민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청사는 전체 연면적 중 6.7%를 시민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구성 방식은 크게 시민문화공간을 위한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시청사 영역의 저층부에 시민문화공간을 구성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별도의 건물에 시민문화공간을 구성한 경우는 용인시청사와 청주시청사, 순천시청사이다. 용인시청사는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주변에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시청사 건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 외에도 복지관, 문화예술원, 보건소 등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였다. 더하여 시청사 건물에도 저층부는 시민에게 개방하여 교육실, 전시실, 공연장,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주시청사 또한 신청사 저층부에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존 청사건물에 전시장, 상업시설, 강당, 회의실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문화지원기능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당선작 설계도면에 따르면 광장에 위치한 파벨리온에도 돌봄센터, 도서관, 강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건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천시청사는 시청사·시의회 건물 외의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을 계획하였다. 신청사 건립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021년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인생이모작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시민문화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청사 건물 저층부에도 세미나실, 회의실, 전시실, 북카페, 동아리실 등 시민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사와 종로구청사는 앞선 사례와 달리 별도의 건물이 아닌 시청사 영역 내에 시민문화공간을 구성하였다. 성남시청사는 다른 사례와 달리 층별로 민원휴게공간을 구

성하였고, 저층부에는 대강당과 문화강좌실, 종합홍보관 등이 있다. 건립 당시 시장실이었던 9층을 하늘북카페로 개방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직원후생복지시설로 계획하였던 체력단련실과 여성 휴게실도 시민에게 개방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현재 대강당, 소음악당, 전시실, 홍보관, 도서관, 문학관, 유구전시관 등을 신청사에 계획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미래유산인 구청사 건물(옛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문학관, 홍보관 등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청사 저층부와 지하보행통로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문화지원시설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2-35] 사례별 시민문화공간의 비율 및 구성

구분	시민문화공간면적(비율)	구성	비고	
용인시청사 (76,214㎡)	21,873㎡ (28.7%)	본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전산교육장</li> <li>• 전시실 및 공연장</li> <li>• 시민예약장 등</li> </ul>	
		청소년 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li> <li>• 체육관 및 부대체육시설 등</li> </ul>	
		노인복지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력단련실</li> <li>• 대강당</li> <li>• 주간보호센터 등</li> </ul>	
		문화예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li> <li>• 회의장, 사무실 등</li> </ul>	
성남시청사 (75,612㎡)	10,428㎡ (13.8%)	본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늘북카페</li> <li>• 종합홍보관</li> <li>• 대강당(온누리)</li> <li>• 층별 민원후계공간 등</li> </ul>	
청주시청사 (55,500㎡)	3,700㎡ (6.7%)	본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문화공간</li> </ul>	
		기존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장, 강당 및 회의실</li> <li>• 상업시설</li> <li>• 우체국 등</li> </ul>	
		파빌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센터</li> <li>• 도서관</li> <li>• 강당</li> </ul>	
순천시청사 (58,995㎡)	7,045㎡ (11.94%)	신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실</li> <li>• 회의실 및 세미나실</li> <li>• 북카페, 동아리실</li> <li>• 세탁소, 문구점 등</li> </ul>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2021년 사업)
		원도심 문화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li> <li>• 인생이모작센터</li> <li>• 건강생활지원센터</li> <li>• 로컬푸드 직매장 등</li> </ul>	
종로구청사 (49,183㎡)	13,896㎡ (28.3%)	본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강당 및 소음악당</li> <li>• 전시실 및 홍보관</li> <li>• 문학관, 유구전시관</li> </ul>	

## 2) 다양한 시설·기관과의 복합화

청사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과 비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복합화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복합화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복 결정으로 하며 비시설부지 내 시설 설치 또는 시설부지 내 비시설 설치 허가는 입체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청사의 복합화는 건립 기획의 단계부터 복합화를 전제로 진행하였거나 수요의 변화나 과다 추정으로 인한 유휴공간의 활용을 위한 경우에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 2015). 2000년 이후 청사의 시민문화지원기능이 강조되면서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유관기관 및 상업시설과의 복합화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복합화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후 세무서, 교육청, 우체국 등에 유보지를 매각하여 자원 조달을 하고 시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로구는 종로구청사와 종로소방서를 통합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구청사와 종로소방서가 인접해 있었고, 이에 통합개발을 하게 되었다. 약 2,541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종로구와 서울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한다. 종로구는 시청사 내에 민간임대시설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계획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대신 광화문역과 종각역과 연결될 예정인 지하통로에 상업용 시설을 조성하여 사업 비용을 줄이고자 계획하고 있다.<sup>23)</sup> 서초구청사<sup>24)</sup>(2026년 준공예정, 2020년 0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의 경우, 공공청사에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사례로 공공업무시설과 지역필요시설, 수익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공업무시설에는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가 포함되고 지역필요 시설에는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창업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문화공간, 광역환승센터,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 또한 수익시설에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23) “종로구 시청사, 광화문-종각역과 연결된다...연내 설계 공모”, 매일경제, 2019.11.17., 2020.10.08. 접속,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52560/>.

24) 엄철호 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텔, 영화관이 있다. 추정사업비는 약 7,775억인데, 초기 재원은 공유지 위탁개발방식으로 조달하고 노후청사교부금과 공공임대주택을 복합한 경우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표 2-36] 사례별 규모 및 사업비

	고양시청사	용인시청사	성남시청사	청주시청사	순천시청사	
인구 수(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4,645명</li> <li>2025년(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52,529명</li> <li>2009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9,895명</li>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0,938명</li>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0,202명</li>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완공 예정</li> </u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추교동 666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용인시 용인대로 73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4필지</li> </ul>	
지역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녹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지역, 일반산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산업지역, 방화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산업지역, 방화지구</li> </ul>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96,933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4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2,2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1,2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428백만원</li> </ul>	
규모	대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3,095.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4,327.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8,45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783㎡</li> </ul>	
	연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4,41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5,61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5,5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8,995㎡</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8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5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일반산업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8.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7.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 이하</li> </ul>
	주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50면, 37,379㎡ (지상 200면, 지하 950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8면, 17,676㎡ (지상 438면, 지하 540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08면, 24,365㎡ (지상 476면, 지하 632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00면 이상, 24,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800면 이상, 25,600㎡</li> <li>신청사 주차장: 550면 이상, 지상 30면 내외</li> <li>문화스테이션 주차장: 250면 이상</li> </ul>
건물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 2층~지상 9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청사: 지하 2층~지상 16층</li> <li>의회청사: 지하 1층~지상 5층</li> <li>보건소: 지하 1층~지상 3층</li> <li>복지센터: 지하 1층~지상 5층</li> <li>문화예술원: 지하 2층~지상 3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사동: 지하 2층~지상 9층</li> <li>의회동: 지하 2층~지상 6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 2층~지상 7층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사: 지하 3층~지상 10층 이내</li> <li>원도진 문화스테이션: 지상 1층~5층 이내</li> </ul>	

# 제 3 장

##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 도출

제1절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 분석

제2절 공공사업 시 갈등 사례 분석



## 제절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 분석

### 1. 공공갈등의 정의

#### 1) 일반적 정의

공공갈등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공적 성격을 띤 모든 갈등이기도 하며, 당사자여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의 기관이 당사자인 갈등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공공갈등규정이 제정되면서 공공성이라는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당사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sup>25)</sup>

#### 2) 갈등의 원인과 구성요소

##### (1) 갈등의 발생원인

공공갈등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역이 발달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발생으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정·완화하기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용·편익에 대한 불공평,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과 정보제공,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 미흡 등 다양하다. 일반적인 갈등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간의 비용·편익에 대한 불일치이지만,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과 정보제공이 갈등발생과 증폭요인으로 작용한다.

##### (2) 공공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공갈등은 갈등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하는 핵심원인, 갈등의 핵심원인의 배경이 되는 배경원인 그리고 핵심원인과 배경원인을 연결시키는 매개원인 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sup>26)</sup> 공공갈등에 영향을 주는 직접요인으로는 행정, 이슈, 행위자로, 간접요인은 환경으

2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16.01.실행)

로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sup>27)</sup>

행정적 요인은 갈등 당사자이자 갈등 해결의 주체인 공공이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나 절차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것들을 운영할 역량과 자원이 충분한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갈등이슈요인은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 사업 자체의 본질적 특성과 영향 및 이와 관련해 갈등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쟁점과 이슈의 내용을 의미한다. 갈등행위자요인은 상호 대립적인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과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요인은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의미한다.

### 3) 갈등의 형태 및 전개

#### (1) 갈등의 유형 및 요인

갈등은 분야 또는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제한된 자원배분(Pondy, 1967), 조직 또는 기관간의 갈등(Katz, 1964), 갈등당사자의 조직구성 상태(Lan, 1997), 갈등을 일으키는 목적과 당사자(Jhen, 1995)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표 3-1] 공공갈등 유형 이론

구분	세부 내용
Pondy(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협상모델의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li> <li>• 관리적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관료적 모델</li> <li>• 기능적 관계나 협력적 요구차원의 조직적 모델</li> </ul>
Katz(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부단위간 다툼 /</li> <li>• 기능적 단위간 다툼</li> <li>• 수직적 다툼</li> </ul>
Lan(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화 되지 않은 갈등(unstructured)</li> <li>• 일부조직화 된 갈등(partially structured)</li> <li>• 잘 조직화된 갈등(full structured)</li> <li>• 혁명적 갈등(revolutionary conflict)</li> </ul>
Jhen(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간의 인간관계에 의한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li> <li>•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에 의한 임무갈등(task conflict)</li> </ul>

<자료>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p.25, 발췌 후 가공

26)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이재광 외, 경기개발연구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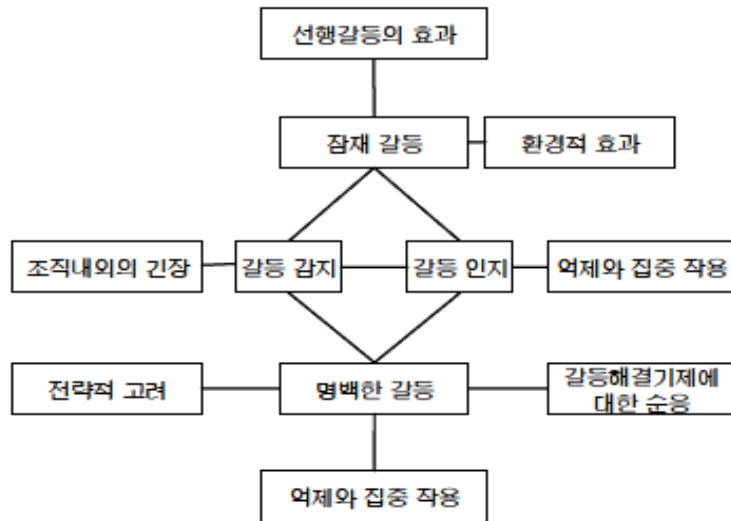
27)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이순자 외, 국토연구 74호 (2012)

지역개발과 관련한 갈등은 크게 갈등 내용과 갈등주체에 따른 갈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갈등 내용에 따라 이해갈등과 관할갈등으로 분류된다. 이해갈등은 주로 입지갈등과 관련이 있어 비선호시설에 대한 반대, 유치시설입지 또는 토지이용의 경쟁, 환경보전과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한 토지이용의 분쟁, 지역개발에 대한 인근 지역사회의 반대 등이 있다. 관할갈등은 대부분 공공시설의 비용배분, 공공시설 관리, 건설 및 허가와 관련된 협력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갈등의 정도와 결과에 대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이슈와 그 이슈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 갈등이 미치는 범위를 측정가능하며, 범위에 따른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대상들을 설정이 가능하다.

(2) 갈등 전개과정

갈등은 선행갈등의 효과→잠재갈등→감지 또는 의식된 갈등→명백한 갈등→갈등종료와 사후대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각 단계마다 외부 환경적 효과와 조직 내외의 기강도, 갈등당사자의 진행전략고려 및 갈등해결기제에 따라 유기체처럼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갈등이 해소된다.

[그림 3-1] 갈등전개과정



<자료>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p.28

## 2. 갈등관리방법

갈등이란 것을 지역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게 된다. 공공갈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공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운영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해지면서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또한, 지방정부간 조정과 합의 및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 해결 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1) 일반적인 갈등관리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갈등관리는 갈등해결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 3자의 개입여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 (1) 협상(Negotiation)

민간영역에서의 협상이란 공동결정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는 이해관계,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 공동의 문제해결과정 3가지 핵심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해관계는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협상이란 것은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합의가능영역이 있으며, 협상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상대의 문제가 당사자의 문제 일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갈등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 당사자로 존재하기도 하며, 협상의 상대가 불특정다수의 지역주민일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이라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발생될 공익과 침해받을 사익간의 적절한 이익범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갈등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갈등관리가 진행되기도 한다. (협의기구에는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즉, 협상이란 제 3자의 개입이 없이 갈등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실득을 따져가며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는 자발적 합의과정이다.



## (2) 조정(Mediation)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당사자들의 의사소통과 대립되는 문제의 해결을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3자인 중재자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쟁에 대해 관정을 내리거나 해결책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합의하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대안과 실행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에서는 정부(지자체포함)가 갈등관리자인 경우와 정부(지자체포함)가 갈등당사자인 경우로 협상에 실패한 경우 조정을 실시한다. 조정프로세스를 진행할 때에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고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실제 니즈에 초점을두고, 상생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며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조정을 시작한 후 갈등의 원인을 찾고, 실제로 원하는 것(니즈)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해법을 찾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조정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단계로 조정을 접수하고 갈등당사자들에게 조정차명 확인 및 설명과 동시에 진행을 위한 사전약속을 정하는 과정이다. 이후 갈등당사자들의 갈등원인을 정리하고 갈등원인간 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당사자들의 니즈를 찾기 위해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는 피드백미팅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대안 대출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에는 갈등원인별 대안을 탐색과 평가를 통해 선택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실시한다. 이후 갈등당사자들은 합의안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을 마무리한다.

## (3) 중재(Arbitration)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가 갈등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조정중재자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중재자의 역할이 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압적인 갈등해결과정이다. 제3자인 중재자는 조정 프로세스에서처럼 갈등당사자 상호간의 주장을 참조하여 니즈를 중심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확인과는 달리 중재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갈등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갈등당사자들이 중재자의 제안을 수용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다. 중재를 시작

하게 되면 갈등당사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갈등원인을 분석한 후에 중재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당사자들이 수용할 경우 서명을 하여 갈등해결방안을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절차를 보면, 중재는 민간전문기관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요청하고 기존 법·제도에서 활용되는 중재위원회관련 기존절차를 우선시한다. 중재자는 갈등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면담을 통해 주장하는 바를 경청하고 갈등원인을 분석하다. 분석한 결과로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되, 당사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않고 중재자 단독으로 최종안을 결정·제시한다.

#### (4) 진행(Facilitation)

퍼실리테이션은 집단이 회의 또는 워크숍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를 촉진하여 중립적인 태도로 도구와 기법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가를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며 그룹의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 과정을 설계하고, 그룹의 목표와 문제점을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3자가 개입을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과 합의안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조정안이나 중재안과 같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제시하여 절차적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갈등 당사자들이 그룹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의견 수렴하고 갈등관리하는데 있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 (5) 중립적 사실조사(Neutral Fact-Finding)

제3자가 갈등의 원인을 갈등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때 제3자인 사실확인자는 조정에서처럼 갈등당사자 상호간의 주장을 참고하고 니즈를 확인하지 않는다. 중재와 같이 사실확인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갈등당사자들도 대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일부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진행되는 조사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요청

하여 이를 통해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만일 이 결과가 갈등당사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의 단계로 진행된다.

## 2) 주민참여 기법

공공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중재 혹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에 연관되고, 공공사업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역 주민들이 받다보니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사업에 대한 공론화하거나 관련 갈등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 이후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갈등관리가 갈등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해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갈등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67%의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내었다.<sup>28)</sup> 이렇듯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거나 발생 후 해결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해지고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갈등의 쟁점을 공론장에서 논의

공론화는 올바른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사회적인 이휴 및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일반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 전문가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 및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며,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론화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한계를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에 있어서 맥락에 맞는 공론화 절차의 설계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오프라인 공론화 실시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인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공론화의 결과로 도출된 권고가 본래의 지방자치단체 정책구상의 방향과 불일치할 경우에 대한 행정적인 운영의 부담감이 존재하고 좁은 지역적 범위로 인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과정 운영에 대해 법령·조례 등의 근거

28)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2020) p.92에서 발췌

부족으로 지방의회의 설득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고려하여 공론의 장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공론화의 주요쟁점 관련 부서가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다면, 중립적인 제3의 부서가 공론화 절차를 주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갖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심의회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취임초기 또는 새해 종합계획수립 시점에서 일부 주민이 스스로 정책의 아젠다 개발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2) 주민참여형 정책구상 및 계획

지역사업 혹은 정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민이 제안을 하였지만, 이후 정부에서 정책화되는지 유무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 혹은 일반 거주민이 아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역대표의 참여로 인해 의견의 일반화, 그리고 정부나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양한 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운영하지만,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운영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 확보만을 위한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민의 제안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추첨, 무작위 표본추출, 자발적 참여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아젠다 개발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나 온라인의 공론장을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평가개선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채택, 정책변화 실적이 나오도록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수의 주민이 지지한 제안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위해 기민이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 혹은 재원할당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재정과 예산을 논의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을 핵심 이해관계자 활

동주체로 인정하여 분권화가 가능하고, 주민-지자체 간의 쌍방적이고 주민간의 수평적 소통과 책임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한 정보에 주민의 접근이 개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기결정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운영사례로는 서울시, 서울 은평구, 울산 북구 등이 있으며, 재정투명성의 증대 및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주민이 직접 사업과 정책결정에 참여함에 따라 민주주의 학습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행정-주민, 주민들 간의 소통의 창구이면서 책임과 협력을 통해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에 예방이 가능하다.

[표 3-2] 참여예산의 정의

구분	정의 및 도입배경
B. Wam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이 공적 자원의 배분에 숙의와 협의를 하는 의사결정과정</li> </ul>
A. Marquet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시민사회조직)이 재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참여할 권리를 갖는 참여민주주의 유형</li> </ul>
PB-Unit, M.Basso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이 예산의 우선순위 및 지출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및 그 이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li> </ul>
곽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li> </ul>

<자료> 2019 서울갈등포럼 자료집(2019) p.314

#### (4) 대안적 해결방식

갈등이 복잡해지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타협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도입되었다. ADR은 앞서 이야기한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으로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미국에서 시작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공공갈등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갈등당사자로 관련되어 있지만, 힘이나 권력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갈등해결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표 3-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특징

참여모델	주요 특징	
포커스 그룹	절차개요	토론→의견확인→보고서 작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형식의 소규모 토론 모임</li> <li>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 확인</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에 의한 의도적 선발(다양성, 균형성 고려)</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통 시민의 견해가 확인 가능하며, 특정 문제에 대한 질적 의견 수집에 용이</li> <li>그러나, 소수의 참여자로 인해 낮은 대표성과 일반 시민의 결과 수용도가 부족</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유형의 갈등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며 보통 시민의 심층적 의견 확인 가능</li> </ul>
공론조사	절차개요	기준조사→토론회→의견조사→발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론조사와 숙의 과정의 결합</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성이 있는 일반시민</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식과 정보가 제공된 시민에 의한 질적 의견조사</li> <li>그러나, 다수의 참여자로 인한 심사숙고하는 깊이는 부족하며 비용·효율성이 낮음</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지역적 범위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가치갈등·이익갈등 모두 적용이 가능</li> <li>대안 선택이 가능한 복잡한 문제에 적용이 가능</li> </ul>
시나리오 워크숍	절차개요	시나리오 작성→공동의 전망 수립→공동의 실행계획 수립→공공기관에 전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시민이 지역전문가로 참여</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대표(공공기관, 기술전문가, 업계, 일반시민의 대표자)</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시민의 역할을 중시(다른 이해관계자 대표와 대등한 역할)</li> <li>그러나, 합의가 어렵고 비용·효율성이 낮음</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갈등, 가치갈등·이익갈등 모두 적용 가능</li> <li>미래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서 다양한 유형의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li> </ul>
규제협상	절차개요	협상→합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대표와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으로 규칙을 제정</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대표(환경단체 등 공익단체, 일반시민 포함)</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하여 참여의 효과가 크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호적 관계 유지가 가능</li> <li>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가 어렵고,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가치 갈등에는 부적합</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지역적 범위의 갈등과 이익갈등에 적용 가능</li> <li>이해관계인이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수가 제한적인 경우 적용이 가능</li> </ul>

CPS	절차개요	문제의 정의 및 분석→해결방안의 제안 및 평가→해결방안의 결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대표(환경단체 등 공익단체, 일반시민 포함)</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하여 참여의 효과가 크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호적 관계 유지가 가능</li> <li>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가 어렵고,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가치 갈등에는 부적합</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지역적 범위 갈등과 이익갈등에 적용 가능</li> <li>창의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적용가능</li> </ul>
라운드 테이블	절차개요	준비절차→전문가 프리젠테이션→원탁회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문제에 관해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자 대표(공공기관, 일반시민, 환경단체 등)</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단체 및 일반 시민이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하여 참여의 효과가 크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호적 관계 유지가 가능</li> <li>그러나,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참여가 어렵고,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므로 가치 갈등에는 부적합</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지역적 점위의 갈등과 이익갈등에 적용 가능</li> <li>창의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li> </ul>
시민자문 위원회	절차개요	정보제공→토론→결론 도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출된 시민의견을 공공기관에 직접 전달</li> </ul>
	참여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관계인, 시민대표(상반된 견해 확보)</li> </ul>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반영 가능성이 크지만, 대표성의 확보와 결정에 대한 일반 stials의 수용성 확보가 제한</li> </ul>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갈등, 이익갈등·가치갈등 적용가능</li> <li>견해가 다른 개인이나 그룹 간 합의도출에 적용 가능</li> </ul>

〈자료〉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14) p.38, 발췌 후 일부 가공

### 3. 공공사업상에서의 갈등유형

공공사업상에서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지역차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반대나 지역 내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 1) 국가적 정책결정에 의한 갈등

국가 차원에서 군 시설, 원자력 기타 발전시설, 철도, 공항 등 대규모 국가 시설 입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타남과 동시에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의 공공편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거나 주민투표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 장에게 시설입지의 찬·반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국가의 정책 계획수립과정에 지역의견 사전수렴 절차의 부재로 국가-지방간 대립구도가 발생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찬·반 결정권한이 없을 경우 피해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지원, 민원 전달 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2) 지역사업 추진에 의한 갈등

레저 및 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장묘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및 SOC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편의를 위협이지만, 불편은 설치 지역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간에 협상을 하거나 공청회·설명회·간담회·주민투표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갈등영향분석을 활용한다.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민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sup>29)</sup> 단체장의 당선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지지로 인식되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었지만 사업은 추진되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비선호시설로 인해 갈등이 예견되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도시문제가 증폭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29) 2019 서울갈등포럼 발표자료 p.297에서 발췌



### 3) 주민들 간의 갈등

도시계획, 도로건설, 지하철건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한다.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되거나, 건립 대상지 등 지역유치경쟁에서 나타나는 데 이러한 유형의 지역갈등은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개인 혹은 단체)간의 협상을 하거나 공청회·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하지만, 갈등심화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 및 중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행정차원에서 관련부서가 해결해야 할 민원으로 남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대해 민원으로 연결되어 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로 연결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갈등발생 후에 정부나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도 이미 추진된 갈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 4. 경기도 갈등관리 종합계획<sup>30)</sup>

### 1)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배경

경기도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도민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7년 기준 18건에서 2020년 기준 35건으로 증가) 2019년 경기도민 갈등해결 우선순위 인식조사결과, 주요한 갈등소재로는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24.4%),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지역 간 갈등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외 혐오시설, 교통시설, 경제조정, 학군조성 순으로 갈등해결의 필요성이 인지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공공갈등관리의 협조체계가 필요하였고, 경기도에서는 2013년부터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관리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2019·2020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2) 경기도 갈등관리 비전체계

경기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은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30) 2020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에서 발췌함

경기도실현'이라는 비전을 두고 이를 위해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상생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미션으로 설정을 하였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체계 구축, 예방적 갈등관리, 갈등관리역량 강화, 갈등 협치 기반 조성, 도민 참여와 소통 확대 등 5개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자문단 활용, 갈등매뉴얼 제작을 통해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전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갈등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갈등관리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전문가 양성, 정책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였고, 경기도 및 시·군, 전문기관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 및 시·군간 중재·조정,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갈등 협치 기반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한다. 공공갈등관리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정책계획·결정·집행과정상 갈등예상 및 발생되면 정책화 한 후에 갈등 진단 및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하여 모니터링, 갈등유발요인관리 등 이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 3) 세부사업 추진개요

#### (1) 갈등예방과 소통 협업의 맞춤형 갈등관리

##### ① 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한 사전갈등진단

도정 사업추진 전 사전 갈등진단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매년 1~3월에는 정기적으로, 이후에는 수시로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다. 주로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신규 도정주요 사업은 수시로 진단을 실시한다. 투자심사 대상사업(50억 이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실·국장 이상 전결사업(비예산 포함),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중앙-경기도·광역 간 갈등발생 정책사업 및 사업부서 요청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진단철차 과정으로는 민관협치과에서 갈등진단 대상사업 중 갈등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의견 수렴하여 1차 선정 후

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를 작성한 후 적정성 검토와 함께 등급을 분류하여 민관협치과와 사업부서에서 공동관리 할지 자체적으로 관리할지 판단한다.

### ②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갈등대응계획 수립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갈등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추진한다. 사업부서들을 대상으로 갈등대응계획 작성 교육을 실시한 후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대응계획을 작성 및 검토하여 실행가능성·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최적 계획안을 위원회의 결로 확정한다. 대응전략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면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되, 사안이 장기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

경기도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및 시·군간 갈등에 대한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을 위해 「경기도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경기도 내 시·군 상호간 사무에 대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갈등 심화 시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으로 이해관계 정리와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는 「경기도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 제11조에 의거한다.

### ④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당사자 외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합의절차의 가능성 여부 및 절차를 설계하여 갈등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경기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관리 전문 업체와 용역계획 후 시행하거나 갈등조정 관련 전문성(능력) 보유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할 시에는 공공정책의 추진배경·개요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⑤ 갈등조정을 위한 갈등현안회의 개최

갈등의 내용이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방향에 대한 재건토가 필요한 경우 갈등대응 사전에 정책조정을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대면하기 전에 갈등이슈 및 상황과 갈등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갈등대응 방향과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⑥ 조정과 중재를 위한 갈등전문가 매칭

갈등전문가로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쟁점사항 분석, 합의형성절차에 대한 멘토링과 함께 경우에 따라 협상 촉진과 중재 역할까지 수행한다. 감정의 격화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어렵거나 갈등상황이 복잡하여 갈등분석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협의체 구성 및 합의 형성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2)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협치 기반 조성

### ① 주요 현안별 갈등조정관 전담 관리제 운영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도정 주요사업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담 조정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담 관리제는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따른 갈등, 은평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에 따른 갈등, 이천시-음성군 간 비선호시설 설치갈등, 광주·김포 물류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 광주·김포 물류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 용인동백지구 교통시설 개선갈등, 서울시 기피시설(장사·화장시설)운영에 따른 갈등, 위례신도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7건을 운영하고 있다.

### ②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 운영

다양한 갈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기법 공유로 갈등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집합·사이버 교육을 융합하여 도·시·군 갈등관리 담당자 및 사업 추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거나 공공갈등 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한다.

### ③ 도·시·군 협치를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 개최

경기도-시·군 간 공공갈등의 증가와 더불어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시킨다. 워크숍은 우수 갈등해결 사례 발

표 사전 공지하고 갈등전문기관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워크숍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시·군 및 공공기관의 참여유도를 위한 사전 협조를 요청한다.

#### ④ 청소년 갈등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 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 교육프로그램과 모의 갈등관리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갈등역량 연극, 갈등관리 모의 경연대회, UCC영상제작 발표회, 우수작품 시상 등을 추진한다.

#### ⑤ 위례신도시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생활권과 행정권역의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여 구성한다. 2017년 9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019년 12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출범 및 이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⑥ 갈등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사회현상의 복잡화와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갈등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므로 실시한다. 갈등전문기관에서는 갈등현안에 대한 예방 또는 해결 방안 컨설팅,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및 자문,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⑦ 도 및 시·군 상생을 위한 갈등관리 및 조정

중앙-기초, 기초-기초 간 갈등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부서와 시·군에서 연 2회 갈등 현황조사 및 조정대상을 선정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시·군간 갈등·분쟁을 조정한다.

### 4) 갈등대응 사례

#### (1) 수원 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 ① 사업개요 및 갈등 내용

스마트폴리스 조성 및 이전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업을 실시(사업기간 : 2013

년~2024년)하였으며, 국방부·공군본부가 협의하여 신 군 공항 건설사업을 실시하고 이전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수원시·국방부·공군본부·이전대상지역 지자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집회·집단시위·의회 결의문 채택 등의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표 3-4] 수원 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이해관계자		주장 내용
지역주민		• 군 공항 이전 반대 (이전지역 해당 주민)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추진단	• 군 공항 이전 추진
시민단체		•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여러분야 시민단체의 군 공항 이전 반대

자료 : 2020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2020), p. 42

## ② 갈등 진행과정

국방부의 주관으로 경기도 남부권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전설명회(2015.05.08.)이후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결의문 등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 지자체 회의(2016.09.13.) 통보 이후 해당 지자체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화성시의 경우 서부권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군 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명 발표 등으로 반대 활동 추진 중이었다. 이 후 2017.02.16.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결과 통보 후 화성시·시민단체·주민 반대 활동 확산 및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 ③ 갈등 해소방안

사전 갈등영향검토 용역 결과물, 유사사례 분석, 기존 갈등관리매뉴얼 등을 토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 적합한 갈등대응 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예비이전 후보지별 실태조사 및 해당 주민 의견 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등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였다.

## (2)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 ① 사업개요 및 갈등 내용

화성시 매송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였다. 갈등은 2014년 9월 인터넷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 및 집단시위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표 3-5]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이해관계자		주장 내용
지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매실 택지지구와 인접한 화성 장사시설 부지의 이전 요구</li> <li>- 숙곡리 부지와 호매실 택지지구는 직선거리로 2.2km로 근접</li> <li>• 화성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서수원주민 동의절차 시행</li> </ul>
수원시	시민소통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수원 주민들의 정서적 우려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대안없는 반대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li> <li>•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원만한 갈등해결 필요</li> </ul>
	위생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광고 택지지구 및 용인과 인접한 연화장을 운영하는 수원시 입장에서 타 지자체의 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음</li> </ul>

자료 : 2020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2020), p. 44

### ② 갈등 쟁점

서수원 주민은 화장장 환경오염 및 지가하락이 우려되고 기피시설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주장하면서 화성 종합장사시설 부지 이전을 요구하였다. 또한, 숙곡리 부지 선정에 대해 건립추진위원회의 위법성을 제기하였고 서수원 주민 70%가 주민동의절차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화성 종합장사시설 부지 이전은 불가하며, 서수원주민 동의 절차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서수원 주민은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조작하고 생태계 현지조사표 허위 작성을 제기하면서 전력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작성과 승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수치는 단순 오류이며,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③ 갈등 해소방안

비대위에서 종합 장사시설 부지 이전 외 대안제시가 없어, 현실적인 갈등 해소가 어려우나 서수원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화성시와 경기도에

공동 화장장 건립관련 투명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칠보산 정상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공동 화장장 건립관련 정당한 서수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서수원 주민에 대한 정서적 보상(안) 강구 등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및 상호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 (3)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사업

#### ① 사업개요 및 갈등내용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감명령 처분한 성인·소년사범들을 대상으로 성남·광주·하남지역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는 출석상담교육 대상자와 직원이 찾아가는 현지방문지도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이들 가운데 10%차지하는 성범죄자 부분이 집중되면서 분당지역주민(특히 학부모)들과 법무부, 성남시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2000년 성남보호관찰소는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하여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전하였다. 비선호시설 중하나로 성남시는 외곽지역으로 이전과 함께 버스노선도 조정안을 함께 법무부에 제시하였으나, 2013년 분당구 도심지역인 서현동으로 성남보호관찰소가 기습적으로 이전하였다. 보호관찰소를 업무시설에도 들어올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2012.12.12.)되면서 성남시 변화가 한복판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오게 되었다.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며, 야탑동으로 이전계획이 되어있지만 야탑동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향후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 ② 갈등 진행과정

기습이전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하였고,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가 20일 이상 정상업무를 보지 못하였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합동대책기구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학부모 6명, 법무부3명, 성남시 공무원 3명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 ③ 갈등 해소방안

보호관찰소의 관찰·교육 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그곳이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3년 12월 성남시청 청사 4층에 임시 행정사무소를 입소하여 행



정담당 직원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현재 보호관찰소의 새 입지선정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민관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 5) 갈등관리 사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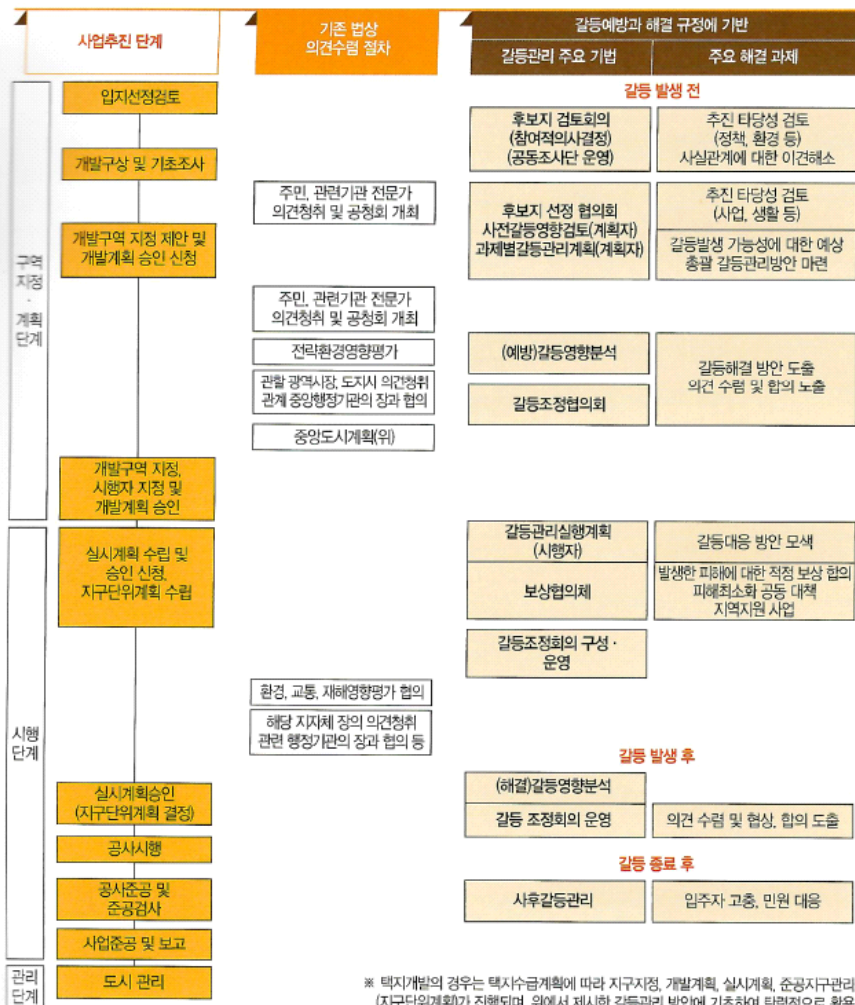
공공갈등에서 발생하는 사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갈등은 수원 화성군 군 공항 이전 사업,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사업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공공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입지 적정성들을 판단하여 판단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반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식적인 반대 서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들을 형성하여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선호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수원 화성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갈등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여 입지를 검토하고 사례 분석 하는 등 적합한 갈등대응 방안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해 반응하였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비선호시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설들로 인터넷 민원을 시작으로 집단시위를 하는 등 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는데, 부지 이전 외의 명확한 대응방안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명백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등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에 중점적으로 두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사업의 경우에도 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입지선정부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시작되었다. 업무를 진행할 수 어려울 만큼이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설득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전·건립하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초기단계인 부지선정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게 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는 선호시설보다는 비선호시설의 경우에 더 대립이 심오하게 발생하게 된다. 고양시 신청사 이전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투명한 사업내용 공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인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제3자 중재의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재 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와 주민들간 갈등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주민배심원제의 구성을 진행한다.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더 나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논란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어 좀 더 원활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림 3-2] 경기도 갈등관리 절차



※ 택지개발의 경우는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준공지구관리 (지구단위계획)가 진행되며, 위에서 제시한 갈등관리 방안이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활용

## 제2절 공공사업 시 갈등 사례 분석

갈등은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로 발생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Simmel, 1955; Coser, 1956; John, 1984; 임정빈, 2007). 정책이나 사업 등의 집행이 가져올 논쟁적인 상황과 불확실성은 님비갈등(NIMBY)과 핼피(PIMFY)시설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임정빈, 2011). 핼피(Please In My Front Yard, PIMFY)는 금전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이나 시설 유치 등을 놓고 지역 간 벌이는 집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용어이다. 핼피시설 갈등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유리할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핼피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 간 핼피시설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핼피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행정기관의 이전이나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회기간시설,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유·무형재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핼피시설 갈등의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이 많고, 갈등주체가 지자체와 주민들이 결합되어 참여하는 성향을 보인다(김도희, 2003; 장우영·임정빈, 2006; 임정빈, 2011).

핼피시설 갈등 중 행정기관의 이전이나 건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사례로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갈등 사례, 통합창원시 청사 유치 갈등 사례, 울산시 울주군 청사 이전 갈등 사례, 경기도청 이전 갈등 사례 등 4가지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사례별 갈등의 개요와 전개과정, 이해관계자와 입장,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갈등사례분석 내 갈등전개과정은 사건일지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갈등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갈등 분석 자료는 언론 보도자료, 주요 연구논문 등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갈등은 유기체적인 특성이 있으며, 갈등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소멸되기도 하지만, 갈등이 재발하기도 한다. 이에 본 사례연구는 2021년 3월을 조사시점으로 하며, 시점을 기준으로 갈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1. 통합창원시 청사 유치 갈등

### 1) 갈등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는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지역이다. 2010년 2월 17일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 이름을 ‘창원시’로 결정하고, 시청 소재지는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통합시 출범 이후 통합시의회가 기본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따져 결정하되,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군대학 터를 공동 1순위로, 창원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였다(한겨레, 2012.01.19.). 이후 통합창원시의 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 여론이 셋으로 갈라졌으며, 소지역주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시의원들은 2011년 12월 13일 열린 회의에서 마산 의원들이 새시청을 마산에 두자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창원 의원들은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회의를 공전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에 더불어 진해 의원들은 통합된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겠다는 주민투표 결의안을 제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서울경제, 2011.12.14.). 3년간 통합창원시 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었고, 2013년 4월 통합시 청사를 현 창원시청으로 확정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조례 역시 5분만에 기습 의결한 것으로, 본회의장 정회 상태인데다가 시의원들도 의자에 앉지 않은 통과라면서 효력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3.04.23.). 그러나 창원시는 시의회의 기습의결 창원시청사 소재지 조례안에 재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창원시청의 부지가 확정되었다(경남일보, 2013.05.02.).

## 2) 갈등전개과정

[표 3-6] 갈등전개과정

시 기		전 개 과 정
발단	2010 2	7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잠정결정
	2010 3	통합창원시청사 유치진해법 추진위원회 발족
고조	2011 11	옛 창원시의원 창원·마산·진해 3개시로 분리하는 건의안 발의
	2011 12	마산시의정동우회 통합시청사 소재지 마산에 유치하도록 기자회견
	2011 12	통합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발표
	2011 12	창원시 범시민연합에서 모금 및 서명운동 돌입
	2012 12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해소	2013 1	창원시 청사 해결협의회 회의 개최
	2013 4	창원시 마산과의 상생 비전과 전략 발표

## (1) 갈등의 발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인 통합 창원시는 전국 첫 자율통합시로 2010년 7월 1일 출범하였다(동아일보, 2010.06.29.). 통합시의 시청사 위치를 두고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준비위원들은 서로 자기 지역에 통합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함에도 새청사 위치에 대하여 3개 안만 정하고 차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부지로 논의되는 3개 안은 1순위는 마산종합운동장, 2순위는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3순위는 창원 39사단부지였다. 2안으로는 1순위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부지, 3순위 마산종합운동장이, 3안으로 1순위 공동으로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 창원 39사단부지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3개 안에 관한(권고)안을 정한 뒤,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통합시와 통합시의회가 용역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노컷뉴스, 2010.12.17.).

## (2) 갈등의 고조

창원시는 세 개의 지역이 자율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새로 조성될 청사 소재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며, 청사의 위치 뿐 아니라 통합시 분리론까지 등장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1년 창원시의의회는 1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새청사 연내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과 함께 창원시의 시의원이 제출한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심의할 것을 밝히며 재분리 촉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한겨레, 2011.11.03.).

통합준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새 청사 소재 예정지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옛 진해육군대학 터가 공동 1순위며, 창원 39사단 이전터는 2순위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결정하기로 통합 이전에 옛 창원·마산·진해시 등 3개의 의회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시의원들은 통합창원시의 시청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경향신문, 2011.11.03.). 마산·진해지역 시의원들은 “민심분열을 막고 화합을 위하여 하루빨리 통합 새청사 예정지를 확정해야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창원지역 의원들은 “새청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2012년 10월까지 신청사 위치를 기다린 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통합시 출범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옛 3개시 시민 갈등만 커지게 되었다. 옛 마산지역은 통합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갈등을 고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시의 화합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들은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은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하면 된다”면서 “마산지역에서 통합시청사 유치 범시민연합을 결성하는 등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통합시청사를 마산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2011.11.01.).

한편 옛 마산권 주민들은 통합시청사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옛 마산시의회 시의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마산시의정동우회는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시청사를 마산으로 조속하게 결정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며,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합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명칭과 청사위치 선정 등 중요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은 시의원들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산합포구 어시장 등 구도심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통합시청사 유치를 위하여 시민모금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통합시청사가 마산으로 오지 않으면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시를 분리하고, 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통합시청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연합뉴스, 2011.12.06.). 일부 주민들은 각 지역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 과 시의원 등 통합의 주체들이 통합 과정에서 잘못 진행되었던 현안을 악용하고 있다면, 새청사의 위치는 창원·마산·진해통합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해야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지역의원들은 지속하여 통합 창원시 청사 유치를 주장하였다.

### (3) 갈등의 해소

2011년부터 통합 창원시 시청사 위치 갈등은 지속되었고, 많은 갈등을 가져왔다. 창원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조례 개정안은 통합 이후 지역 최대의 현안인 청사소재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간 대립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청 위치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배경에서 제출되었다. 창원시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개정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7일 조례안 제출에 앞서 내부심의 절차를 밟았다(한겨레, 2012.12.05.). 2013년 1월 29일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창원시의회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옛 창원·마산·진해지역에서 각 3명의 시의원이 참여하였다. 협의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통합 창원시 청사 건설과 더불어 새로운 야구장 건설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못하여 통합 시청사 건설의 속도가 나지 않았다(경남도민일보, 2013.01.30.). 계속하여 창원시청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자 창원시는 2013년 1월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3월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원시 청사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마산시의 분리주장은 계속되었다. 2013년 4월 3일 창원시는 ‘마산 부흥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마산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산 발전방향과 도시관리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마산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산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략이었다. 이는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옛 마산지역 주민들이 시청사 소재지 갈등으로 마산시 분리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마산지역 주민들은 마산 분리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는 명칭·청사·야구장 소외임을 주장하였다(경남도민일보, 2013.11.20.). 이에 창원시는 ‘마산 제2전성시대 도약’을 발표하였으며, 해양르네상스 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구향지구 친수공간 조성,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마산 로봇랜드 조성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 르네상스에는 텐소그룹 전용단지 조성, 마산 자유무역 지역 고도화, 제2 자유무역지역 조성, 로봇 비즈니스 벨트 유치 조성, 가포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 포함되었다(경남일보, 2013.04.23.).

2013년 4월 23일 개최된 창원시 열린 제27회 임시회 본회에서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통과되었으며, 현재 통합시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창원시청을 통합시 청사로 확정하는 의미를 담은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경남일보, 2013.04.23.). 조례안의 기습 통과로 인하여 창원시 통합청사는 현청사로 확정되었다. 이후 효력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현 창원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확정하는 조례안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고, 창원시 역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며 갈등은 해소되었다(연합뉴스, 2013.04.29.).

### 3) 주요 이해관계자

[표 3-7]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주체	주요 입장(역할)
창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의회가 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하지만 지역별로 시청사 유치 열망이 강해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음</li> </ul>
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를 창원시로 결정하는데 대해 강력 비난</li> <li>마산지명은 옛 조선부터 지명이 공식화되었고 역사적·객관적으로도 증명된 지명으로 마산지역 분리를 주장</li> <li>창원시의 시청사, 진해시의 야구장이 건설되지만 마산시는 지역발전에도움을 받지 못함</li> </ul>
진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청사 위치를 연내 결정하자는 입장</li> </ul>

#### (1) 창원시

창원시는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는 단계의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미 통합시청사의 위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청사를 마산지역으로 유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2012년 12월 5일 “통합 이후 지역 최대 현안인 청사소재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간 대립·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더는 시청 위치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7일 시의회에 ‘청사소재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청사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창원시는 통합시의 명칭을 갖게 됨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 (2) 마산시

마산시는 통합시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통합시청사를 유치하지 않을시 마산시를 분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청사입지를 마산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통합시 출범 이전에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시청사 소재지 공동 1순위인 마산공설운동장을 시청사 소재지로 확정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1순위인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에는 창원시가 새 야구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시청사 소재지 1순위는 마산공설운동장만 남았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주성지 마산에 시청사가 유치되지 않으면 옛 마산시를 통합시에서 분리하라고 요구하였다. 마산시는 옛 마산시 시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 제기돼 해당지역인 마산과 진해시민들에게 심한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면서 통합위원회가 시 명칭을 가칭 '창원시'로, 통합청사도 현 창원시청사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3.03.15.). 마산시는 명칭과 통합청사는 창원시로, 야구장은 진해시로 결정하는데 반하여 마산시가 얻은 것은 없다면서 마산시를 위한 시설이 없을 경우 마산시 분리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3) 진해시

진해시는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3개 시 통합 과정에서 통준위는 시청사 부지로 마산공설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부지를 공동 1순위, 창원 39사단 부지를 2순위로 정하였다. 사실상 진해시는 통합준비위원회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며, 공식적으로 진해시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통합시청사 유치를 원하고 있었지만, 크게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해시에 야구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시청사 유치의 열기는 사라졌다.

## 4) 갈등의 주요 이슈

### (1) 경제적 차원

통합 창원시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및 경제력, 복지수준 등 전반적인 규모를 맞추어야 한다. 창원

시에 비하여 인구나 경제적 규모가 작은 마산시와 진해시는 통합을 추진한 이후 창원시가 명칭, 임시청사 등을 가져가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마산 및 진해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시가 되었지만 즉각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 통합 창원시의 발전은 지역의 경제를 함께 부흥하는 전략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지역은 산업경제, 마산지역은 해양문화, 진해지역은 관광물류를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연합뉴스, 2010.06.28.).

## (2) 절차적 차원

통합 창원시는 자발적으로 통합한 지역이다. 그러나 통합 출범 준비과정에서부터 통합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시청사 유치 갈등은 지역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통합 창원시는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의 찬성만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남아있었다. 또한 창원시와 통합한 마산지역과 진해지역 주민은 창원시가 명칭을 가져간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하였다. 이에 주민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에 불구하고, 통합 시청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통합 창원시로서 통합 시청사 유치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통합 창원시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합 창원시의 논의부터 혼드는 행위였다. 이에 통합 창원시의원들은 절차적으로 통합 시청사의 건설과 명칭, 야구장 유치 등을 완벽하게 진행해야 함에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 등으로 조례안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게 하였다. 시의회는 기존의 통합위원회와 지역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현재 시청사를 통합시청사로 사용하는 조례를 기습적으로 통과하였으며, 이에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지역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날치기로 통과된 조례를 그대로 상정하였다.

## 5) 갈등 완화 기제 및 정책적 함의

사실상 통합 창원시청사 건설을 위한 갈등 완화 기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시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은 계속되었고, 결국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갈등이 마무리 되었다. 사실상 통합 창원시청사가 현재 창원시청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중 법제도적인 해결

은 가장 갈등이 상흔이 오래 남는 해소방식이다. 주민들은 법제도적 해결로 인하여 갈등에 관하여 다시 논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며, 지역에서도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만 갈등의 상황을 다시 해결할 기제를 갖게 된다. 통합 창원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지역의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향후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해결보다는 합의에 기반을 둔 협상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는 조례안의 가결로 마무리되었으며, 통합행정구역 시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못하였다. 창원시 의원들은 새로운 청사의 필요성, 제도적인 절차 등을 무시하고 통합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위치도 무시하였다. 이는 차후 통합 시청사 건립 이후에도 주민 및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정신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주민들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발전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지역만을 고집하며,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을 혼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 경기도청 이전 갈등

### 1) 갈등 개요

도청사의 광고 이전은 2001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임창렬 전 도지사는 청사 이전을 위해 현재의 광고인 이의동에 행정타운 설치 계획을 세웠다. 후임인 손학규 전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7년에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11만9천200㎡ 부지에 5천6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1만5천7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도의회, 문화복지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을 세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손 전 도지사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행정타운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같은 해 10월 광고 일대에 1차 공동주택 택지공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12년 4월 세수급감을 이유로 이전 사업을 중단했다. 같은 해 11월 재개된 경기도청 이전 사업은 이듬해 11월 재정난으로 인해 다시 발이 묶였다. 청사 이전을 믿고 광고로 이사 온 입주주민들은 사기분

양이라며 김 전 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중단됐던 이전 사업은 2013년 도가 사업비를 1천400억 원 가량 줄인 변경된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6월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개됐고, 2021년 9월 경기도청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2015.10.26.).

## 2) 갈등전개과정

[표 3-8] 갈등 전개 과정

시 기			전 개 과 정
발단	2012	11	• 경기도청 신청사 광고이전 재개
	2015	10	• 경기도청 재정난에 이전 난항으로 갈등 발발
고조	2015	8	• 수원시 도청이전 원안 계획 반발
	2016	10	• 용인시 경기도청 이전 건의
해소	2017	1	• 경기도 광고 신청사 6월 착공 발표
	2017	2	• 경기도청 이전 갈등 일단락

### (1) 갈등의 발단

2012년 11월 경기도는 그동안 중단된 도청 신청사의 광고 이전 사업을 재개하였다. 이에 도와 광고신도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광고신도시 경기도청 신청사 설계를 재개함을 밝혔다(인천일보, 2012.11.09.). 경기도가 수원 광고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발표하자 인구 과밀화를 우려한 광고 주민들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신청사 부지를 용복합단지로 추진하되 주거기능은 최소화하기로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하며, 인구 과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이전 사업은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수원시와 광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기도가 사업을 재개하면서 새롭게 만든 신청사 로드맵이 문제가 됐다. 2015년 7월 발표된 로드맵은 도청사와 주상복합건물, 호텔, 면세점, 음식점, 음악당 등이 2020년까지 입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로드맵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물론 수원시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광고신도시를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했는데 로드맵대로 될 경우 과밀화가 예상되는데다 음악당 등은 당초 시가 광고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중복된다

는 등 이유를 들어 도의 행정을 "즉흥적 구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시와 주민들의 계속된 반발에 도는 결국 계획을 또다시 수정했다. 도는 신청사 부지 내 복합시설 부지 2만7천㎡ 가운데 1만7천㎡를 주거·상업·업무·문화·관광·편익시설 등의 융복합단지로 추진하되 주거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신청사 및 광고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15.10.26.).

## (2) 갈등의 고조

경기도가 수원 광고에 도청 신청사와 함께 호텔, 면세점,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수원시가 반대하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로드맵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각종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광고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혼란을 초래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도는 문화복지시설이 포함된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원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12월 광고를 6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저밀도·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택지개발계획을 세운 시는 도의 로드맵대로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거주 인구가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연합뉴스, 2015.08.20.).

수원시가 도청이전 원안 계획에 반발하자, 용인시는 2016년 10월 11일 정 시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8만㎡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해 달라며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고에 비해 경찰대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적,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용인시는 무엇보다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고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용인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해 광역시가 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다른 지방 대도시처럼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파이낸셜뉴스, 2016.10.11.).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수원 광고 주민들의 반발 등 또 다른 갈등도 우려되었다. 용인시는 경기도청을 유치하면 100억~200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광역시 승격까지 미루겠다고 경기도 신청사 이전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광고 신도시 내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 (3) 갈등의 해소

경기도청은 진행과 무산을 반복하였지만, 2017년 광고 신청사 착공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 개발계획이 담긴 '광고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되고 사업지 진행되었다. 이 계획으로 광고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는 신청사 부지 8만9774㎡와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744㎡, 주상복합용지 8,700㎡로 용도가 변경되어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이다. 이어 광고신도시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광고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4,000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도서관,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이에 앞서 도는 2015년 7월 광고신도시 중심지역의 과밀·과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융합타운 내의 도청사 부지 중 1만2018㎡를 교육청에 무상 임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경기도청 이전은 2001년부터 논의 됐으며 이후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전을 보류했다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해 10월 옛 경찰대 부지 중 LH로부터 기증받는 8만㎡에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면 이전비용과 토지까지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용인시는 기업인과 민간단체가 나서 경기도 신청사 유치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구애에 나섰으나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청의 광고 이전은 5,000억원이라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거절한 결과”라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2017.01.05.). 용인시의 유치 제안으로 논란을 겪던 경기도 신청사가 광고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용인시의 제안에 수원시와 도는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용인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부지를 확정 짓는 과정이었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광고 신청사 사업 승인 발표에도 용인시는 제안을 지속해왔다. 시의 적극적인 활동에 일부 용인시민들은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

인시민 추진위원회'를 꾸려 가세하기도 했다<sup>31)</sup>.

### 3) 갈등 주체별 입장-이해관계자

[표 3-9]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주체	주요 입장(역할)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절약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음</li> <li>•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청사 재 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임</li> </ul>
경기도·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약속행정이 깨지는 우려가 있음</li> <li>• 광고주민과 협의와 갈등조정을 이미 한 상황임</li> </ul>

#### (1) 용인시

용인시의 유치 제안은 시민들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용인시장은 용인에 경기도청을 유치해야하는 근거로 비용절약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주장하였다. 그는 광고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지만,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면적도 광고는 청사 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2021년 준공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만들어지고, 제2경부고속도로의 IC(나들목) 2개가 용인지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편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고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정 시장은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격이 되면서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중부일보, 2016.12.01.).

#### (2) 경기도·수원시

경기도와 수원시는 용인시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광고 주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설계

31) 뉴데일리경제(2017.2.7). '경기도청 이전 갈등 일단락, 6월 광고 착공'.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7/02/07/2017020710056.html>

예산까지 투입돼 내년 6월 착공 예정인 도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한다면 약속행정이 깨진다는 것이 근거이다. 수원시는 용인시에 대응하지 않으며, 경기도 역시 광고주민과 수많은 협의와 갈등조정을 통해 광고 도청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제안을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용인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중부일보, 2016.12.01.).

#### 4) 갈등의 주요 이슈

##### (1) 경제적 차원

도청사의 광고신도시 이전은 임창렬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전을 보류했다가 광고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분양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등을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1년 경기도청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청은 경기도의 중심으로 역할할 행정기관이다. 경기도청이 입주하는 지역은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활기를 예상할 수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데 공공재의 형평성 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넓은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도청이 입주한 이후의 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절차적 차원

경기도 신청사 이전사업은 지난 20여년간 지역 사회의 갈등이었으나, 갈등을 해소하고 청사를 건설하여 2021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뢰행정을 주장하며 수원시 광고에 지어지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수원시에 들어설 경기도청과 관련한 지가 상승, 지원의 문제, 지역민의 민원 등은 경기도청이 입주하고, 활용하는 시기까지 계속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 5) 갈등 완화 기제 및 정책적 함의

경기도는 서울을 사이에 두고 북부와 남부로 나뉜다. 현재 경기도청은 수원시에 위치하기에 북부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서울만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경기도청이 위치할 광고는 발전신도시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진행된 지역으로 경기도청의 입지가 광고신도시의 인프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경기도청의 이전 갈등 완화 기제는 없다. 경기도는 지역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하는 정도이며 주장하는 것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기도청은 건설시기의 잡음도 있었지만, 사실상 입주 후 잡음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신도시의 신청사가 불편할 경우 용인시가 주장했던 경기도청 유치를 반대한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경기도는 도청을 건설한 이후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을 비롯하여 광고신도시에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사업이고 약속이면 타당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전되어 있는 광고신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3. 울산시 울주군 청사 이전 갈등

#### 1) 갈등 개요

울주군청사 설립추진은 2007년 시정연설에서 당시 울주군수가 군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의되었다. 남구에 울주군청사가 위치해 있고, 청사가 노후하여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었다. 울주군은 2007년 1월 군청사 이전 방침을 정하였다. 울주군은 울주군청사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먼저 지역유치신청을 받고 최종결정은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였다. 군청사 후보지는 모두 12곳으로 많은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을 해오면서 서로 자신의 지역으로 군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갈등이 발생하였다. 울산시는 주민 간 유치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을 예상하며, 갈등을 완화하고 군청사 부지결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부지결정은 군청사 이전 계획 단계부터 부지결정방식으로 논의된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 갈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논란을 시작으로 이전 사업 출발 초기부터 제기되면서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김도희, 2013). 이후 2010년 말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청량면 울리 산 162-1번지 일원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2014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전지가 개

발제한구역인 관계로 2013년 공사가 중단되었다(울산매일, 2013.01.03.). 2015년 울주군은 청사 기준 면적 제한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울주군은 군 지역 청사 기준면적을 넓혀달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18.11.10.). 2015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10월 착공하였으며, 2017년 이전하였다(뉴스1, 2017.12.22.). 2018년 울주군 청사가 위치한 청량면을 ‘읍’으로 승격하였다(뉴스1, 2018.01.11.).

## 2) 갈등 전개과정

[표 3-10] 갈등 전개과정

시 기			전 개 과 정
갈등표출기	2007	1	• 울주군 신청사 이전 방침 결정
	2007	4	• 행정실무 지원단 구성
	2007	7	•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갈등혼란기	2007	7	•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연기
	2007	11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
	2007	12	• 해촉 처분과 관련 법적 다툼
갈등심화기	2008	3	• 해촉 부당성을 주장해온 선정위원들과 마찰 발발
갈등고조기	2009	11	• 울주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예정지 선정 용역 방안 추진
	2010	12	• 청량면군 지역선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외사 표출
	2010	12	• 최종부지 결정 무산

### (1) 갈등 표출기

울주군은 2007년 1월 23일 울주군 신청사 이전 방침을 결정한 이후 2007년 2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 선정단으로 선정단으로 군의원 3명, 언론 1명, 공무원 3명 모두 7명을 구성하였다. 2007년 4월 11일에는 울주군 입지선정위원회 행정실무 지원단을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7년 5월 10일에는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정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읍면장 추천을 받아 읍

면 주민대표 12명과 전문분야 위원 15명 모두 27명의 위원이 2007년 7월 4일 위촉됨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군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007년 7월 20일 군청사 후보지 접수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5개 읍면에서 6곳의 후보지가 추천되었다.

## (2) 갈등혼란기

군청사 이전 후보지 6곳은 언양 반천리, 범서 입암리, 청량 울리, 삼남 교동리, 삼남 신화리, 산동 하잠리 등이다. 후보지 추천을 마친 각 지역의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 와야 함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간의 경쟁적인 유치전이 시작되었다. 울주군청사 이전 계획은 지역 간의 유치전으로 인한 갈등 표출 외에는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2007년 7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 통보를 한 후 갑작스럽게 울주군이 울주군청사 이전계획 추진자체를 유보하면서 울주군청사 이전 사업은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갈등혼란기로 접어들게 된 요인으로는 울주군수의 구속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 위원회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제기 등의 사으로 인하여 울주군 청사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있다. 이에 갈등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갈등혼란기에는 울주군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아닌 울주군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간 갈등이 부각되는 것으로 소송까지 갈등이 번지는 등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2007년 7월 26일 위원회의 협의도 없이 부군수 전격로 위원회 회의 연기를 통보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다가(울산신문, 2007. 11.20, 울주군 군청사 이전 경과 관련 내부자료 참고) 2007년 11월 26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해촉하게 되면서 더욱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해촉을 당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2007년 12월 18일 해촉 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하면서 울주군청사 이전 사업은 법적 다툼 비화되었다(울산신문, 2007. 12. 19, 울주군 군청사 이전 경과 관련 내부자료 참고). 하지만 울산지법은 울주군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주군의 위원위촉이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힘들어 이 사건 해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2008년 1월 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입지선정위 위원들은 법원의 각하결정을 받아들여 같은 해 1월 10일 위원회 위

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진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 (3) 갈등심화기

법원의 판결 후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긴 하였지만 울주군은 여전히 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2008년 3월 울주군은 정례브리핑에서 “울주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이나 돼야 청사 이전 여부에 대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논의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울주군은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군청사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군청사 이전 문제를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용역결과에 따라 수정하기 위해 보류된 상황에서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의 이같은 입장은 2008년 10월이나 울주중장기발전 용역 결과 도출 이전에는 선정위원들과 군청사 입지 등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소송까지 불사하며 울주군의 해촉 부당성을 주장해온 선정위원들과 마찰은 심화되었다(울산신문, 2008. 3.19.) 이에 울주군과 입지선정위 위원간의 갈등,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는 골이 깊어지는 현상을 맞게 되었다.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 추진이 일방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점과 선정위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법원 결정 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은 울주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시기 이해관계자들은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감이 약화됨으로써 내면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었다.

### (4) 갈등고조기

울주군수의 구속으로 결국 울주군은 2008년 10월 29일 울주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선된 새 울주군수는 울주군청사는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울주군으로 이전해 와야 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임기 시작과 더불어 군청사 이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었다. 2009년 6월에 접어들어서야 군청사 이전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되었다. 2009년 11월 8일 울주군은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선

정을 위한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와 예정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읍·면 추가 추천 방안을 확정하였다. 추가 추천은 모두 6곳의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받았다(경상일보, 2010.12.06.). 그러나 울주군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앞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울주군청사범서읍유치위원회가 2010년 11월 17일 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와 울산발전연구원의 공적 기능을 의심하면서 군청사 이전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장 등 4명이 삭발식을 가진다. 군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한갈등이 고조되었다(울산신문, 2010.12.06.).

청량면군 청사유치위원회와 법서읍군청사유치위원회는 특정 지역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이사를 표명하면서 입지 갈등이 심화되었다. 군청사 이전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결국 최종 입지선정 확정 발표일인 2010년 12월 8일에 최종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되었다. 2010년 12월 8일 최종부지 결정이 무산된 이후에도 법서읍유치위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울산발전연구원의 청사 이전 용역이 특정지역(삼남면 교동리 37)을 설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보지 특혜의혹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울산도시공사 소유부지를 군청사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울산신문, 2010.12.19.).

### 3) 갈등 주체별 입장-이해관계자

[표 3-11]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주체	주요 입장(역할)
언양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교통, 문화 및 교육 등의 중심지임</li> <li>철도와 국도, 지방도 등과 연계해 생활권의 중심지</li> </ul>
법서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 잠재력이 높음</li> </ul>
청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의 중심지로 교통의 요충지임</li> <li>도시기바시설이 갖춰져 있어 경제적으로 청사건립이 가능</li> </ul>
삼남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과 부산-울산-경남권 광역교통망 용이</li> </ul>

#### (1) 언양읍

언양읍 유치위원회는는 신청지가 울주 지역의 생활, 교통, 문화 및 교육 등의 중심지로 철도와 국도, 군도, 지방도, 항공 등과 연계해 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시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임야와 전·답, 과수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택지 조성이 불필요하며 주변의 울주 7봉과 문수산 자락에 위치해 친환경적 군청 사로서 적지라고 주장하였다(경상일보, 2007.7.27).

## (2) 범서읍

범서읍 주민들이 추천하고 있는 입암리 549 일원 16만 6000m<sup>2</sup>이다. 범서읍유치위는 신청지가 울주군 서부 읍면과 20분 이내, 남부 읍면과 30분 이내에 입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경상일보, 2007.7.27.).

## (3) 청량면

청량면 지역주민들이 추천하고 있는 울리 525 일원 16만 8386m<sup>2</sup>(부지6)이다. 청량면유치위는 신청지가 지리적으로 울주군 3대 생활권의 중심지로 울주를 종과 횡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넓은 시가화예정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인구 30만 울주를 견인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으로 청사건립이 가능한데다 기존 유관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높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경상일보, 2007.07.27.).

## (4) 삼남면

삼남면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후보지로 교동리와 신화리이다. 삼남면은 교동리 21 일원 18만 7350m<sup>2</sup>와 신화리 22 일원 18만 1860m<sup>2</sup>로 고속철 역세권 지역 바로 서쪽 쌍수마을과 도호마을의 경계가 되는 야산 일원을 후보지로 추천했다. 삼남면유치위는 후보지들은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 부산·울산·경남권 광역교통망 및 종합 발전 계획의 성장 중심지에 위치해 울산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울산 발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경상일보, 2007.07.27.).

## 4) 갈등의 주요 이슈

### (1) 경제적 차원

군청 등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지, 지역의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군청의 공무원들과 가족 등이 수반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울주군의 경우 군청사가 없어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다. 이에 군청사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실제 군청사의 유치로 인하여 ‘면’ 단위의 행정구역이었던 청량면은 ‘읍’으로 승격하였다. 군청사의 유치가 무산된 지역의 경제적 보상에 관한 고민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절차적 차원

울주군청 이전은 절차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울주군청 이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잡음이 있었으며, 울주군수와 위원회가 서로 법적인 다툼까지 있었다. 이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군청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입지선정의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울주군청의 경우 군과 위원회의 법적다툼 등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 5) 갈등 완화 기제 및 정책적 함의

울주군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울주군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중재개입을 통한 갈등사례를 갈등해소기제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입지선정위원회 적용 심사기준 등이 민주적인 절차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이를 기준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제3자 개입을 해야 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울주군이 추진함에 따라 울주군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울주군청사는 군청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간 갈등,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간 갈등 등 복잡하게 갈등이 발생하였다. 울주군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역할에 관한 것이다.

울주군과 입지선정위원회의 갈등은 군청사 입지갈등의 핵심 사안을 뒤로 한 채 울주군을 상대로 해촉을 당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촉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기하는 등의 법적다툼으로 비화되었다. 결국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운영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해 군청사입지선정은 예정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기제가 갈등을 더욱어 부추기게 된 것이다. 갈등이 발생한 이후 제3자인 위원회 구성은 절차적으로 논의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위원들은 공정하게 역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4. 대구시 신청사 건립 갈등

### 1) 갈등 개요

대구신청사 건립은 2004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극심한 지역 간 갈등으로 여러차례 좌절을 겪었다. 2008년 경상북도는 안동·예천으로 도청이전을 결정하고 2016년 2월 경상북도청이 이전하였다(경상북도, 2016). 경북도청이 이전하며 대구시는 시청별관을 경북도청 이전 터에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며, 신청사건립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하였지만, 공무원노조, 대구시의회, 중구 등의 반대로 인하여 신청사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2018년 6월 대구시는 신청사건립TF를 구성하고, 대구시청 이전부지를 모색하였다. 이에 신청사 유치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이 발생하고 갈등이 심화되었다.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구시의 신청사 사업이 진행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구시는 조례를 근거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19년 3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신청사건립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이후 4월~10월까지 후보지 신청기준을 및 예정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를 접수하였다. 8개 구군 대상 후보지가 신청·접수되었으며, 4개 구군(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최종 후보지로 신청되었으며, 후보지 중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평가대상지로 확정하였다(2019년 12월). 신청사 유치 예정지로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결정된 후 유치를 위한 경쟁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하였다.



2019년 12월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달서구 두류정수장을 신청사 이전지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처음 건립 계획을 세운 이후 1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국민일보, 2019.12.22.). 특히 논의 과정은 대구지역의 첫 참여형 민주주의 방식(공론화)으로 현안을 결정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대구시는 최종 건립부지에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공사를 착공, 2026년 공사를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 2) 갈등전개과정<sup>32)</sup>

[표 3-12] 갈등전개과정

시 기		전 개 과 정
발 단	2009	5 대구시 공무원노조 시청사 비판 성명 발표
	2010	12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실시
	2011	1 대구시, 신청사 건립 용역 결과 발표
5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고 조	2015	2 시청 별관 임시이전 공무원노조 반발
	2016	4 이전을 반대하는 중구, 이전 환영하는 북구 사이 갈등 발생
	2017	12 옛 경북도청 입지관련 기재부와 대구시 갈등 발생
		6 25일, 대구시 신청사 관련 TF 구성 발표
	2018	7 대구시청 이전 부지 10곳 부상
		11 신청사 유치전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 발발
해 소	2018	12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조례 통과
	2019	3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sup>33)</sup> 구성
		4 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4 신청사 이전 협약식 도중 중구청장 퇴장
		6 신청사 유치를 위한 4개 기초자치단체(중구달서구달성군북구) 홍보전 발발 및 갈등발생
		6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기초조사 실시
		7 시민원탁회의 개최
		9 시민설명회 개최
		10 신청사 유치 후보지 접수
		11 평가대상지 확정
		12
	예정지 확정(달서구) 및 공고(공론화위원장)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저자 구성

32) 갈등전개과정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내 대구 신청사 건립을 토대로 작성하였다.(검색일: 2021.03.14.)

33)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 구성,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등의 기능을 가진다(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1) 갈등의 발단

대구시청 이전은 2004년부터 논의되었다. 대구시청은 다른 대도시 청사에 비하여 사무실 면적이 적어 대구시청의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민간건물(10개의 산하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연합뉴스, 2008.06.05.). 이에 2005년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기획팀을 가동하였다. 당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까지 벌였으나, 불경기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후 논의되지 않다가 2008년 6월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이 결정되면서 시청사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한국경제, 2018.05.06.).

공무원노조는 2009년 설명을 통해 시정을 비판하고, 청사 면적의 면적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물리적으로 협력을 하기 어려운 청사 구조로 인하여 직원들 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공무원 간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었다. 시민들 또한 해당 부서를 찾기 위하여 시청 및 인근 건물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사 면적 확보를 주장하였다.

### (2) 갈등의 고조

대구시가 2009년 12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2010년 하반기 신청사 후보지 결정을 공표하고, 2011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시청사 이전이 무산되었다. 2016년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북도청 터를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시청사 별관을 임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시는 도청 이전 터 본격 개발에 앞서 주변 공동화를 막고, 시청 일부 부서가 곳곳에 흩어져서 근무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내 경북도청과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2016년 별관 부서를 임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도청 주변 공동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 별관 부서 이전에 따른 대구시의 중구 공동화가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임시 이전을 반대하였다. 공무원노조는 근거로 “시청 별관 2곳은 임차보증금 80억원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20억원이지만, 도청 터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50억원”이

라며 “2년이면 보증금 80억원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며, 별관이전에 제동을 걸었으며, 대구시의회도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대구일보, 2016.01.04.).

이후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현재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청 소재지인 중구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북구는 환영하였으나, 갈등이 발생하였다. 기재부는 대구시청의 이전 움직임이 강조되자 예산을 압박하며 대구시를 반대하고 나서며, 대구시의 경북도청 이전계획은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대구 중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한국당)은 “대구시민은 시청 이전을 요구하거나 요청한적이 없다”면서 “시민의사는 묻지도 않고 시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이전을 결정했느냐”고 반발하였다. 기재부 역시 도청 터를 국비로 매입하는 비용 일부(211억원)를 예산에 책정하면서 ‘대구시청을 국유지인 도청 터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연합뉴스, 2018.05.06.). 그러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구시청의 이전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었고, 권영진 시장은 2018년 5월 “시청 건물을 신축할지, 어디에 할지는 대구시민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8.05.06.). 대구시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구 중구와 북구 주민 및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상권위축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중구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도청 터를 활용하지는 북구 주민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권영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시민위원회를 꾸려 시청 이전 문제를 결론짓겠다 언급하고, 2018년 6월 대구시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7명으로 구성된 대구 미래비전 2030위원회를 통해 대구 수돗물 사태와 대구공항 이전 논란, 신청사 갈등까지 대구의 3대 현안을 다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이어 시청사 이전은 대구시민들이 결정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후보지로 10곳이 거론되었다. 신청사 유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자체 간 여론전이 시작되면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중구는 시청 위치 사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북구는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시청사 이전을 원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통해 신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3) 갈등의 해소

2018년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통해 신청사 건립사업

을 총괄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구시 조례에 따라 전담부서를 만들고 2019년 4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9년 4월~10월 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10~11월 후보지를 접수하였다. 후보지 신청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였다. 2019년 4월 2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류규하 중구청장과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이 대구시청 건립에 대하여 권영진 대구시장,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은 현재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결국 협약식장을 떠났다.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협약식의 당초 목적이 무색한 갈등이었다(매일신문, 2019.04.25.).

공론화 과정이 지속되며 중구, 북구, 달서군, 달성군의 4곳의 후보지가 선정(<표 2>)되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각 후보지의 홍보전을 과열되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과열 유지전 패널티 부과 방침을 정하며 ‘과열유치행위를 제재<sup>34)</sup>’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과열경쟁은 지속되었다.

[표 3-13] 대구신청사 후보지

구군명	평가대상지	
	위치	면적(m <sup>2</sup> )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옛 두류정수장 부지)	158,807
북구	산격동 1445-3 일원(시청별관 부지)	123,461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 일원(NH홍보관 부지)	204,248
중구	동인동1가 2-1 일원(시청본관+남측 22필지)	21,805

대구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조사(2019.06.07.~06.14.),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민원탁회의(2019.07.16.), 시민설명회(2019.09.28.)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총 252명으로 구성되어 2박

34) 과열유치행위 유형에는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방송, 신문, 전단지 배포),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현수막, 입간판, 애드벌룬, 차량광고), 행사 및 단체행동 등을 통한 행위, 기타 과열유치행위(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개별접촉, 기타행위 등)(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3일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가졌다. 시민참여단은 먼저 유치신청을 한 4곳의 후보지를 답사한 뒤 설명을 듣고, 후보지 관련자의 발표를 청취한 후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평가하였다. 숙의토론회 결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고득점(648.59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결정되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12월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고하였다.

### 3) 주요 이해관계자

대구시 청사를 둘러싼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대구시, 중구, 중구 외에 기초자치단체, 기재부 등이 있다.

[표 3-14] 대구시 신청사 건립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주요 입장

찬/반	갈등 주체	주요 입장
찬성	대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청사 연면적 부족으로 업무 비효율 초래</li> <li>• 기존 청사 주변 토지, 건물매입 불가</li> <li>• 시민 불편 초래</li> </ul>
	중구 제외 타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이전 불가피</li> </ul>
반대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li> <li>• 현 소재지 우선권 부여 정당</li> </ul>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경북도청 소재지 이전 불가</li> </ul>

#### (1) 찬성 이해관계자

찬성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중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가 있다. 이들은 대구시 신청사가 확장이전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대구시는 2004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현재 대구시청 청사는 낡고 좁아 본관과 별관으로 불가피하게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업무의 효율성과 부서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현재 청사 주변의 구도심 부동산 가격이 이미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청사 주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구를 제외한 타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청사 이전은 불가피하며, 이전을 막는 것은 중구의 지역이기

주의라는 입장이며, 청사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

## (2) 반대 이해관계자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을 가장 반대하는 중구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보통 시청 주변에 도심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시청이 위치한 중구는 도시의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현재도 대구의 도심으로 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사가 이전하면 2천여명의 시청직원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주변 상인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면, 지가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 현 소재지인 중구에 우선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기재부는 대구시가 경북도청의 터를 시청사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기재부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하여 지자체 청사를 무상으로 지어줄 수 없다’며 도청 이전 터에 시청 신청사를 건립하거나 이전하는 대구시 계획에 반대하였다. 더 나아가 대구시에 ‘시청 이전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각서 없이 도청 이전 후 적지매입 예산(211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두었다(영남일보, 2018.07.16.).

## 4) 갈등의 주요 이슈

### (1) 경제적 차원

시청사는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다. 청사로 출근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 등 유동인구도 많다. 이에 시청사의 이전은 지역입장에서 유치해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이다. 시청사가 들어오면 주변 상인들과 부동산 수요자들은 시설의 입지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시청사가 빠져나가는 중구의 경우에는 지역의 주요한 시설을 빼앗기는 것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구는 기존의 시청 소재지로서 갖는 경제적 활성화의 측면을 놓칠 수 없어서 지속하여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청사는 중구에서 달서구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중구는 신청사의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차원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이 확장되고 건설되게 되면, 시설이 전에 따른 중구 지역경제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절차적 차원

대구시는 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 등을 두고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건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으며, 이저부지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달라 신청사 건립에 걸림돌이 된 경우도 있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의견조사와 원탁회의를 거쳐서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도입하여 신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였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연구단을 선임하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전문적이 자문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 우수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중구의 반대가 있고,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로 사업을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신청사 부지를 공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 5) 갈등 완화 기제 및 정책적 함의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을 두고 계속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와 기초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입장으로 인하여 신청사 이전과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갈등 완화 기제로 도입한 것이다. 시청사 이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중구 역시 대구 시민들이 결정하는 공론화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시민참여형 조사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 달서구로 시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적 의사결정과정 중 하나인 공론화와 시민참여형 조사 등의 기제를 도입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갈등, 대전 월평공원 조성 갈등 등이 있다.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는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시민참여형 갈등해소 기제이다. 공론화를 활용한

갈등해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한 결정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론화 추진과정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사회문제를 시민참여로 해소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5. 종합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통합창원시청사의 경우 통합준비위원회, 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시의회가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마무리 되었지만 갈등이 완화되지는 못하였다. 법제도적 해결은 가장 갈등의 상흔이 오래 남는 해소방식이며 향후 갈등이 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합리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해결보다 합의에 기반을 둔 협상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청의 경우 기존의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에서 호텔, 면세점, 상가, 주거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하여 중단되었던 도청 신청사의 이전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주거 및 인구 과밀화를 우려한 광고주민들과 수원시가 변경된 계획안에 반발하였고 이에 용인시가 도청사 유치에 뛰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반발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광고에 신청사 착공을 시작하여 갈등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울산시 울주군 청사의 경우 여러 읍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었다. 결국 다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부지가 결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해촉된 위원들의 법적다툼이 있었다. 제3자인 위원회 구성은 절차적으로 논의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위원들이 공정하게 역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구시 신청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유치를 위한 경쟁이 고조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으나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견조사, 시민원탁회의, 시민설명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과정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갈등 완화 기제를 도입하여 절



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중구 역시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공론화를 활용한 갈등해소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 3-15] 핼피갈등 사례 종합

구분	갈등 요인	갈등 완화 기제	시사점
통합창원시 청사 유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창원시청사의 소재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창원-마산-진해 간의 갈등 발생</li> <li>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들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신경전</li> <li>신청사 소재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최종결정하기로 논의했으나 갈등 지속</li> <li>통합시 분리론까지 등장하며 갈등 고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원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 '마산 부흥비전과 전략' 발표 등 여러 노력</li> <li>'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기습적인 통과로 현 창원시청사로 결정</li> <li>통합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위치는 무시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의 법제도적 해결</li> <li>주민의견수렴 과정 생략, 향후 갈등의 소지 존재</li> <li>합의에 기반을 둔 협상과정으로 합리적 갈등 해소 필요</li> </ul>
경기도청 이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1년부터 도청사의 광고 이전 추진 및 이전계획 수립</li> <li>경기도의 수원 광고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 로드맵 발표 후 인구 과밀화와 기존기능 및 사업과의 중복을 우려한 광고 주민들 수원시와의 갈등 시작</li> <li>수원시의 반대에, 용인시가 기흥구 경찰대 이전부지에 경기도청사를 유치하는 것을 정식 건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는 인구 과밀화를 우려하는 수원시 및 광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청사 부지 내 주거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신청사 및 광고발전을 위한 합의문' 발표</li> <li>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등 해소 실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완화기제 없음</li> <li>주민들의 반발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갈등 지속</li> <li>용인시의 유치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음</li> </ul>
울산시 울주군 청사 이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 군청사 이전 방침 결정, 지역갈등 최소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유치 신청을 받고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 선택</li> <li>다수의 군청사 후보지 접수, 경쟁적인 유치전으로 인해 주민갈등 발생</li> <li>입지선정위원회의 해촉으로 갈등 및 법적 다툼 발생, 울주군과 위원회 간의 갈등 고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재개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li> <li>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어서의 의문 제기 및 해촉 사건으로 갈등이 더 고조되기도 함</li> <li>최종부지 결정이 무산되었다가, 결국 위원회의 현장실사 및 평가작업으로 최종부지가 결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자의 중재개입</li> <li>위원회 구성 과정은 절차적으로 논의 및 공개</li> <li>위원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li> </ul>
대구시 신청사 건립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부터 대구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 진행, 지역 갈등으로 무산</li> <li>경상북도 도청이전 후 도청 터에 시청 별관 이전 제시, 공무원 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 위원회 구성 후 후보지 관련 기준 마련</li> <li>시민의견조사, 시민원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참여형 공론화 도입</li> <li>이해관계자와 기초자치단체의 반대입장이</li> </ul>

	<p>및 시의회 중구의 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건립추진단과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 구성 후 후보지 접수</li> <li>• 최종후보지 간의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갈등 고조</li> </ul>	<p>회의, 시민설명회, 시민참여단 속의토론회 등의 시민참여과정 진행</p>	<p>극렬한 상황에서 갈등 완화기제로 작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공정한 공론화 추진 가능</li> </ul>
--	--	--	--

# 제 4 장

## 신청사 건립 비전 설정

제1절 청사의 개념과 흐름

제2절 주변환경 분석

제3절 도시 비전 및 슬로건 분석

제4절 시민 의견 분석

제5절 고양시청사 건립 비전 설정



## 제절 청사의 개념과 흐름

### 1. 청사의 개념

#### 1) 청사의 법적 정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이때 국방·군사시설, 행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재외공관용 청사, 시험·연구시설, 관람집회 또는 전시시설, 그 밖에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그리고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하는 교정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청사를 기반시설이자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표 4-1】 청사의 법적 정의

법률	공공청사 관련 내용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시행령	제40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2) 시대별 청사 관련 논의 및 흐름<sup>35)</sup>

조선총독부, 경성부청 등 일제 강점기의 공공청사는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건립된 통치의 거점으로, 행정업무 기능만을 수행하던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행정업무 기능과 함께 대민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업무시설로서 인식되었다. 1970~1980년대는 부동산 투자 및 건자재 가격 상승,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한 도구로 공공청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해제하기도 하였으며 수도권 내 중앙 및 지방청사의 건축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무원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대민업무 및 주민편의 기능 도입이 본격화 되어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당시 건립된 공공청사의 경우 친환경 건축 및 옥상 녹화를 한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공공청사가 수행했다. 행정업무와 대민업무, 의회업무에 더하여 문화지원의 역할도 하였고 이를 위한 복합청사의 건립 사례도 증가했다. 또한 외관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물론, 공공청사 건립 시 현상설계를 진행하여 높은 디자인 수준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2010년대에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과 공공건축물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로 인해 설계공모가 의무화되었고 공공건축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획일화되고 권위적이었던 공공청사의 외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며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은 공공청사가 건립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 행정·복지·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며 랜드마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35) 염철호·임현성, 공공청사 건축 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2010.

[표 4-2] 청사의 흐름

시대	특성 및 추이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부동산 투자 및 간자재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건축허가제한(1969년 11월)</li> <li>• 건축실적 감소 및 건축투자 저조로 인한 건축허가제한 해제(1972년 5월)</li> <li>• 이후 1973년과 1978년에도 제한 및 해제 반복</li> <li>•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공공사업비 표준화(1973년)</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천정부청사 건립과 함께 지방으로의 이전정책 추진</li> <li>• 수도권 내 중앙 및 지방청사의 건축 제한</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인한 민선자치단체의 출범과 자치구의 분리, 민원증가로 신청사 건립 증가</li> <li>• 발주, 시공,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각종 비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조달청 발주 의뢰 증가</li> <li>• 녹지 확보 및 친환경 건축 등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 증가(「녹지확충 5개년 계획(1996년)」)</li> <li>• 공무원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인식 전환, 주민편의 기능 도입의 본격화</li> <li>• 수요자인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분야의 주민서비스 제공</li> <li>•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동주민센터로 변화, 다양한 문화 및 복지 기능 제공</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부양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 활발</li> <li>• 민간투자 대상에 공공청사가 포함되어 민간자본 유치로 공공청사 건립 가능</li> <li>•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 문제 본격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li> <li>• 외관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주민복지수요 충족 및 예산확보를 위한 복합청사 건립 사례 증가</li> <li>• 생활권 경제권 확대 및 행정업무 비효율로 인한 시설의 통폐합 및 재활용</li> </ul>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li> <li>• 설계공모의 의무화로 건축물의 창의성 및 품격 제고</li> <li>•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수행 및 심의, 사전검토</li> <li>• 설계공모로 일관적인 외관 탈피, 창의성 및 장소성·역사성이 담긴 외관 디자인</li> <li>•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수행</li> </ul>

## 2.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 및 역할

### 1) 공공청사의 기능

#### (1) 행정 및 의회 업무기능

현재 고양시청사의 행정 및 의회 업무기능은 본청사와 외부청사에 나누어져 있다. 본청사는 시청사와 의회건물을 포함하며, 외부청사는 덕양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제1별관(건우빌딩), 제2별관(구 등기소), 내외빌딩, 현대빌딩, 충헌빌딩, 성광빌딩, 동남빌딩, 송암빌딩 9개의 민간건물로 본청사 주변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특히 동남빌딩은 본청사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 7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처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청사가 분리되어, 행정효율 저하와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먼저 행정효율의 경우, 본청 직원 1인당 면적이 22.6㎡로 인구 규모가 비슷하나 직원 1인당 면적이 41.4㎡인 용인시청과 51.2㎡인 성남시청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공간과 부서별 회의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청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sup>36)</sup>, 업무공간에 대해서는 84.4%, 부서별 회의공간에 대해서는 90.0%의 직원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타 청사 건물에 출입하는 빈도수는 한 달에 1~3회가 368명으로 43.3%를 차지했고, 4~6회가 190명(22.4%)이며 10회 이상이 157명(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청사에서 외부청사 간 왕복 소요시간이 짧게는 4분, 길게는 14분이라는 것을 보면 현재 고양시청사의 행정 및 의회 업무기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1 별관과 제2 별관을 제외한 7개 외부청사 건물의 임대료로 연간 6억 원씩 지출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 또한 본청사의 건물도 1983년에 건립되어 현재 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노후한 건물이다. 이 때문에 매년 시설유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2015년~2019년간 평균 약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발생하였다. 즉 매년 약 11억 원의 비용이 청사 건물의 유지와 외부청사 임대료에 소요되고 있으며 재정건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36) 고양시,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사업(기본)계획서, 2020.



[표 4-3] 현 고양시청사 현황

청사		포함 시설	고양시청사 배치도
고양시청 본청사	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실, 국장실, 실장실, 비서실 등</li> <li>언론홍보담당관, 기자실 등</li> <li>회계과, 행정지원과, 평화미래정책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등</li> </ul>	
	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민원실, 주민자치과, 민원어권과 등</li> <li>의회분회의장, 의장실, 시의원실, 위원회 등</li> <li>소상공인지원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시민안전과 등</li> </ul>	
외부청사	제1별관 (건우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정책과</li> <li>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등</li> <li>이동청소년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등</li> </ul>	
	제2별관 (구 등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과, 도로정책과, 도시정비과, 문화사업팀</li> </ul>	
	상하수도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시설과 수질검사팀, 시설운영팀</li> <li>회계과 차량관리팀</li> <li>건축디자인과, 도시균형개발과, 신도시팀 등</li> <li>사업소장실, 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 도로관리과</li> </ul>	
	내외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정책과, 공사와, 전략산업과</li> </ul>	
	현대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정책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li> </ul>	
	충헌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하천과, 여성가족과</li> </ul>	
	성광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비축진과, 기후대기과</li> </ul>	
	동남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과</li> </ul>	
	송암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마을배움자원센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혁신교육팀</li> </ul>	

## (2) 대민업무기능

one-stop 행정을 추구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청의 경우 청사의 기능이 본청사 이외의 9개 외부청사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과 상담실·회의실, 주차장의 부족으로 대민업무기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청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불편한 점을 물어본 결과, 주차공간 부족(33.0%)과 대중교통 불편(20.2%), 방문부서의 분산 배치(14.1%)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차장의 경우 고양시청 내 주차 가능 대수는 총 157대(옥내 16대, 옥외 141대)로 본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15명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부족하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교동 1,2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지만, 주교1주차장

은 주차 가능 대수가 359대로 많지만 직선거리로만 300m로 이격되어 있고, 주교2주차장은 220m 떨어져 있으나 주차 가능 대수가 65대로 협소하여 여전히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민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무원 중 민원인 안내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62명의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민원인 이용 공간의 충분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족 및 매우 부족으로 응답한 인원이 722명으로 직원 중 85.8%가 민원인 이용 공간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복합청사 건립에 찬성한 인원 중 32.6%가 상담실·공원 등의 휴게공간과의 복합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민업무기능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시민문화지원 기능

고양시청에는 문예회관·체육관 건물이 위치하여 문화행사 및 체육 분야에서 시민문화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문예회관은 1989년에 개관하였고, 현재 고양도서관 리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장은 총 3층 규모로 연면적 2,027㎡에 468석이다. 이곳에서 무료영화 상영이나 뮤지컬, 콘서트, 강연, 연주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체육관에서는 농구, 배구, 탁구, 검도, 태권도, 배드민턴 등의 실내체육이 가능하며 대관신청을 하여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은 현재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첨 순위에 따라 희망하는 대관일을 선택하는 추첨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표 4-4] 현 고양시청의 문예회관 개요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고양시문예회관
부지면적	14,032㎡	 <p>&lt;자료&gt; “고양시문예회관”, 경기관광포털사이트, 2012.12.07. 수정 2020.11.03. 접속, <a href="https://url.kr/DFWRU">https://url.kr/DFWRU</a>.</p>
연면적	4,919㎡	
공연장 면적	2,027㎡ (1층 815㎡, 2층 493㎡, 3층 418㎡) - 객석 수: 총 468석(일반석 462석, 장애인석 6석)	
체육관 면적	2,339㎡(경기장 758㎡) - 객석 수: 총 284석	

[그림 4-1]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체육관



<자료> 좌: “고양시문예회관”, 대한민국구석구석, 2020.11.04. 접속, <http://me2.do/GHMafzhG>.  
 우: “체육관 안내”, 문예회관, 2020.11.04. 접속, <http://www.gys.or.kr/goart/intro/infor.php#>.

문예회관·체육관 외에도 고양시청 본청사에 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고양시청갤러리600’이 있다. 2013년에 개관한 갤러리는 총 150여점의 그림과 사진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전시실은 지하 1층에, 2전시실은 지상 4층에 위치한 복도형 전시실이며 1층 로비에도 전시공간이 있다. 고양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 및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전시나 고양시 학생들의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4-2] 고양시청갤러리600



<자료> “2017년 3월 전시소개”, 고양시청갤러리600, 2017.03.16. 작성, 2020.11.04. 접속, <https://url.kr/aGmUWO>.

## 2) 도시건축물의 역할

### (1) 안전한 건축물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동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고양시 청 본청사 부지에 있는 건축물은 3개로, 본관동은 1983년, 의회동은 1993년, 제1별관은 1994년에 준공되었다. 2000년에 고양시 본청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한 안전 보강 및 보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 고양시 소유의 청사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관동과 의회동, 제1별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고양시청사 건축물 모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본관동은 준공이 된 지 37년이나 지났고 안전등급 C, D를 받은 건물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인 상황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2) 친환경 건축물

현 고양시청사는 친환경 건축·에너지 효율에 관한 관심이 대두하기 전 1983년에 건립된 건물이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이나 친환경적인 건물배치,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시공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왔다. 먼저 2011년에는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전등 자동 점·소등 장치를 설치하였다<sup>37)</sup>. 또한 최근에는 2007~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추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LED등 교체, 친환경차량으로 관용차량 교체 등 다양한 감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sup>38)</sup>.

37) “고양시, 에너지절약 작은 실천부터”, 폴리뉴스, 2011.06.21. 등록, 2020.11.05. 접속,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79629>

38)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 총력”, 고양일보, 2020.07.09. 등록, 2020.11.05. 접속,  
<http://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9>

### (3) 공공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

외관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2000년대로 현 고양시청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기 전에 건립된 건축물이다. 또한 군청사 건물을 그대로 시청사 건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내부공간의 경우, 2012년에 노후화된 환경과 정돈되지 않은 공간, 어둡고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간개선 프로젝트로 고양시청 문화디자인 물품제작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다<sup>39)</sup>. 시민에게 청사를 개방하고 문화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청갤러리600’ 공간을 조성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공간의 경우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지만, 외관의 경우는 개선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고양시의 경관 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청사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고양시청사 내부 리모델링 전(위)과 후(아래)



<자료> “오래된 고양시청사를 시민문화갤러리로 “고양시청갤러리600””, 공공프리즘, 2020.11.05. 접속, <https://url.kr/Db6yfm>.

39) “오래된 고양시청사를 시민문화갤러리로 “고양시청갤러리600””, 공공프리즘, 2020.11.05. 접속, <https://url.kr/Db6yfm>.

## 제2절 주변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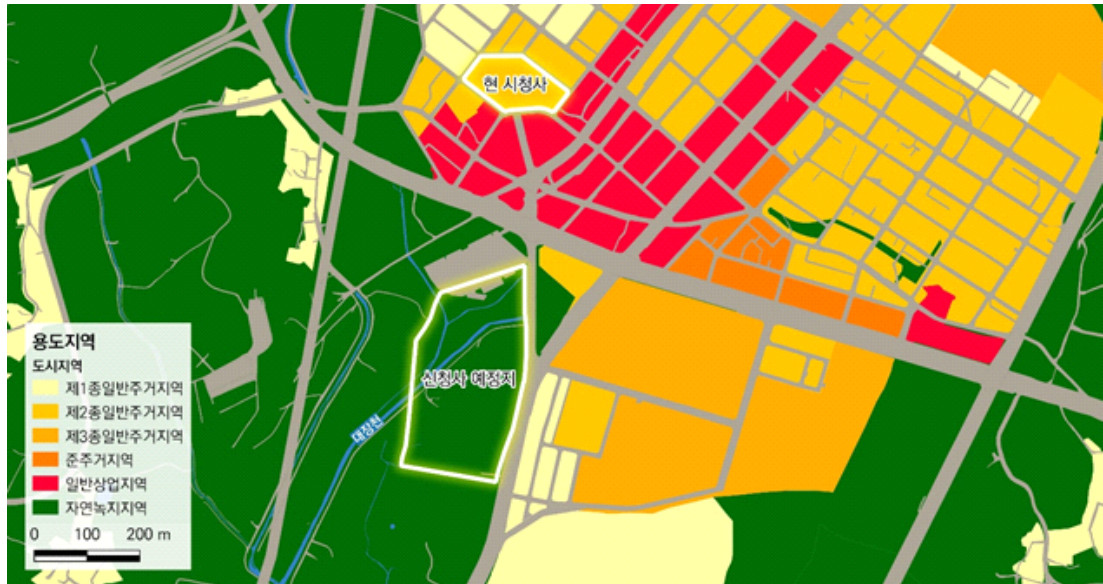
### 1. 건립 예정지 분석

고양시 신청사는 현 시청사 부지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사 예정지는 현재 주교제1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현 시청사 부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고려할 점이 다양하다. 특히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교통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토지이용 및 자연환경

현 시청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반면 신청사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도 모두 자연녹지지역이며 동쪽으로 일반주거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대장천이 흐르는 구간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신청사 예정지 일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대장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아이디어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4] 신청사 예정지 토지이용현황



## 2) 건축물 용도

현 시청사 주변에는 다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 산재해 있다. 고양군 청사 시설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상권이 현 시청사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신청사 예정지는 주차장 및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동측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소방서, 동사무소), 어울림누리 등이 조성되어 있다. 신청사 예정지의 경우 인근에 근린생활시설등이 부족하며 도시와의 결속력이 떨어지는 측면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현 시청사 일대의 상권과 신청사 예정지의 연계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수립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그림 4-5] 신청사 예정지 건축물 용도



## 3) 교통

특히 신청사 예정지에 고려해야 할 점은 교통이다. 폭이 약 40m인 고양대로와 원당지하차도로 인해 현 시청사와 신청사 예정지의 단절이 우려된다. 신청사 예정지와 동측 주거지의 경우 폭 약 30m의 호국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인 교외선은 지상 철도로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단절이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 대곡과 시청, 식

사를 연결하는 식사 트램이 도입될 예정이며 새철과 창릉, 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선 신설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사 예정지와 기존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단절을 최소화 하고 신설될 지하철 노선 및 트램을 활용한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4-6] 신청사 예정지 교통 현황



## 2. 생활SOC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청사는 더 이상 행정업무만의 중심지는 아니다. 시민문화 시설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 전체와 시청사가 입지해 있는 덕양구, 주교동이 경기도, 고양시 타구에 비교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행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다양한 시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시민의견 수렴이 필수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데 의의가 있다.



## 1) 생활SOC의 개념

생활SOC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이때 ‘사회기반시설’은 1990년대 제정·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법적으로 정의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때 법에서 명시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는 변화해왔다. 2019년까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열거주의에 따라 개별법상 시설 53개를 사회기반시설로 명시하였다<sup>40)</sup>. 이는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고 시설 효용 증진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을 의미했다(구형수 외, 2019). 하지만 2020년에는 포괄주의에 따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등)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및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사회기반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하였다.

[표 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규법 비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9.03.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0.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개별법상의 총 53개 시설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 2019.03.11. 발의, 2020.11.09. 접수,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19120/detailR>.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은 2018년 11월에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생활SOC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 2) 분석방법

### (1) 생활서비스시설의 종류

생활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거점과 마을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역거점은 학습, 돌봄, 의료, 문화, 체육, 휴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문화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량으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을 차등 적용하여 권장하고 있다. 마을단위는 교육, 학습, 돌봄, 의료, 체육, 휴식, 생활편의, 교통으로 분류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기초의료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보 기준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5분을 권장하고 있다.

[표 4-6]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구분	분류	시설	세부시설	최저기준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의료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 이상 공원	10분
마을 (도보)	교육	유치원	국공립, 민간 유치원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15분
	돌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놀이터	5분
		마을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료	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지역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 전달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생활 편의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와/시설 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확보율 70%이상

## (2) 생활서비스시설별 평균지표 분석 방법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차량과 도보의 접근성 측면이었다면 2030 서울 플랜의 생활서비스시설지표는 개소수로 측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시설개소 당 인수로 서울시의 전체 평균과 각 자치구, 행정동의 수치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30 서울플랜 생활서비스시설 지표를 참고하여 경기도와 고양시, 고양시 내에 시청사가 위치한 덕양구와 주교동, 그 외의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서비스시설은 크게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역 생활서비스시설에는 문화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 보건소 등이 포함되며 평균지표는 시설개소 당 인구 10만명, 장애인 복지시설은 시설개소 당 장애인 1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 생활서비스시설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인구는 시설별로 다양하게 측정하며 데이터는 주로 경기데이터드림과 고양시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였다.

[표 4-7] 생활서비스시설의 분석 방법

구분	계획항목	대상	평균지표	출처
지역	문화시설	공공·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시설개소 /10만명	고양시주요시정통계 경기도통계연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체육시설, 자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 등	시설개소 /장애인천명	경기데이터드림
	지역주민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소 /10만명	고양시통계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개소 /10만명	경기데이터드림

지역	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시설면적(m) /1명	경기데이터드림
	주차장	공영주차장(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면수 /10세대	경기데이터드림
	도서관	공공도서관(구립, 시립, 어린이), 작은도서관	시설개소 /1만명	국립도서관통합시스템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개소 /65세 이상 1천명	경기데이터드림
	청소년이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쉼터 등	시설개소 /10-24세 1천명	경기데이터드림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개소 /5세미만 1백명	경기데이터드림
	공공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수영장, 기타(축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개소 /1만명	경기데이터드림

### 3) 분석 결과

#### (1) 권역 서비스시설

#####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공공 및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을 포함하는 시설로, 평균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양시의 3개 자치구 중에서 일산서구가 가장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일산동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서구는 고양문화원을 제외하고는 민간공연장과 영화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동구의 경우 고양아람누리 위치하여 극장과 음악당, 미술관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민간 공연장과 영화관, 박물관이 있어 문화시설이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덕양구의 경우에는 고양어울림누리과 박물관(항공우주박물관, 고양어린이박물관, 중남미박물관 등), 미술관(포마디자인미술관, 목암미술관)이 있으며 특히 고양시청이 위치한 주교동은 시청사 부지 내에 문예회관이 있지만 문화시설 수에 비해 자치구 내 인구수가 많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고양시 문화시설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문화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0만명)
경기도	13,239,666	402	3.036
고양시	1,066,351	42	3.939
덕양구	466,157	17	3.647
주교동	15,748	1	6.350
일산동구	297,671	16	5.375
일산서구	302,523	9	2.975

### ②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체육시설, 지원센터 등의 관련시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심부름센터, 주간보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지적·지체장애인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양시에는 42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 이는 장애인 인구수 대비 복지시설의 수가 경기도 보다 조금 많다. 자치구 중에서는 덕양구가 가장 부족하며 일산서구가 가장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청사가 위치한 덕양구 주교동의 경우에는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경기도 자립지원센터가 있어 평균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표 4-9]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평균지표

구분	장애인 인구수(명)	장애인복지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천명)
경기도	559,878	703	1.256
고양시	40,726	52	1.277
덕양구	19,320	18	0.932
주교동	928	2	2.155
일산동구	10,750	17	1.581
일산서구	10,656	17	1.595

### ③ 지역주민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지표는 문화시설과 같이 인구 10만 명당 지역주민복지시설 수로 설정하였다. 고양시에는 7개의 지역주민복지시설이 있으며 덕양구에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 원흥종합사회복지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일산동구에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일산서구에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일산동구에서 지역주민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청이 위치한 덕양구 주교동의 경우, 덕양구는 고양시에 비해 지역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한 수준이며, 주교동에는 지역주민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고양시 지역주민복지시설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지역주민복지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0만명)
경기도	13,239,666	80	0.604
고양시	1,066,351	7	0.656
덕양구	466,157	3	0.644
주교동	15,748	0	0
일산동구	297,671	1	0.336
일산서구	302,523	3	0.992

#### ④ 보건소

이 분석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양시의 평균지표 값은 0.375이다. 이는 경기도의 평균지표 값인 1.344에 비해 낮은 값으로,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고양시에는 현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마다 1개의 보건소가 있으며 일산서구에 가좌보건지소가 있다. 따라서 3개의 자치구 중 일산서구가 비교적 높은 지표를 보였으며, 덕양구는 일산동구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보건소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교동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보건소가 위치하여 평균지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고양시 보건소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보건소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0만명)
경기도	13,239,666	178	1.344
고양시	1,066,351	4	0.375
덕양구	466,157	1	0.215
주교동	15,748	1	6.350
일산동구	297,671	1	0.336
일산서구	302,523	2	0.661

## (2) 지역 서비스시설

### ① 공원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소공원과 어린이

이공원, 근린공원을 의미하는 생활권공원과 역사·문화·수변·체육·공원 등을 의미하는 주제공원을 포함한다. 고양시에는 337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총 공원면적은 7,903,182.1㎡이다. 평균지표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에 비해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구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일산서구에 공원이 많이 부족하고,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일산서구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교동은 덕양구와 고양시, 경기도에 대비하여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 고양시 도시공원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공원 면적(㎡)	평균지표(공원면적/1명)
경기도	13,239,666	103,951,586.6	7.852
고양시	1,066,351	7,903,182.1	7.411
덕양구	466,157	3,917,910.1	8.405
주교동	15,748	132,780	8.432
일산동구	297,671	2,843,562	9.553
일산서구	302,523	1,141,710	3.774

## ② 주차장

고양시에는 71개의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이 있으며, 주차 가능한 총 면 수는 8,523개이다. 고양시는 경기도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덕양구가 자치구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차장 공급은 덕양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고양시청이 위치한 주교동의 경우, 평균지표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59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교제1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수치이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청의 이전부지가 주교제1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3] 고양시 주차장 평균지표

구분	세대 수	주차가능면 수(개)	평균지표(면 수/10세대)
경기도	5,306,214	162,297	0.306
고양시	417,607	8,523	0.204
덕양구	185,883	2,782	0.150
주교동	7,528	596	0.792
일산동구	120,658	3,692	0.306
일산서구	111,066	2,049	0.184

### ③ 도서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양시에는 현재 104개의 도서관이 있다. 인구수와 도서관 수로 분석을 한 결과,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 중에서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평균지표가 낮아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반면 덕양구에는 54개의 도서관이 있고 덕양구 주교동에는 4개의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교동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4곳은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프란시스 쉐퍼기념문고 작은도서관, 설만한물가 작은도서관으로 모두 작은도서관에 속하여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 문고 수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4] 고양시 도서관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도서관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만명)
경기도	13,239,666	1,911	1.443
고양시	1,066,351	104	0.975
덕양구	466,157	54	1.158
주교동	15,748	4	2.540
일산동구	297,671	26	0.873
일산서구	302,523	24	0.793

### ④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고양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기도에 비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덕양구의 경우 일산동구·일산서구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수가 약 1.8배 많은 것에 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부족하여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덕양구 중에서도 주교동의 평균지표가 낮게 나타나 고양시 신청사 건립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15] 고양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평균지표

구분	65세 이상 인구수(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천명)
경기도	1,651,341	9,825	5.950
고양시	135,272	560	4.140
덕양구	64,799	235	3.627
주교동	2,776	8	2.882
일산동구	35,110	149	4.244
일산서구	35,363	176	4.977

## 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쉼터, 복지상담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양시에는 51개의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있다. 이는 경기도의 평균지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24세 청소년 인구수 대비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3개의 자치구 중에서는 일산동구가 비교적 충족되었고, 일산서구는 부족하여 우선적인 공급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고양시 청사가 위치한 주교동은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사 건립시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의 도입을 고려하여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고양시 청소년아동복지시설 평균지표

구분	10-24세 인구수(명)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천명)
경기도	2,209,936	1,177	0.533
고양시	182,457	51	0.280
덕양구	72,310	19	0.263
주교동	2,461	0	0
일산동구	52,470	19	0.362
일산서구	57,677	13	0.225

## ⑥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국공립, 가정, 민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협동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고양시에는 78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5세 미만 인구수 대비 보육시설의 수로 도출한 평균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 비해 고양시는 어린이집이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비해 덕양구에 어린이집이 더욱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교동은 덕양구 평균지표의 약 2배로 비교적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었다.

[표 4-17] 고양시 보육시설 평균지표

구분	5세 미만 인구수(명)	보육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백명)
경기도	525,180	11,565	2.202
고양시	37,041	780	2.106
덕양구	17,634	330	1.871
주교동	246	9	3.659
일산동구	9,265	188	2.029
일산서구	10,142	262	2.583

#### ⑦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도통계연보 상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집계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육상경기장·축구장·테니스장·체육관·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와 비교하였을 때 고양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일산서구의 경우 평균지표 값이 가장 낮아 수요 충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덕양구의 경우 문예회관의 체육관과 마상공원(풋살장, 배드민턴장, 국궁장), 주교 풋살장이 있어 비교적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평균지표

구분	인구수(명)	공공체육시설 수(개소)	평균지표(시설개소/1만명)
경기도	13,239,666	1259	0.951
고양시	1,066,351	81	0.760
덕양구	466,157	40	0.858
주교동	15,748	5	3.175
일산동구	297,671	22	0.739
일산서구	302,523	19	0.628

#### 4) 종합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평균 대비하여 고양시는 권역 서비스시설로는 보건소, 지역서비스시설로는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

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평균 대비 덕양구는 권역서비스시설로는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모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서비스시설로는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양구 평균대비 주교동은 권역서비스시설에서는 지역주민복지시설이, 지역서비스시설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생활 SOC 분석 종합

구분	계획항목	경기도 평균 대비 고양시 수준	고양시 평균 대비 덕양구 수준	덕양구 평균 대비 주교동 수준
권역	문화시설	충분 (130%)	부족 (92.6%)	충분 (174%)
	장애인복지시설	충분 (102%)	부족 (73.0%)	충분 (231%)
	지역주민복지시설	충분 (109%)	부족 (98.2%)	부족 (0%)
	보건소	부족 (27.9%)	부족 (57.3%)	충분 (295%)
지역	공원	부족 (94.4%)	충분 (113%)	충분 (100%)
	주차장	부족 (66.7%)	부족 (73.5%)	충분 (528%)
	도서관	부족 (67.6%)	충분 (119%)	충분 (219%)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 (69.6%)	부족 (87.6%)	부족 (79.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부족 (52.5%)	부족 (93.9%)	부족 (0%)
	보육시설	부족 (95.6%)	부족 (88.8%)	충분 (196%)
	공공체육시설	부족 (79.9%)	충분 (113%)	충분 (370%)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은 생활서비스시설을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히 정략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제3절 도시 비전 및 슬로건 분석

### 1. 국내 도시 비전

#### 1) 수도권 광역사도

##### (1) 경기도

경기도는 도민들이 물질적으로 성장하기보다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포용할 수 있는 도시를 희망한다는 점과 경제 저성장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미래 비전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창업사회 실현, 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 거점도시 간의 경기순환철도 건설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으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 실현, 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건강·장수도시 실현,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핵심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통합의 거점으로서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를 목표로 남북 경제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3대 프로젝트(남북경제통합 경제자유구역 조성, 임진강수계 종합 수자원이용체제 건설 등)를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원산축의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국가형 지방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표 4-20] 경기도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40년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 신성장산업 육성</li> <li>경기도 창업사회 실현</li> <li>공유와 상생의 경제시스템 구축</li> <li>거점도시 간 환상철도 건설</li> <li>세계 수준의 대도시 경쟁력 확보</li> </ul>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산 극복과 사회통합 공동체의 실현</li> <li>포괄적 평생학습체제 구축</li> <li>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 실현</li> <li>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li> </ul>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경제통합 준비 3대 프로젝트 추진</li> <li>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추진</li> <li>효율적인 경기도정 체계 실현</li> </ul>

<자료> 경기도, 경기비전 2040,2015

##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시민이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100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속의 과정을 통해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미래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30년까지 서울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7대 계획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는 이후 5개 핵심이슈의 기초가 되어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되었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는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이다. 목표에 따른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4-21] 서울특별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li> <li>•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li> <li>•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li> <li>•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li> <li>•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li> </ul>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li> <li>•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li> <li>•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li> </ul>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li> <li>•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li> <li>•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li> </ul>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li> <li>•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li> <li>•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li> </ul>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li> <li>•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li> <li>•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li> </ul>

<자료> 서울특별시,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2014.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처럼 시민계획단 중심의 논의과정을 거쳐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이후 7개의 분야별 정책목표와 중점전략을 수립하였다.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공항·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전략을 통해 인천시가 현재 안고 있는 원도심 쇠퇴 문제, 교통·환경문제를 해소하며,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표 4-22] 인천광역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인천”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도심 내 특화된 맞춤형 개발</li> <li>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대공감 공원문화시설 보급</li> <li>1인 가구 및 고령친화형 주거공간 조성</li> <li>대규모 개발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도시성장관리</li> <li>특색있는 도시디자인 및 색채관리</li> <li>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창조</li> <li>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특화</li> <li>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개발</li> </ul>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 중심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li> <li>지속적인 생활안전교육 및 환경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li> <li>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안전예방대책 수립</li> <li>인천 고유의 특화공원 조성</li> <li>민간공원을 통한 공원 활성화</li> <li>해안선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li> </ul>

<p>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li> <li>•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li> <li>• 다양한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li> <li>•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 혁신산업단지 개편</li> <li>•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li> <li>•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li> </ul>
<p>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섬을 활용한 명품섬, 가고 싶은 섬 만들기</li> <li>•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li> <li>•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도시 조성</li> <li>• 수도권 매립지의 시민여가공간 조성</li> <li>•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문화거점 형성</li> <li>• 특화거리 및 인천형 테마마을 조성</li> <li>•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한 인천 브랜드 업그레이드</li> <li>•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추진</li> <li>•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li> </ul>
<p>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항만 등 해양물류시설의 세계화</li> <li>•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li> <li>• 대중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li> <li>•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입체복합화</li> <li>•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li> <li>• 공항 물류체계의 강화 및 자원</li> <li>• 해양관광도시다운 합리적 토지이용</li> <li>• 도서지역 접근체계 확충</li> </ul>
<p>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li> <li>• 주민 소통·친화형 사회복지행정체계 구축</li>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li> <li>• 여성이 살기좋은 행복한 복지사회 조성</li> <li>•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도시 조성</li> </ul>
<p>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li> <li>• 글로벌 교육인프라 확대 및 다양화</li> <li>•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li> </ul>

<자료> 인천광역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15.

## 2) 인구 규모 유사 도시

### (1) 수원시

수원시는 경기도 행정과 업무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문화자원 및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환경 문제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과밀의 문제,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있었으며 자족기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황 파악 후, 기존의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가졌던 국가정책 및 전문가 등에 의한 하향식 정책 설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상향식 정책 결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비전과 목표수립부터 도시구상까지 총 5단계의 시민계획단 회의 결과, 수원시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으로 설정되었고, 비전 실현을 위해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거버넌스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역사문화관광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도시로 세부 목표가 구성되었고 목표에 따른 세부실천전략도 수립되었다.

[표 4-23] 수원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li> <li>• 누구나 존중 받는 복지도시</li> <li>•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li> <li>• 참여와 소통, 교육에 기초한 인문학 도시</li> </ul>
	거버넌스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기반이 구축된 통합도시</li> <li>• 시민이 주인인 열린 도시</li> <li>• 지속 가능한 슬로우 시티</li> <li>• 동·서, 산·구가 조화된 균형발전도시</li> </ul>
	역사문화관광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친화적 첨단 융·복합 산업도시</li> <li>• 도시정체성 및 브랜드 특화도시</li> <li>• 머물고 싶은 역사관광도시</li> <li>•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활력도시</li> </ul>

<자료> 수원시,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2018



## (2) 용인시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정계획을 평가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용인시는 관내 기업체 20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업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또한 국책사업 및 기반시설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용인시의 시정목표와 미래트랜드를 분석하여 용인시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용인(Live+Work+Play in Yong-in)”을 2035년 용인시의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주거안정성 보장(Live)과 경제자족도시 건설(Work), 도시활력증진(Play)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도시, 특화발전도시, 문화·복지·교육·안전도시, 녹색관광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목표별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24] 용인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용인”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5년	언제나 활기찬 미래성장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산업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로 경제자립도시 구현</li> <li>산업동력 및 인재발굴을 위한 시스템 및 도시기반 구축</li> <li>역세권 융복합 개발로 생활-일자리 통합공간 창출</li> </ul>
	어디서나 살기좋은 특화발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한 균형성장도모</li> <li>도시발전축과 연계한 지역간 상생발전체계 구축</li> <li>도시재생을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 도모</li> </ul>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교육·안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너, 나,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차별화된 복지도시 구현</li> <li>지역·수요자별 맞춤형 문화·교육·복지시설 확충</li> <li>재해, 재난 대응 및 범죄예방 도시체계 구현으로 안전도시 구축</li> </ul>
	무엇을 하든 즐거운 녹색관광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li> <li>자연친화적 관광산업 및 인프라 구축</li> <li>녹색교통을 기반으로 체류형 거점 관광기반 강화</li> </ul>

<자료> 용인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018

### (3) 성남시

성남시는 도시 진단 및 현안 과제와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수렴한 성남시민의 의견, 성남시의 시정 및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도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때 현안 과제 도출 시 도시의 위상과 공간구조, 인구·산업, 생활환경, 생활 인프라를 기준으로 도시의 현안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역 현안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역 현안 과제는 원도심과 분당, 판교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지역별 키워드로 과제를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도시 비전은 “소통과 화합의 글로벌시티 성남”으로 설정되었으며 실현을 위한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CT 도시, 화합과 상생이 이루어지는 소통·네트워크 도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문화도시이다. 세가지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관련된 지표도 선정되었다.

[표 4-25] 성남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소통과 화합의 글로벌시티 성남”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5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CT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산업거점 설정 및 지원 강화</li> <li>• 원도심을 혁신 산업 거점으로 육성</li> <li>• 지역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li> </ul>
	화합·상생이 이루어지는 소통네트워크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통합형 도시공간구조 설정</li> <li>• 대중교통 및 환승체계 강화</li> <li>• 공원·녹지 소통 네트워크 구축</li> </ul>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지역맞춤형 SOC 확충</li> <li>• 정비사업 등의 공공기여 강화</li> <li>• 저이용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li> </ul>

〈자료〉 성남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2020.

## (4) 창원시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3개 지역(창원, 마산, 진해)마다 특화된 다양한 도시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회·문화 인프라와 자연환경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과거의 경쟁관계에 따라 도시의 융합이 취약하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약점이 있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원시 주민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창원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에 대해 ‘환경도시’와 ‘경제도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는 2025년 도시비전을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 창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목표는 4가지로, 경쟁력 있는 통합균형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삶이 있는 문화도시, 글로벌 선진도시이며 이에 대한 각각의 전략도 수립하였다.

[표 4-26] 창원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 창원”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5년	경쟁력 있는 통합균형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골격 구축</li> <li>• 당면 주요과제 해결을 위한 도시기능 보완</li> <li>• 지역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특화개발 유도</li> </ul>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분야 저탄소 도시구축</li> <li>•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신개발 지침마련</li> <li>•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화석에너지 사용절감</li> </ul>
	삶이 있는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 접목한 계획도시</li> <li>• 어메니티를 통한 새로운 정주환경의 틀 마련</li> <li>•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매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체계 마련</li> </ul>
	글로벌 선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금융·교류의 거점도시 기반 조성</li> <li>•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 산업의 적극적 유치</li> <li>• 전문 인력 양성·연구·공급을 위한 도시기능 구축</li> <li>• 신성장 해양 도시기반 구축</li> </ul>

〈자료〉 창원시,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변경, 2016.

### 3) 고양시 주변도시

#### (1) 부천시

부천시는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인구구조이며 철도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원도심이 침체하여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며 기반시설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생산기반의 이주가 가속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총체적 패러다임의 변화분석과 설문조사, 부천의 현황분석, 시민계획단의 의견수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30년을 목표로 도시비전을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으로 설정하고 문화교육도시와 창조경제도시, 친환경도시, 건강복지도시를 목표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4-27] 부천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부천다운 문화교육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콘텐츠 창출 및 육성</li> <li>• 문화인프라 정비·확충</li> <li>• 지역기반 교육환경 개선</li> </ul>
	활력있는 창조경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li> <li>•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li> <li>•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li> <li>• 협동조합중심 도시 조성</li> <li>• 물류·유통 기반 조성</li> <li>•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li> </ul>
	쾌적한 친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li> <li>•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li> <li>• 녹색교통중심 교통체계 개선</li> <li>• 부천다운 도시경관 창출</li> <li>• 편리한 U-Eco City 구현</li> </ul>
	살기 좋은 건강복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하는 복지사회 구현</li> <li>• 무장애 도시 조성</li> <li>•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li> <li>•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 도시</li> </ul>

<자료> 부천시, 2030 부천도시계획(변경), 2017.

(2) 김포시

김포시는 양호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개발가능지 및 관광자원이 있으며 신도시와 같은 국책사업 선정과 도시철도 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도시이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점과 무분별한 공장입지로 인한 경관의 파괴, 대도시 인접에 따른 외부의존도 심화 등의 제약요소가 있었다. 이에 김포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이러한 김포시의 현황과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시의 비전을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BEST-GIMPO”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4개의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4-28] 김포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BEST-GIMPO’”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0년	도시와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전원생태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포한강신도시의 전원생태도시로의 개발 및 웰빙형 전원주택지 조성</li> <li>생태탐방로 및 생태공원조성과 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 등 자연을 테마로 한 기능 도입</li> <li>자연과 어우러진 실버타운 조성과 친환경적 테마형 전원주택지 조성</li> <li>신도시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일정 지역내의 근교형 전원주택단지 조성</li> </ul>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관광휴양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향적 가치관의 확대 및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li> <li>환경친화적인 관광지 및 위락단지 조성으로 관광소득 증대와 도시민에게 여가공간 제공</li> <li>자연환경과 연계한 전통한옥마을 및 전통숙박촌, 예술인촌 조성</li> </ul>
	국제 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지식 산업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북부권 첨단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클러스터 육성</li> <li>항공, IT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관련 대학 유치를 통한 미래형 지식인재 육성</li> <li>지역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 정보센터 건립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li> <li>교통의 결절지점에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의 재배·판매 등 도시형 유통물류기능 도입</li> </ul>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거점 화합도시의 기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 협력단지 조성</li> <li>통일대교 건설을 통한 물류의 원활한 이동 및 국토의 통일 분위기 조성</li> <li>접경지역의 안보·군사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역사·문화 교육의 장 조성</li> <li>접경지역 개발 및 보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연계시킨 평화벨트를 조성하고 신행민촌, 통일촌 등의 테마형 마을 조성</li> </ul>

<자료> 김포시,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2015.

## (3) 파주시

파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주민의식 설문조사, 자문 및 시민계획단 운영, 도시의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파주시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분석 및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파주시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30년 파주의 미래비전은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이며, 이를 위한 6대 목표와 18개 전략, 42개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6대 목표는 통일·남북교류, 교통, 경제, 복지 및 교육, 농업, 문화·관광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29] 파주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평화도시 조성</li> <li>• 통일경제특구실현</li> <li>•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li> </ul>
	어디든 통하는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li> <li>• 이동이 편리한 시스템 구축</li> <li>• 생활교통체계 확립</li> </ul>
	모두가 잘사는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하기 편한 도시 조성</li> <li>• 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li> <li>• 구시가지의 활성화 추진</li> </ul>
	기본이 튼튼한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li> <li>•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li> <li>• 교육환경 질적향상 도모</li> </ul>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li> <li>•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li> <li>• 귀촌·귀향 활성화 유도</li> </ul>
	생활이 즐거운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도시 육성</li> <li>• 글로벌 관광지 조성</li> <li>• 생활체육시설 확충</li> </ul>

〈자료〉 파주시,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2017.

#### (4) 양주시

양주시는 도시현황분석 및 의식조사,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등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양주시의 변화 및 잠재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때 도시발전 및 이미지, 도시세력권, 역사문화, 입지적 자연환경,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생활환경, 경제산업 각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변화 및 잠재요인을 분석하여 계획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목표와 전략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설정된 2020년 양주시의 미래 비전은 “함께가는 신활력 도시 양주”이며, 목표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시민이 살맛나는 경제도시, 문화·지식·정보가 어울려 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이다. 3가지 목표를 위하여 총 9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실천전략이 수립되었다.

[표 4-30] 양주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함께가는 신활력 도시 양주”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0년	일자리가 풍부하고 시민이 살맛나는 경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창출형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구현</li> <li>•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을 주도하는 신활력 거점도시 육성</li> </ul>
	문화·지식·정보가 어울려 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가보고 싶은 문화예술도시 조성</li> <li>•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성 있는 패션도시 육성</li> </ul>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li> <li>• 누구나 배우의 희망을 꿈꾸는 교육도시</li> <li>•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안전한 생태도시</li> </ul>

<자료> 양주시,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2014.

#### 4) 국내 도시 비전 비교

고양시청사 건립 비전을 도출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고양시 인근의 도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용인시·성남시·창원시의 도시 비전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의 비전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사람과 시민에 대한 키워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통 및 공동체, 행복에 대한 키워드의 빈도도 높게 나타나 삶

의 질과 같은 생활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전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경과 자연, 국제 및 글로벌에 대한 키워드도 제시되고 있었다. 그에 반해 복지나 교육, 교통 키워드는 도시 비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과 자연에 대한 키워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와 역사, 기업 및 일자리에 대한 키워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전 키워드 분석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행복과 소통 및 공동체는 목표에서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비전 키워드 분석

도시	비전(●) 키워드												
	행복	사람/시민	복지/교육	소통/공동체	환경/자연	경제	기업/일자리	문화/역사	관광	교통	국제/글로벌	통일/희망	균형/회합
경기도	●			●		●							
서울특별시	●	●		●									
인천광역시		●						●	●		●		
수원시	●	●			●								
용인시		●											
성남시				●							●		●
창원시					●						●		
부천시		●		●	●			●					●
김포시												●	
파주시							●					●	
양주시						●							
<b>빈도</b>	<b>3</b>	<b>5</b>	<b>0</b>	<b>4</b>	<b>3</b>	<b>2</b>	<b>1</b>	<b>2</b>	<b>1</b>	<b>0</b>	<b>3</b>	<b>2</b>	<b>2</b>

[표 4-32] 목표 키워드 분석

도시	목표(○) 키워드												
	행복	사람/시민	복지/교육	소통/공동체	환경/자연	경제	기업/일자리	문화/역사	관광	교통	국제/글로벌	통일/희망	균형/회합
경기도				○		○						○	
서울특별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수원시		○			○			○	○				○
용인시			○		○		○	○	○				○
성남시	○	○			○		○				○		○
창원시		○			○			○			○		○
부천시			○		○	○		○					
김포시					○		○		○		○	○	
파주시			○				○	○	○	○		○	
양주시			○		○	○	○	○					
<b>빈도</b>	<b>1</b>	<b>4</b>	<b>5</b>	<b>2</b>	<b>9</b>	<b>4</b>	<b>6</b>	<b>8</b>	<b>5</b>	<b>2</b>	<b>5</b>	<b>3</b>	<b>4</b>



[표 4-33] 국내 도시별 비전 및 목표

도시	목표 연도	비전	목표
경기도	2040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구조의 혁신</li> <li>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li> <li>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li> </ul>
서울 특별시	2030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li> <li>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li> <li>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li> <li>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li> <li>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li> </ul>
인천 광역시	2030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 관광도시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li> <li>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li> <li>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li> <li>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li> <li>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li> <li>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li> <li>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li> </ul>
수원시	2030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li> <li>거버넌스를 통한 균형발전 도시</li> <li>역사문화관광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도시</li> </ul>
용인시	2035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제나 활기찬 미래성장도시</li> <li>어디서나 살기좋은 특별발전도시</li> <li>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교육안전도시</li> <li>무엇을 하든 즐거운 녹색관광도시</li> </ul>
성남시	2035	소통과 화합의 글로벌시티 성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ICT 도시</li> <li>화합·상생이 이루어지는 소통네트워크 도시</li> <li>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문화도시</li> </ul>
창원시	2025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 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력 있는 통합균형도시</li> <li>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li> <li>살이 있는 문화도시</li> <li>글로벌 선진도시</li> </ul>
부천시	2030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천다운 문화교육도시</li> <li>활력있는 창조경제도시</li> <li>쾌적한 친환경도시</li> <li>살기 좋은 건강복지도시</li> </ul>
김포시	2020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BEST-GIM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원생태도시</li> <li>관광휴양도시</li> <li>첨단산업도시</li> <li>통일화합도시</li> </ul>
파주시	2030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을 준비하는 파주</li> <li>어디든 통하는 파주</li> <li>모두가 잘사는 파주</li> <li>기분이 튼튼한 파주</li> <li>농촌이 풍요로운 파주</li> <li>생활이 즐거운 파주</li> </ul>
양주시	2020	함께가는 신활력 도시 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이 살맛나는 경제도시</li> <li>새롭게 변모하는 창조도시</li> <li>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도시</li> </ul>

## 2. 국외 도시 비전

### 1) 런던

런던플랜(London Plan)은 향후 20~25년간의 런던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2004년에 수립되어 2011년과 2016년에 수정이 되었다. 수정된 런던플랜은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의 환경 기준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도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제일의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6개의 하위목표를 담고 있으며, 실행을 위한 7개 분야의 120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7개 분야는 런던의 공간(지역개발정책), 런던의 사람(보건 및 복지정책), 런던의 경제(경제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런던의 대응, 런던의 교통, 런던의 생활 장소와 공간, 시행과 모니터 및 점검이다.

[표 4-34] 런던 LondonPlan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의 환경 기준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도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제일의 도시”	
목표 연도	목표
2036년	경제 및 인구 성장에 대해 잘 대처하는 도시 (A city that meets the challenges of economic and population growth)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도시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and successful city)
	다양하고 강하고 안전하며 접근하기 쉬운 이웃들의 도시 (A city of diverse, strong, secure and accessible neighbourhoods)
	감각을 즐겁게 하는 도시 (A city that delights the senses)
	환경을 개선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도시 (A city that becomes a world leader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일자리, 기회와 시설들에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 (A city where it is easy, safe and convenient for everyone to access jobs, opportunities and facilities)

<자료> Great London Authority, The London Plan, 2016.

## 2) 베를린

베를린은 2015년부터 도시발전컨셉(Stadtentwicklungskonzept(STEK), Urban Development Concept)을 작성하여 도시의 비전을 제시해왔다. STEK는 건설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독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비법정계획이다. 베를린 STEK의 경우 ‘베를린의 오늘(Status Report)’과 ‘베를린의 내일(Berlin Strategy)’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다. ‘베를린의 오늘’에서는 현재 베를린의 주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을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으로 현황을 제시하였다. ‘베를린의 내일’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도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공공 및 민간 개발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 4-35] 베를린 STEK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경제적인 힘, 삶의 질, 사회적 양심(Economic strength, quality of life and social conscience)”	
목표 연도	목표
2030년	스마트 지식으로 경제 강화(Strengthening the economy with smart knowledge)
	창의력 바탕의 강점(Unleashing strengths through creativity)
	교육 및 기술을 통한 고용 보장(Safeguarding employment through education and skills)
	이웃의 다양성 강화(Reinforcing neighbourhood diversity)
	도시와 녹색의 동시 성장(City and green growing together)
	기후친화도시의 기반 마련(Laying the groundwork for a climate-friendly city)
	접근성 및 도시 친화적 이동성 증대(Improving accessibility and city-friendly mobility)
	함께 미래 만들기 (Shaping the future together)

<자료>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Berlin Strategy: Urban Development Concept Berlin 2030, 2015, Berlin.

## 3) 파리

파리 PLU(Plan Local d’Urbanisme)는 10~15년간 도시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과 동시에 토지사용제한규정의 역할도 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도시현황에 대한 보고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PADD(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칙,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도시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에서 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이 제시된다. 2006년에 계획된 PLU에서는 방향성으로 파리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촉진, 불평등 축소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최민아·이성근, 2012).

[표 4-36] 파리 PLU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1년	건축, 경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보호, 경관정비, 공공공간을 정비하거나 조성</li> <li>•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도시의 미래를 건설</li> <li>• 공공공간의 쾌적성 제고</li> <li>• 녹색 네트워크 확대 및 생태계 다양성 유도 등</li> </ul>
	낙후된 시설 등의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공공소유의 비축토지 등을 활용하여 사무공간, R&amp;D 공간, 기업 인큐베이터 등을 조성</li> <li>• 도시 내 일자리의 균형화 및 새로운 경제거점 조성</li> <li>• 대규모 공공시설 조성정책 활성화 등</li> </ul>
	도시의 불평등, 소외 문제 적극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빈민정책과 대형도시재생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적극 건설</li> <li>• 가장 취약한 서민지역의 환경개선과 소외지역의 사회적 통합이</li> <li>•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li> </ul>

<자료> 반정화 외,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2013, 서울연구원

#### 4) 뉴욕

뉴욕은 2007년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PlaNYC를 시작으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왔다. PlaNYC에서는 더 푸르고 더 위대한 뉴욕(Greener, Greater New York)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4년마다 이행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후 2019년 뉴욕시는 OneNYC 2050 플랜을 새롭게 세우면서 도시비전을 강하고 공정한 도시(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로 설정하였다. 과거 PlaNYC가 환경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지속가능성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을 포함했다면, OneNYC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에도 집중하여 좀 더 광역적인 관점의 전략계획이다. 활기찬 민주주의, 포용 경제,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살기 좋은 기후, 효율적인 이동성, 현대적인 인프라가 8개의 목표이고, 이를 위한 30개의 전략들이 세워졌다.

[표 4-37] 뉴욕 OneNYC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강하고 공정한 도시(Building A Strong And Fair City)”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50년	활기찬 민주주의 (A Vibrant Democ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뉴욕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li> <li>정의와 평등한 권리를 증진하고, 뉴욕 시민과 시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li> <li>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혁신을 촉진한다.</li> <li>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뉴욕 시민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시민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포용 경제 (An Inclusive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 시민이 이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li> <li>공정한 임금과 혜택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li> <li>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 소유권, 의사결정력을 확대한다.</li> <li>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한다.</li> </ul>
	번성하는 지역사회 (Thriving Neighborhoo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뉴욕 시민이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li> <li>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의 열린 공간과 문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li> <li>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촉진하고 치안 유지 활동을 강화한다.</li> <li>장소 기반 공동체 계획 수립 및 전략을 도모한다.</li> </ul>
	건강한 삶 (Healthy L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li> <li>모든 지역사회의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한다.</li> <li>모든 지역사회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li> <li>건강 및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성립하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한다.</li> </ul>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시가 유아 교육 측면에서 선도적 국가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li> <li>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기회와 성취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개선한다.</li> <li>뉴욕시 학교의 통합, 다양성, 진학률을 개선한다.</li> </ul>
	살기 좋은 기후 (A Livable Clim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 중립성과 100% 청정 전기 사용을 달성한다.</li> <li>지역사회, 건물, 인프라, 해안가의 회복탄력성을 보다 강화한다.</li> <li>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모든 뉴욕 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li> <li>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li> </ul>
	효율적인 이동성 (Efficient Mo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시의 대중교통망을 현대화한다.</li> <li>교통 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li> <li>뉴욕시의 거리가 안전하고 높은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한다.</li> <li>지역과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한다.</li> </ul>
	현대적인 인프라 (Modern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수행한다.</li> <li>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한다.</li> <li>자산 관리 및 주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구현한다.</li> </ul>

<자료> 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2019, 국토연구원

### 5) 에든버러

영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2040년에는 인구 6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에든버러시는 여행과 관광, 쇼핑의 중심지이자 발전된 과학기술 및 문화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에든버러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계획 수립 2년 전부터 캠페인을 진행하여 도시 전역의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도시 비전으로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 건강한 도시,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4-38] 에든버러 2050 Edinburgh City Vision의 비전 및 목표·전략

비전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 건강한 도시,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50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 편한 도심 내 차량 비율을 줄이고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li> <li>• 공공공간 개선 공원 등 현재의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간을 조성</li> <li>• 더 나은 접근성 제공: 사람을 중심으로 걸 찾기 편한 도시환경을 마련</li> <li>• 중심가 기능 강화: 도심 내 걷기 좋은 공간 마련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li> <li>•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버스, 트램, 자전거, 카셰어링의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임</li> <li>• 개인의 도시 여행 편의성 향상: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li> </ul>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적인 도시 만들기: 도심 내 도보·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략 수립</li> <li>• 대기 질 향상: 배기가스 저배출 구역(Low Emission Zone) 설정, 노후 차량 규제</li> <li>• 친환경 차량 장려: 전기차 보급 장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등</li> </ul>
	도시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교통흐름 조절, 통합적 대중교통 시스템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활동 영역 넓히기: 대중교통의 출발 지점과 목적지의 반경을 넓혀 효율성을 높이기</li> <li>•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 내 장거리 이동의 선택권 제공: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연계 교통 옵션을 다양화</li> <li>•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즈니스를 지원: 도심 내 대형 운송차량의 유입을 적절히 차단하여 도시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물류 중심허브를 조성해 비즈니스 효율을 높임</li> <li>• 출퇴근 주차문제 조율: 직장주차장 확충 지원 등 주차문제를 적극 조율</li> <li>• 미래 지향적 도시 조성: 스마트 기술을 전 교통 영역에 도입</li> </ul>

<자료> “건강한 도시 등 3대 도시상 제시하는 ‘2050 도시비전(영국 에든버러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2018.09.06. 작성, 2020.11.05. 접속, <https://www.si.re.kr/node/60146>.

## 6) 국외 도시 비전 비교

국내 도시뿐만 아니라 국외 도시의 비전을 분석하여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외 도시 중에서는 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에든버러의 도시 비전과 목표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전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와 기업, 균형 및 공정성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는 행복과 삶의 질, 사람과 시민, 환경과 자연, 스마트가 비전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국내 도시와 달리 소통·공동체나 국제·글로벌에 대한 비전은 없었다.

목표 키워드에 있어서는 환경과 자연, 교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때 사례도시 5곳 모두에서 목표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소통·공동체와 경제·기업도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국내 도시에서는 비전에서 소통·공동체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목표 키워드에서는 적게 나타났던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국외 도시 비전 키워드 비교

구분	도시	비전(●) 키워드											
		행복/삶의 질	사람/시민	복지/교육	소통/공동체	환경/자연	경제/기업	스마트	문화/역사	관광	교통	국제/글로벌	균형/공정
국외	런던		●			●	●						
	베를린	●					●						
	파리												
	뉴욕												●
	에든버러							●					●
빈도		1	1	0	0	1	2	1	0	0	0	0	2

[표 4-40] 국외 목표 키워드 분석

구분	도시	목표(○) 키워드											
		행복/삶의 질	사람/시민	복지/교육	소통/공동체	환경/자연	경제/기업	스마트	문화/역사	관광	교통	국제/글로벌	균형/공정
국외	런던				○	○	○		○		○	○	
	베를린			○	○	○	○	○			○		
	파리	○			○	○	○				○		○
	뉴욕			○	○	○	○				○		○
	에든버러					○				○	○		
빈도		1	0	2	4	5	4	1	1	1	5	1	2

[표 4-41] 국외 도시별 비전 및 목표

도시	목표 연도	비전	목표
런던 (London Plan)	2036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의 환경 기준과 삶의 질을 추구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도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제일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및 인구성장에 대해 잘 대처하는 도시</li> <li>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도시</li> <li>다양하고 강하고 안전하며 접근하기 쉬운 이웃들의 도시</li> <li>감각을 즐겁게 하는 도시</li> <li>환경을 개선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도시</li> <li>일자리, 기회와 시설들에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li> </ul>
베를린 (STEK)	2030	경제적인 힘, 삶의 질, 사회적 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지식으로 경제 강화</li> <li>창의력 바탕의 강점</li> <li>교육 및 기술을 통한 고용 보장</li> <li>이웃의 다양성 강화</li> <li>도시와 녹색의 동시 성장</li> <li>기후친화도시의 기반 마련</li> <li>접근성 및 도시 친화적 이동성 증대</li> <li>함께 미래 만들기</li> </ul>
파리 (PLU)	20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경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li> <li>낙후된 시설 등의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기여</li> <li>도시의 불평등, 소외 문제 적극 해결</li> </ul>
뉴욕 (OneNYC)	2050	강하고 공정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기찬 민주주의</li> <li>포용 경제</li> <li>번성하는 지역사회</li> <li>건강한 삶</li> <li>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li> <li>살기 좋은 기후</li> <li>효율적인 이동성</li> <li>현대적인 인프라</li> </ul>
에든버러 (2050 Edinburgh city vision)	2050	공평하고 영감을 주는 도시, 건강한 도시, 스마트하고 번영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li> <li>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li> <li>도시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교통흐름 조절, 통합적 대중교통 시스템 제공 등</li> </ul>



### 3. 고양시 도시 비전

#### 1) 상위 계획 검토

고양시의 도시비전을 검토하기에 앞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였다. 먼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2040년 국토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21~2040년 계획 수립 중)에서는 2020년 목표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계획으로 정책과제 발굴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이다.

[표 4-42] 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40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li> <li>•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li> <li>•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li> <li>•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li> <li>•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li> <li>•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li> </ul>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자료> 대한민국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19.

[표 4-4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비전		
-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0년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li> <li>•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 형성</li> <li>• 공간구조구성과 도시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li> <li>• 광역 생태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관광벨트 구축</li> <li>•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li> <li>•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li> <li>• 광역적 차원에서 대기질·수질·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 구축</li> </ul>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자료> 국토해양부 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9.4. 변경사항 반영, 2009.

다음으로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도 단위 법정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도 차원에서 제시하고 조정하는 계획이다. 현재 목표연도가 2040년인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고, 2020년을 목표로 한 경기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의 비전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설정하였다.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로는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하고 복지공동체와 건강한 녹색사회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공간의 범위를 조금 더 좁혀 수립된 계획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이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은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으로, 포괄적인 종합계획이 아닌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이자 정책계획이다. 이 계획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의 비전을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5가지 목표와 16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정책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표 4-44] 경기도 종합계획

비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0년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li> <li>•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li> <li>•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제체계 완성</li> <li>•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심지 육성</li> <li>•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li> <li>• 수도권 광역·녹색교통체계 완성</li> <li>• 품격 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li> <li>• 매력적이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정책을 정립</li> </ul>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자료〉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2011.

[표 4-45]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비전		
“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5년	수도권의 융복합 신성장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디자인 주도의 고용친화 경제</li> <li>•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의 산업 경제</li> <li>• 살기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지역</li> <li>•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품격있는 도시</li> </ul>
	도농 상생의 품격있는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선진 농업 육성</li> <li>• 도농 상생의 건강한 농촌 공동체 형성</li> </ul>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생태·평화의 중심</li> <li>• 친환경 청정지역, 경기북부</li> <li>• 기존 보유자원의 자산화를 통한 관광·문화 지역 경쟁력 강화</li> <li>• 한류문화 관광거점 마련 등 관광 국제화 및 통일한국시대 대비</li> </ul>
	균형발전과 대륙 연계를 위한 교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의 조성 및 녹색교통의 메카, 경기북부</li> <li>• 통일 대비 선도적 SOC 구축</li> </ul>
	통일과 번영을 준비하는 평화협력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li> <li>•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li> </ul>

〈자료〉 경기도,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15.

## 2) 고양시 관련 계획 검토

2020경기도 종합계획 내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비전아래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친환경 초록평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였다.

[표 4-46] 경기도 종합계획 내 고양시 발전 방향

비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20년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구현</li> <li>•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li> <li>•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li> </ul>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중심의 행복 도시 실현</li> <li>• 계층별 맞춤 복지 구현</li> <li>• 미래가 있는 최고의 교육도시</li> </ul>
	창조적 문화·예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 주목하는 문화관광산업 개발</li> <li>•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li> <li>• 문화지도를 새롭게 그려가는 문화 인프라 조성</li> </ul>
	친환경 초록평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구축</li> <li>• 녹색평화도시 기반 구축</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시책 전개</li> </ul>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일자리와 첨단산업 융합도시 창출</li> <li>• 신성장동력으로 자족기반 확보</li> <li>• 사통팔달의 첨단 교통망 구축</li> </ul>

〈자료〉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2011.

203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신한류와 창조문화의 중심” 평화통일특별시“ 고양”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경기 서북부권의 중심기능강화 및 MICE기반 국제교류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행복도시, 문화예술기반의 창조문화산업도시, 시민참여의 공동체 도시,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평화도시를 목표로 내세웠다.

[표 4-47] 고양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2030)

비전		
“신한류와 창조문화의 중심 “평화통일특별시” 고양“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0년	서울 경기 서북부권의 중심기능강화 및 MICE기반 국제교류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E 복합단지, 한류월드 완성, 배후지원 물류단지 조성 등 국제교류 거점기능의 강화</li> <li>문화생활배후지원을 축으로 수도권 서북부 각 도시와 상생발전 도모</li> </ul>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행복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지향</li> <li>효율적이고 편리한 녹색교통 체계 구축 및 첨단도시 조성</li> <li>수준 높은 교육·문화·여가 환경 조성</li> <li>지역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도심 및 주거환경 조성</li> </ul>
	문화예술기반의 창조문화산업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창조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li> <li>한류문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디지털 미디어 중심 문화산업의 지속적 확충</li> <li>창조문화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li> <li>문화예술 중심의 관광 거점 형성</li> </ul>
	시민참여의 공동체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의 모든 영역과 단계, 지역에서 시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일상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li> <li>시민참여 기반의 맞춤형 보건복지체계 구축</li> </ul>
	통일한국을 선도하는 평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평화인권도시의 기반 구축</li> <li>남북교류협력의 배후 거점 역할 지향, JDS 지구 및 문화예술 인프라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교류의 점진적, 지속적 추진</li> </ul>

〈자료〉 고양시,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2016.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화합과 교류의 첨단미래도시 고양”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첨단 지족도시, 25/365 안전한 도시, 보존과 개발이 실현되는 생태순환도시, 탄소 zero, 녹색 up 스마트환경도시,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모두가 어우러진 행복한 복지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도시, 첨단 교통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즐거운 Speed 클래스 도시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표 4-48] 고양시의 비전 및 목표·전략(2035)

비전		
“화합과 교류의 첨단미래도시 고양”		
목표 연도	목표	전략
2035년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첨단 자족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족자급도시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li> <li>•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li> <li>• 특색있는 고양시 관광산업 추진</li> </ul>
	25/365 안전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 매일 안전하고 밝은 거리 만들기</li> <li>•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안전체계 구축</li> <li>•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li> </ul>
	보존과 개발이 실현되는 생태순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 확보</li> <li>• 생태환경질 개선</li> <li>• 도심 녹지서비스 확충</li> </ul>
	탄소 zero, 녹색 up 스마트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배출 zero</li> <li>• 수질환경 관리</li> <li>• 환경생태 인프라 조성</li> </ul>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 살린 균형발전으로 도농복합도시 구축</li> <li>•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고향같은 도시개발</li> <li>• 지역 특성 고려한 쾌적한 도심 및 주거환경 조성</li> </ul>
	모두가 어우러진 행복한 복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공간 확대</li> <li>• 시스템 환경구축</li> <li>• 맞춤형 복지 확대 운영</li> </ul>
	여성이 안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여성활동환경 조성</li> <li>• 여성 일자리 확대</li> <li>•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li> </ul>
	첨단 교통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즐거운 Speed 클래스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이고 편리한 3차원 교통체계 구축</li> <li>• 고양시 내 편리한 이동 교통망 확장</li> <li>• 안전한 친환경의 교통수단 및 도로조성</li> </ul>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표 4-49] 고양시 관련 계획의 비전 및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b>국토종합계획(2040)</b></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li> <li>•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li> <li>•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2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li> <li>•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li> <li>•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기도 종합계획(2020)</b></p> <p style="text-align: center;">“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역할</li> <li>•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li> <li>•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li> <li>•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기도 종합계획 내 고양시 발전 방향(2020)</b></p> <p style="text-align: center;">“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li> <li>• 따뜻한 복지·교육도시</li> <li>• 창조적 문화·예술도시</li> <li>• 친환경 초록평화도시</li> <li>•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2025)</b></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 번영의 중핵지대 경기북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의 융복합 신성장 거점</li> <li>• 도농 상생의 품격있는 공동체</li> <li>• 생태환경과 문화관광의 보고</li> <li>• 균형발전과 대륙 연계를 위한 교통 인프라</li> <li>• 통일과 번영을 준비하는 평화협력의 공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고양시 민선 7기 사정 비전</b></p> <p style="text-align: center;">“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 특별시</li> <li>•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li> <li>•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li> <li>•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고양 도시기본계획(2035)</b></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합과 교류의 첨단미래도시 고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첨단 자족도시</li> <li>• 25/365 안전한 도시</li> <li>• 보존과 개발이 실현되는 생태순환도시</li> <li>• 탄소 zero, 녹색 up 스마트환경도시</li> <li>•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스마트 도시</li> <li>• 모두가 어우러진 행복한 복지도시</li> <li>• 여성이 안전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도시</li> <li>• 첨단 교통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즐거운 Speed 클래스 도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30)</b></p> <p style="text-align: center;">“살고 싶고, 오고 싶은, 행복한 고양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형 자족경제 도시 추구</li> <li>• 지역 균형발전 및 남북교류 대비</li> <li>• 맑고 깨끗하며 쾌적한 환경 대책 마련</li> <li>• 소외 없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li> <li>• 풍부한 문화관광 및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li> <li>• 첨단인 편한 이동서비스 체계 구축</li> <li>•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자치 도시 실현</li> </ul>

## 제4절 시민 의견 분석

### 1.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2016) 수립 시 시민 의견

고양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관 주도의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민 122인과 전문가 6인,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문화복지 5가지의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 시민자문단의 의견 중 고양시청 및 고양시청이 위치할 원도심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의 상생을 주요 핵심이슈 중 하나로 보았다. 이를 위해 계획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준비와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에 의한 정비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의 및 기반시설이 확충되기를 원하였다. 이외의 시민자문단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5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자문단 의견

핵심이슈	내용
고양시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산업의 발굴과 육성</li> <li>방송 영상산업의 집적화</li> </ul>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의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준비</li> <li>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li> </ul>
평화통일 중심도시 고양시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교류기반 확충</li> <li>통일문화 기반의 조성</li> </ul>
비도시지역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관리지역 공장밀집지역의 정비</li> <li>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 및 기반시설의 확충</li> </ul>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주거환경 조성</li> <li>농촌마을에 필요한 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li> </ul>
특화거리의 관광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특화거리의 정비 및 활성화</li> </ul>
자연환경의 보전과 역사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강변 생태환경의 보전</li> <li>재해예방을 위한 자연형 하천 조성</li> <li>자연환경과 역사자원의 활용</li> </ul>
지상선의 지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간의 단절원인인 경의선과 교외선의 지하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도시공간 형성</li> </ul>
교육도시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대학의 유치</li> <li>고양시립대학 설립 추진</li> </ul>

[자료] 고양시,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16.

## 2.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19)<sup>41)</sup> 수립 시 시민 의견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장기발전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반영하는 장기계획이자,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상위계획 및 부문별 관련 계획을 검토한 연계계획의 성격을 가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고양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9년 1월 5일~7일) 진행과 100인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공론조사를 추진하였다.

설문조사는 의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핵심가치, 미래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시 중점 분야, 선결과제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핵심가치로는 ‘행복/삶의 질’, ‘성장/개발’, ‘공존/상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시청사에 행복 및 삶의 질, 공존과 상생에 대한 가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가적으로 미래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서 1순위로는 교통, 경제, 복지 순으로 나타났고, 종합순위에서는 교통, 환경, 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과 복지 분야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미래를 위한 선결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교통인프라 부족, 일자리·경기침체, 도시 노후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나 ‘철도 교통망 확대’ 등과 같이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과제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신도심과 구도심,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추진’, ‘자연과 공존하는 고양시 만들기’가 추진과제 중 5위 안에 속하는 과제이다. 또한 교육·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는 ‘생활공간 내 다양한 문화 여가 공간 확충’과 ‘지역공동체 기반 체육시설 확대’가 선정되어 시청사 건립 시 문화·여가 공간 및 체육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 박종혁 외,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수립 연구-고양비전2030-, 2019, 고양시정연구원



[표 4-51]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구분	1순위	%	종합순위	%
설문조사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핵심가치(비전, 목표)	행복 / 삶의 질	41.9	행복 / 삶의 질	65.0
		성장 / 개발	25.0	성장 / 개발	46.9
		공존 / 상생	7.7	공존 / 상생	19.8
		첨단 / 스마트	7.4	첨단 / 스마트	17.9
		균형	5.7	참여/소통	15.1
	미래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시 중점 분야	교통	23.6	교통	43.7
		경제(금융산업)	11.5	환경	32.9
		복지	9.5	복지	31.3
		도시재생	8.2	경제(금융산업)	29.5
		사회적 경제(공유경제)	7.8	사회적 경제(공유경제)	26.3
	미래를 위한 선결과제, 주요 현안	교통인프라 부족	27.6	일자리 / 경기 침체	53.3
		일자리 / 경기 침체	26.6	교통 인프라 부족	41.0
		도시 노후화	18.9	도시 노후화	33.7
		지역 내 불균형	7.6	지역 내 불균형	21.5
		교육시설 확충	5.1	교육시설 확충	12.0
시민참여단	민선 7기 공약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복수응답)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60.0
		철도 교통망 확대			58.9
		경의선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 및 객차 증차 추진			57.9
		신도심과 구도심,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추진			56.8
		자연과 공존하는 고양시 만들기			42.1
	교육·문화예술 분야 실행과제 우선순위	생활공간 내 다양한 문화 여가 공간 확충			52.6
		지역공동체 기반 체육시설 확대			44.2
	평생교육문화 확산 및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확대			38.9	

[자료] 박종혁 외,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수립 연구-고양비전2030-, 2019, 고양시정연구원

### 3.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2020) 시 시민 의견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양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양시민 설문조사는 2020년 4월에 20대 이상인 고양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시청 직원 설문조사는 2020년 7월에 시청 직원 8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방문빈도, 불편사항 등 청사 이용 및 방문과 관련된 질문과 건립시 고려사항 및 필요시설 등에 대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설문이 구성되었다.

고양시민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사 이용과 관련해서, 방문시

자가용(46.9%)을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31.6%)과 도보이용(10.9%)이 많았다. 그리고 고양시청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33.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대중교통 불편이 20.2%, 방문부서 분산 배치가 14.1%, 청사 노후화가 13.4%로 나타났다. 신청사 건립 시 건축물의 건립 방향에 대해서는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40.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14.6%), 시의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첨단 건축물(14.6%)이 높게 나타나 시민은 건축물의 상징성 및 예술성 보다 건축물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사에 가장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으로는 취업·창업·일자리 등의 지원시설(23.7%)과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복지시설(23.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 체육관·주민건강센터 등의 체육시설이 15.9%, 북카페·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15.8%로 나타났다.

[표 4-52]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고양시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응답	응답 비율
고양시청 방문시 교통수단	자가용	46.9%
	대중교통	31.6%
	도보	10.9%
	택시	7.9%
	기타	2.8%
고양시청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점	주차 공간 부족	33.0%
	대중교통 불편	20.2%
	방문부서 분산 배치	14.1%
	청사 노후화	13.4%
	민원인 편의공간 부족	7.2%
	기타 또는 모름	12.2%
신청사 건축물 건립 방향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 건축물	40.6%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	14.6%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첨단 건축물	14.6%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	11.2%
	특색을 살린 예술적인 건축물	10.3%
	기타 또는 모름	8.7%
신청사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	취업, 창업, 일자리 등 지원시설	23.7%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23.0%
	체육관, 주민건강센터 등 체육시설	15.9%
	북카페, 공연장 등 문화시설	15.8%
	상담실, 공원 등 시민 휴게 공간	13.7%
	기타 또는 잘 모름	7.8%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무 시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 중 협소한 업무공간(34.5%)과 주차장 부족(32.9%), 낡고 오래된 시설(1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사의 시설공간 중 업무공간과 부서별 회의공간, 자료보관실 및 서고, 민원인 공간과 복리후생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각각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모두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양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서는 시민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 건축물(39.3%)’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27.4%)’의 비율이 높았다. 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복합되어야 할 기능으로는 휴게공간이 32.6%, 문화시설이 24.4%, 취업·창업·일자리지원시설이 23.5%의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청사 이전 후 현청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업무시설기능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60.4%, 문화·복지기능으로 응답한 공무원이 29.5%로 나타났다.

[표 4-5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청직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응답	응답 비율
근무시 가장 불편한 점	업무공간	34.5%
	주차장	32.9%
	낡고 오래된 시설	11.5%
	민원인 안내	7.4%
	타부서 이동	4.5%
	편의시설	3.9%
	자료보관실	3.4%
	기타 및 무응답	3.6%
신청사 건립시 고려할 점	주차장 확충	42.7%
	업무공간 확충	21.3%
	관련 부서간 접근 용이성	15.8%
	문화 및 휴식공간의 확충	11.7%
	민원인 공간의 확충	5.1%
	시민을 위한 개방적인 공간구조	3.1%
	기타 및 무응답	3.4%
신청사 건축물 건립 방향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 건축물	39.3%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	27.4%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첨단 건축물	17.6%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	8.3%
	특색을 살린 예술적인 건축물	3.9%
	기타 또는 잘모름	3.9%
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	필요하다	52.6%
	불필요하다	47.4%

복합청사 건립시 가능	상담실, 공원 등 시민 휴게 공간	32.6%
	북카페, 공연장 등 문화시설	24.4%
	취업, 창업, 일자리 등 지원시설	23.5%
	체육관, 주민건강센터 등 체육시설	13.3%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3.8%
	기타 또는 잘 모름	4.0%
현청사부지 활용방안	공공업무시설기능	60.4%
	문화복지기능	29.5%
	상업업무기능	4.9%
	공공주거기능	3.5%
	기타의견 및 무응답	7.4%

#### 4. 시사점

고양시와 고양시 신청사의 방향 및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고양도시기본계획과 장기종합발전계획,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에서 키워드를 도출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시민의 의견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키워드는 교통과 균형·상생으로 나타나, 고양시민은 다른 도시 시민에 비해 균형발전, 지역불균형과 교통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복지·교육, 환경·자연, 경제·성장이 빈도가 높았다.

[표 4-54] 시민 의견 키워드 분석

	의견 키워드												
	행복	사람/ 시민	복지/ 교육	소통/ 공동체	환경/ 자연	경제/ 성장	기업/ 일자리	문화/ 역사	관광	교통	국제/ 글로벌	통일/ 희망	균형/ 상생
도시기본계획 시민자문단 핵심이슈			●		●		●	●	●	●		●	●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핵심가치	●					●							●
미래발전 방향 및 전략수립 시 중점 분야			●		●	●				●			
미래를 위한 선결과제, 주요 현안			●			●	●			●			●
민선7기 추진과제 우선순위					●					●			●

## 제5절 고양시청사 건립 비전 설정

### 1. 건축물로서의 역할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청사의 개념과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적 측면,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의 세 가지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 1) 디자인적 측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화, 사전기획, 총괄건축가 제도 활용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시도지사 소속의 광역건축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 기초건축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비가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를 활성화 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디자인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위상을 갖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 2) 안전·환경적 측면

대형 시설물의 증가와 90년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7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관리 대상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절차와 기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매뉴얼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또한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건축법에서 시행하던 건축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이 신설되었으며 정기점검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에서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로 강화되었다.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재난 예방 등을 위한 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도 신설되었다.

[표 4-55]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년)	건축물 관리법(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li> <li>•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li> <li>• 정밀안전진단 실시</li> <li>• 긴급 안전점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에서 시행하던 건축물 안전관리 이관</li> <li>•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신설</li> <li>• 정기점검 최초 10년, 2년마다 → 최초 5년, 3년 마다</li> <li>• 안전진단의 실시 신설</li> </ul>

현재 환경적인 측면은 특히 공공건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유행했던 커튼월 등의 반성과 함께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제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시작했으며 2003년에는 이를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학교건물에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5년에 건축법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이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숙박 및 판매시설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법에서 관련 내용이 이관되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2010년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친환경건축 인증 의무취득으로 개정되었으나 2013년에 다시 3,000㎡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취득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안전과 환경적인 측면은 공공건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향후 100년 이상 활용할 청사의 위상에 맞게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6] 친환경 건축에 관한 제도 변화

구분	내용
2002년	• 친환경 건축물 인증
2003년	• 업무용 건축물-주거복합 건축물 확대
2005년	• 학교건물로 확대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 건축법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설
2006년	• 숙박 및 판매시설로 확대 • 모든 건축물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2010년	• 연면적 10,000㎡ 이상으로 완화
2013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연면적 3,000㎡ 이상으로 강화

### 3) 기능적 측면

청사는 시대별로 역할이 바뀌어 왔으며 청사로서 지녀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본질은 행정업무이다. 따라서 청사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도 충실해야 한다. 대민 업무의 효율성, 각 국, 실, 과 등의 유기적인 배치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접해야 하는 부서, 충분한 회의실, 공용공간 등 실제 업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의 분리 등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관련 국, 실, 과의 업무를 숙지하고 다수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 2. 지역사회 역할

지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현 시청사와 신청사 예정지의 주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등의 생활 SOC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 연계, 필요기능 설정의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 1) 주변지역 연계

특히 기능적인 면과 동시에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기능적인 요

소로 공공에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으로 공공에 다가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권위적인 청사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계를 지우고 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청사 로비 개방 등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과 함께 주변 도시조직과의 맥락, 자연환경과의 연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 행정 기관들간의 소통부재, 디자인 철학의 부재 등으로 주변 환경과 단절된 건축물이 건립되어 도시의 단절 요소로 작동하였다. 물론 보안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기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열린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 보통 오래된 청사의 경우 자연스럽게 주변 도시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청사를 중심으로 도시조직이 형성되며 보건소, 소방서, 사업소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밀집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이 입지하게 된다.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이 위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며 좁게는 업무의 중심지로서, 넓게는 주변 시민들의 일터로서의 장소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공공청사의 이전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연계가 떨어지거나 단절되어 주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사 이전 시 주변 도시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청사와 기존 도시조직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도로의 지하화, 덩개공원 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조직의 맥락을 이어나가야 한다.

## 2) 필요기능 설정

공공청사는 과거 행정중심의 기능에서 점차 시민에게 개방하고, 시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전통적인 청사와 의회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접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청사의 역할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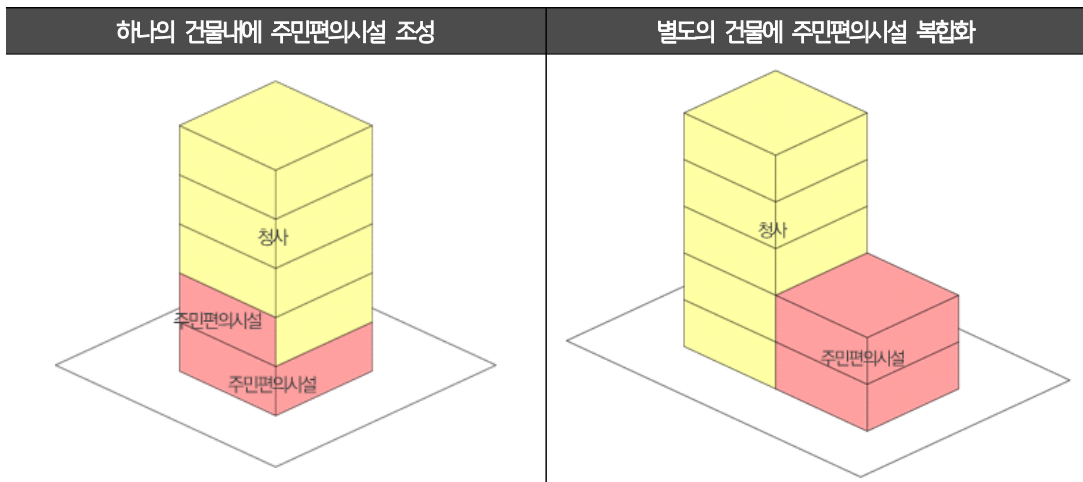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사 내에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시장, 강당, 문학관, 교육실, 북카페, 공연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많은 청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안에 공간을 마련하여 주로 1층 로비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북카페 등을 조성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권장하고 있다. 청사



내에서 공간을 해결할 수 있어 절차상 간편하고 공간의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하나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기에는 아쉬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타공공시설과의 복합화다.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생활 SOC 등을 청사와 복합해서 조성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공모를 마친 청주시청사나 공모가 진행중인 순천시청사의 경우 각각 파빌리온과 원도심문화스테이션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타부서, 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은 고양시 전체적인 측면과 현 신청사가 입지할 예정인 덕양구, 주교동 일대로 나누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광역적 측면에서의 신청사의 기능, 역할과 근역적 측면에서의 기능, 역할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고양신청사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광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4-57] 복합화 방안



### 3. 광역사회 역할

국내외 비전 및 목표, 고양시의 도시비전과 시민의견수렴을 분석한 결과 평화역사, 첨단·자족, 자연·생태, 문화·복지, 균형·소통의 다섯가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림 4-기] 고양시 신청사 광역사회 역할



첫 번째로 고양시는 수도권의 접경지역으로서 향후 남북 관계의 핵심이 될 평화 도시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남북교류 및 화합의 시대를 대비하여 고양시는 서해안 및 접경 지역 벨트에 포함되어 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고양시는 경기도 서북부 중심도시로서 접경지역 생태·평화·관광의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서 입지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도 사람중심의 시민자치와 평화의 도시가 목표 중 하나이다. 현재 민선7기의 시정슬로건은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이며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는 민선7기의 시정목표 중 하나이다. 평화의 한반도 시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북관계 발전 선도, 남북한 공연 및 체육교류 활성화, 남북 평화시대의 문화거점도시 등을 고양시의 미래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있

으며 남북평화시대 경제협력의 광역경제권 중심지로서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도시로 향후 평화미래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1990년대 1기 신도시로서, 2020년 또다시 3기 신도시로서 수도권, 경기지역의 발전을 이끌 최첨단지족도시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 베드타운 도시로서 인식되었으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베드타운 도시로서의 명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건립 사업 등 자족도시의 기반 역시 조성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IT+방송+MICE,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형 미래 산업의 유치에 힘쓰고 있다. 특히 방송영상 산업 등 고양시의 중요한 지역산업과 의료, 교육 산업 등을 융합하여 신산업을 도출하고 이를 육성하여 새로운 첨단자족도시로서 위상을 도모해야 한다.

세 번째, 한강 수계와 인접한 도시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일산신도시 자체가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정발산을 비롯해 일산호수공원, 성저공원, 백석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 장항습지, 서오릉, 행주산성 등 구릉지형이 고양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등 도심녹지와 자연녹지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며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지역환경적인 특성에 적합한 생태환경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고양시는 COP28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마련과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행하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로서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문화복지 도시로서의 비전이 필요하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와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건강한 생활이 필요한 노인 뿐만 아니라 미래에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여 중장년층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지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의 인구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50대 중반의 중년 연령층이 불과 10~20년 후 노인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에서 문화복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복지센터 확충, 고양형 Community Care 강화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양시는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 도서관, 공연시설 등이 산재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고양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의 확산, 한류문화 등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활권별 수요를 고려한 문화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인구 백만의 대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서 균형과 소통의 도시로서의 비전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서울시 북서부의 위성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도시발전은 기본적으로 고밀도 주거지와 전통적 농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등 저밀도 주거지 간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고양시 시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적 차이가 없이 대부분 불균형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불균형적 도시성장에 따른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간 구상이 필요하다. 크게는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서, 작게는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고양시에는 5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역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개발되지 않은 다량의 공간을 활용하여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양시의 전체적인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시 이러한 광역사회의 역할을 투명한 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4. 고양시 신청사의 비전 설정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고양시 신청사의 건립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광역사회 역할에서는 평화역사, 자연·생태, 첨단·자족, 문화·복지, 균형·소통을 지역사회 역할에서는 필요기능 설정(복합화), 주변지역 연계, 건축물로서의 역할에서는 디자인적 측면,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을 구상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사회에 열려 있는, 지속가능한 신청사」로 비전을 제안하였다.

[그림 4-8] 고양시 신청사 미래 비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시민들이 자유로운, 미래 신청사**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의 세부목표 역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이다. 접경지역으로서 남북 평화의 중심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고양군 시절부터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고양시의 역사성 보존이 필요하다. 광역사회 역할에서는 평화역사, 첨단·자족, 건축물로서의 역할에서는 디자인

적 측면이 강조된다. 두 번째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이다. 신청사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장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현 시청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조직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고양대로, 호국로 등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청사 구현에 힘써야 한다. 광역사회 역할의 자연생태, 균형·소통, 지역사회 역할의 주변지역 연계, 건축물로서의 역할의 안전·환경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에 해당되는 목표이다. 세 번째는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이다. 공공청사는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화 되어야 한다. 행정업무와 함께 시민 향유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광역사회 역할의 균형·소통, 문화복지, 지역사회 역할의 필요기능 설정(복합화), 건축물로서의 역할의 기능적 측면(행정)에 해당되는 목표이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청사이다.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건립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안전한 청사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광역사회 역할의 첨단자족, 지역사회 역할의 필요기능 설정(복합화), 건축물로서의 역할의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스마트 청사이다. 공공청사의 본질은 결국 행정업무이다. 따라서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스마트 오피스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광역사회 역할의 균형·소통, 첨단자족, 지역사회 역할의 주변지역 연계, 건축물로서의 역할의 디자인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표 4-58]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세부 목표

목표	내용	역할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으로서 남북 평화의 중심 도시로서의 상징성 부여</li> <li>• 군 시절부터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까지 고양시의 역사성 보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 평화 · 역사, 첨단 · 자족</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디자인적 측면</li> </ul>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추구</li> <li>• 기존 도시조직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 실현</li> <li>• 고양대로, 호국로 등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 가능한 청사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 자연 · 생태 , 균형 · 소통</li> <li>• 지역사회 역할 : 주변지역 연계</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안전·환경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li> </ul>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합화</li> <li>• 행정업무와 함께 시민 향유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li> <li>•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 균형 · 소통, 문화 · 복지</li> <li>• 지역사회 역할 : 필요기능 설정 (복합화)</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기능적 측면(행정)</li> </ul>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건립</li> <li>•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건축물로서의 가치 추구</li> <li>•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안전한 청사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 첨단 · 자족</li> <li>• 지역사회 역할 : 필요기능 설정 (복합화)</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li> </ul>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 · 스마트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혁신적인 업무 공간 조성</li> <li>• 스마트오피스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li> <li>•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사회 역할 : 균형 · 소통, 첨단 · 자족</li> <li>• 지역사회 역할 : 주변지역 연계</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디자인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li> </ul>





# 제 5 장

## 국제공모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검토

제1절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절차 분석

제2절 신청사 기본설계지침(안) 제안



## 제절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절차

### 1. 공공건축 제도

#### 1) 공공건축 제도

국내의 공공건축물은 매년 5천동씩 증가<sup>42)</sup>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나 이에 비해 건축기획, 디자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였으며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공급이 계속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공사 부실로 인해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sup>43)</sup>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공건축은 국가 건축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본법령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명문화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이 수립되었으며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이어 현재 제3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제1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이,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공건축 효율화,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의 광역건축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초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밖에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용하게 되었다.

그 후 2014년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제

4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7.27.

4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7.27.

도적 뒷받침이 가능해졌다.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비가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 참여,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매뉴얼 개발, 공공건축 DB구축, 제도 개선 등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5-1] 공공건축 관련 제도

구분	내용
건축기본법 (2007년 제정)	<p><b>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li> </ul> <p><b>제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li> </ul> <p><b>제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li> </ul> <p><b>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건축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li> </ul> <p><b>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li> </ul> <p><b>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ul>

<p>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4년 제정)</p>	<p><b>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및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li> </ul> <p><b>제22조(설계제도 구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li> </ul> <p><b>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li> </ul> <p><b>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li> </ul> <p><b>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한 건축물 조성 사업은 제외한다.</li> </ul> <p><b>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연구원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li> </ul> <p><b>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li> </ul>
-----------------------------------	--

## 2) 공공건축 조직

공공건축을 진흥하려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조직을 설립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총괄건축가와 도시공간개선단을 들 수 있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도입을 위해 2013년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의 방법 및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상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공공건축가·마을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초대 총괄건축가를 선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을 2015년 출범하게 되었다.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설계공모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및 더 나아가 서울 공간혁신 프로젝트, 도시공간

조성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공간 정책연구 및 교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총 5개의 팀과 1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부산시는 2015년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총괄건축기획과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춘천시에서도 2019년 총괄건축가를 위촉했으며 도시재생과 내에 총괄건축가운영지원TF팀을 신설하여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0년 7월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에서 도입하였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으로 광역 지자체(총괄건축가 10명, 공공건축가 571명), 기초 지자체(총괄건축가 25명, 공공건축가 223명)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광역지자체 공공건축가 현황

연 번	지 역	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계	581	10	571
1	서울	266	1	265
2	부산	43	1	42
3	인천	50	-	50
4	광주	25	1	24
5	대전	50	1	49
6	충남	64	1	63
7	전북	21	1	20
8	전남	1	1	-
9	경북	1	1	-
10	경남	25	1	24
11	제주	35	1	34

경기도에는 총 6개 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에는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중 수원시와 용인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표 5-3] 기초지자체 공공건축가 현황

연 번	지 역		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계		248	25	223
1	서울	은평구	1	1	-
2		서대문구	1	1	-
3		강동구	23	-	23
4	대구	수성구	5	1	4
5	인천	서구	1	1	-
6	경기	수원시	12	1	11
7		성남시	15	1	14
8		용인시	14	1	13
9		파주시	5	1	4
10		포천시	14	-	14
11		화성시	1	1	-
12	강원	춘천시	11	1	10
13		원주시	12	1	11
14	충북	청주시	1	1	-
15	충남	당진시	6	1	5
16		공주시	1	1	-
17		부여군	7	1	6
18		홍성군	1	1	-
19	전북	전주시	1	1	-
20	전남	순천시	8	-	8
21	경북	경주시	1	1	-
22		영주시	4	1	3
23		구미시	6	1	5
24		의성군	4	1	3
25	경남	창원시	23	1	22
26		진주시	10	1	9
27		김해시	5	1	4
28		사천시	5	-	5
29		양산시	4	-	4
30		통영시	9	-	9
31		남해군	9	1	8
32		거창군	7	-	7
33		창녕군	5	-	5
34		의령군	10	-	10
35		합안군	6	-	6

## 2. 설계공모

### 1) 설계공모 절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사업 추진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며 공공청사 등의 건립사업 시에는 제외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시행 시 시행하여야 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양시 신청사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표 5-4]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구분	내용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 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 500억원 이상</li> <li>국가 재정지원규모 300억원 이상</li> <li>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은 제외 가능</li> </ul>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li> <li>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함</li> </ul>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시행</li> <li>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li> </ul>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공공건축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량있는 건축사 등이 수행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공공건축 심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있으나 고양시 신청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제외 가능하다.



**[표 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절차**

구분	내용
공공건축 건축기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건축 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li> </ul>
공공건축 심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량있는 건축사 등 수행</li> <li>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두며 이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음</li> <li>설계지침서의 적정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등, 사전검토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등 심의</li> </ul>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li> <li>다만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한 건축물 조성 사업은 제외 가능</li> </ul>

이러한 법적인 사전 준비와 함께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공공건축 관리자(PA) 위촉,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조직, 심사위원회 구성, 설계 공모 대행업체 구성이 필요하다.

**[표 5-6] 설계공모에 필요한 절차**

구분	내용
공공건축관리자(PA)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공모의 전반적인 관리를 주도</li> <li>운영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li> </ul>
운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방향, 사전조사, 운영 프로그램, 적정 건축규모 검토</li> <li>설계공모의 방식, 참가자격, 공고기간 검토</li> <li>설계지침서 검토 및 자문</li> <li>심사위원, 기술위원 후보자 추천 등</li> </ul>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방식, 평가방법 결정</li> <li>기술위원회 검토결과 반영 여부 결정</li> <li>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심사의견서 작성</li> </ul>
설계 공모 대행업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위원회, 발주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li> <li>설계공모 홈페이지 운영, 홍보 등</li> </ul>

공공건축관리자(PA)는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의 활용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공모 시 운영하고 있다.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공성, 원활한 수행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총괄건축가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발주기관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공공건축관리자의 위촉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보통 운영위원회의 장은 공공건축관리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의 운영에 관한 조정·검토·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운영위원회는 공모의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설계지침서의 작성 등이 주요 업무이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단 공개로 인해 많은 참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특히 심사위원의 성향을 설계자들이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방향성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구성은 설계공모의 성과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표 5-7】 심사위원회 구성 요소**

구분	내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 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li> </ul>
심사위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li> <li>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li> </ul>
전문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li> <li>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li> <li>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li> <li>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li> </ul>
심사위원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함</li> </ul>

마지막으로 설계공모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좌해줄 설계 공모 대행업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설계공모 대행은 건축사협회, 설계사무소,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며 역량이 충분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설계공모의 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 2) 설계공모 방식

공공건축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은 반드시 공모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신청사 건립의 경우 향후 100년 이상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품질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 신청사는 국제설계공모를 준비중에 있다. 이에 성공적인 설계공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설계공모가 지향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설정이 가능하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면 다섯 가지의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방식의 일반 설계공모가 있다. 응모작품 모두를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한 차례의 심사로 당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출물, 인력투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의 경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이 있다. 보통 아이디어 등의 1차 심사를 통해 1차 선정자를 선발하고 보다 구체화된 설계안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나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2단계이기 때문에 공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다.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1차 심사 시 제출물을 간소화 한다면 보다 많은 작품의 접수가 가능하며 이는 곧 공모의 흥행과도 연결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아이디어 공모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2단계에서 깊이 있는 설계 공모를 하여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세 번째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타 방식과 다르게 설계안이 아니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차이점이며 절차가 간소하여 긴급한 사업에 활용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대규모, 정책 사업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통 신진 건축사, 지역건축사 등 특정 인력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나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흥행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명공모 방식이 있다. 설계자를 지명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세계적으로 저명한 설계자를 초빙할 때 사용된다. 최근에는 2단계 공모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1차 심사에 선정된 설계자들과 지명 설계자를 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저명한 인사를 초청한다

는 점에서 홍보효과가 뛰어나나 반드시 접수 작품의 증가,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저명한 설계자와의 경쟁을 선호하는 설계자들도 존재하나, 지명 설계자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8] 설계공모의 종류

종류	정의	적용
일반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모작품 모두를 심사하여 당선자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인 경우 적용</li> <li>한차례의 심사로 당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제출물 및 인력투입이 많아 소규모 건축사무소는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li> </ul>
2단계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 후 2단계 공모에 보다 구체화된 공모안을 받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경우</li> <li>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공모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li> <li>1차 심사 시 제출물을 간소화 한다면 보다 많은 작품의 접수가 가능</li> <li>1차 심사 선정자와 지명 설계자를 2차에서 심사하는 2단계+지명공모의 형태도 존재</li> </ul>
제안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설계자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보다는 설계자의 능력 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li> <li>공모절차의 간소화로 긴급사업에 적합</li> <li>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특히 대규모, 정책 사업에서는 리스크가 있음</li> </ul>
제한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진건축사, 지역건축사 등 특정 인력 육성이 필요한 경우</li> <li>흥행이 어려우며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에도 제한적임</li> <li>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li> </ul>
지명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있는 참가자들의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우수한 작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li>지명공모 단일 방식 보다는 2단계 설계공모와 병행하여 사용</li> <li>높은 홍보효과가 반드시 접수작품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음</li> <li>오히려 지명 설계자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작품 접수가 감소할 수 있음</li> <li>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li> </ul>

<자료>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 연구자 재구성

### 3) 설계지침서 작성

성공적인 설계 공모를 위해서는 설계지침서의 효율적인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으로 설계지침에서는 사업의 목적 및 일정,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대지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5-9] 설계지침서 내용(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목적 및 일정</li> <li>•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li> <li>•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li> <li>• 관련 법규 적용기준</li> <li>•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li> <li>• 시설별 면적</li> <li>•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li> <li>•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li> </ul>
--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일반지침, 세부설계지침,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설계지침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된다.

[표 5-10] 설계지침서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일반지침	1.1 설계공모 배경
	1.2 설계공모 명칭
	1.3 설계개요
	1.4 설계공모 방식
	1.5 사용언어 및 단위
	1.6 설계공모 참가자격
	1.7 설계공모 일정
	1.8 등록
	1.9 질의응답
	1.10 제공자료
	1.11 작품제출
	1.12 익명성
	1.13 주최자
	1.14 설계공모 관리팀
	1.15 심사위원회

	1.16 당선작 선정	
	1.17 설계 계약	
	1.18 저작권 및 출판전시	
	1.19 분쟁	
2. 세부 설계 지침	2.1 설계목표	
	2.2 설계대상	
	2.3 설계프로그램 및 규모	
	2.4 대상지 개요 및 법적 고려사항	
	2.5 역사적 배경	
	2.6 도시적 조건	2.6.1 주변과의 연계
		2.6.2 차량접근체계
		2.6.3 보행접근체계
	2.7 기존 시설물 현황	
2.8 세부설계지침		
2.9 사업 예산		
3.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3.1 제출물의 종류	
	3.2 고유식별번호 및 도판번호 기재방법	
	3.3 작성 요령	
	3.4 서식 목록	
	3.5 참고자료 목록	

자료 :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서울특별시, 2017

설계지침서에 작성될 내용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계공모의 방식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여러 가지 설계 공모의 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공모의 흥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적합한 종류의 설계공모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설계공모 일정이다. 설계공모 공고에 앞서 여러차례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제출기간을 길게 두고 진행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제출물의 종류 및 방식이다. 많은 참가자들이 제출물의 종류로 인해 참여를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일반설계공모방식일 경우 과도한 제출물로 인해 소규모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제출물의 간소화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일 수 있다. 또는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사용하여 1단계에는 제출물을 간소화하고 2단계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물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접수나 우편접수의 경우 해외사는 제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이메일 접수 및 디지털 심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로 설계프로그램 및 규모이다. 너무 세부적인 Space Plan은 참여자의 창작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미리 결정하되 나머지는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시사점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정비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설계공모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다. 앞서 기술한 공공건축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공공건축관리자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다. 시정의 방향, 신청사의 건립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건축관리자를 위촉하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관리자를 위촉할 때 역할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신청사 건립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단순히 설계공모만을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 역할과 권한이 다를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위촉된 공공건축관리자를 추후에 고양시 총괄건축가로 임명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관리자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공모방식, 제출도서, 심사위원 추천 등의 주요한 업무를 하게되므로 공공건축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시정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을 위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심사위원의 위촉이다. 설계공모의 성패는 심사위원에 달려있다. 특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심사위원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신중한 위촉이 필요하다. 심사위원의 수준은 작품의 수준과 참가유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참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작품의 대상과 심사위원이다. 신청사의 경우 작품의 대상은 정해져 있으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의 명단을 보면 이미 본 설계공모의 공정성, 참신성, 기획의도 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심사위원을 모두 50대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소장으로 구성 등 설계의도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설계지침서의 작성이다.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기술했듯이 공공건축관리자, 운영위원, 심사

위원의 구성과 함께 좋은 설계지침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는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설계공모의 방식이다.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상의 다섯가지 공모방식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주로 일반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설계공모의 경우 소규모건축사사무소는 참여하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심사위원과 참여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절차와 일정이 간소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2단계 설계공모는 여러 가지 방법의 혼용이 가능하다. 1단계는 아이디어 공모, 2단계는 해외 유명 건축가의 지명공모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는 1단계는 공개 공모, 2단계는 국내사와 해외사가 함께 공모하도록 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하지만 지명공모를 혼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흥행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출도서의 간소화·디지털화이다. 제출도서를 간략하게 한다면 소형 건축사사무소도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방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해외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메일 접수 및 디지털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설계프로그램 및 규모의 지양이다. 설계자가 창작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사전기획업무의 필요성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기획설계를 통해 고양시 신청사에 대한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설계지침서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진행하였으나 건립 타당성에 치우쳐진 절차인 만큼 기획설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건립예정지인 주교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대지의 조건이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재 위치로 확정되었지만 고양대로와 원당로로 인해 일종의 교통섬이 조성된 곳으로 도시의 맥락을 연결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따라서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연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하며 공공건축관리자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획설계에 대한 의견 도출이 필요하다.



## 제2절 신청사 기본설계지침(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침(설계공모 방식, 작품의 제출), 설계지침(건립 비전 및 방향,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설계방향)에 한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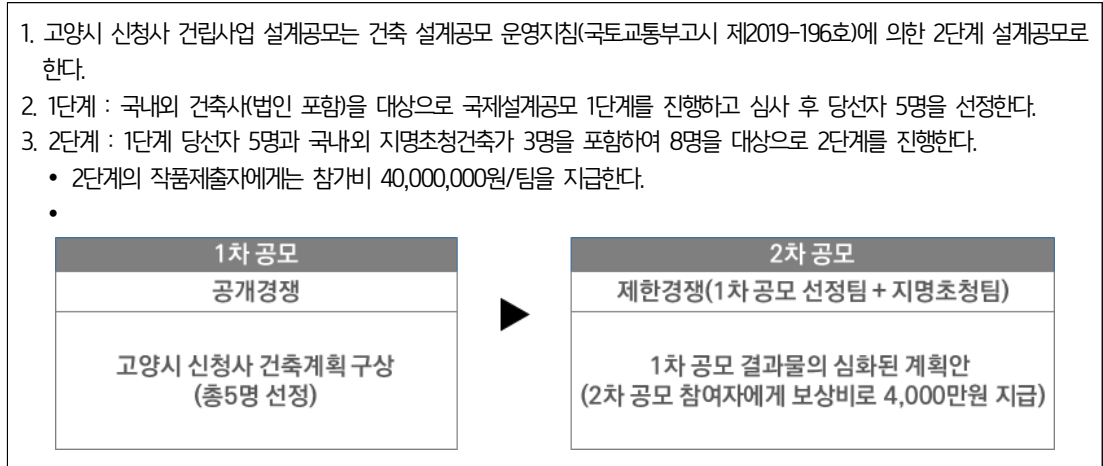
### 1. 일반지침

#### 1) 설계공모 방식

최근에 진행된 국제설계공모의 경우 주로 2단계 설계공모로 진행되었고 순천시청사와 종로구청사는 심사만 2단계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심사를 포함하여 2단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주시청사의 경우에는 2단계와 지명공모를 병행하여 상대적으로 흥행에 성공(52작품 접수)하였고 좋은 작품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순천과 종로의 경우에도 2단계 지명으로 진행하지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바 있다. 설계대상의 성격 상 심사 방식과 흥행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단계 설계공모로 진행 시 일반설계공모에 비해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단계는 아이디어 공모로 제출도서를 간략히 하여 신진건축가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2단계 진행 시 1단계 입상자들에게 설계비 지원을 통해 설계안을 보다 완성하여 출품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단계 진행 시 1단계 입상자들과 함께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을 초빙하여 지명공모를 진행하는 방식 역시 고려해야 한다. 저명한 건축가들을 초청하는 것 자체로 고양시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흥행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1단계 입상작은 최소 5팀 이상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양시 신청사 설계공모 방식은 2단계 + 지명방식으로 제안하며 1단계 제출도서의 간략화, 1단계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을 함께 제안하였다

[표 5-11] 고양시 신청사 설계공모 방식



[표 5-12] 주요 설계공모전 공모방식

구분	설계공모방식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공개공모 + 2단계 지명공모</li> <li>• 1단계에서 당선된 3팀과 지명 초청된 4팀이 2단계 공모 참여</li> <li>• 지명초청팀 공통비용 국내 4천만원, 국외 5천만원 지급</li> <li>• 작품접수 18개</li> </ul>
국립도시건축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설계공모</li> <li>• 2차공모 참여자에게 보상비로 2,500만원 지급</li> <li>• 작품접수 60개</li> </ul>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창업센터 및 50플러스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공개공모 + 2단계 지명공모</li> <li>• 1단계 공모 당선자 2팀과 지명 초청된 5팀이 2단계 공모 참여</li> <li>• 국내 참가자 5천만원, 국외 참가자 6천만원 지급</li> <li>• 작품접수 18개</li> </ul>
청주시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공개공모 + 2단계 지명공모</li> <li>• 1단계에서 당선된 5팀과 지명초청 된 3팀이 2단계 공모 참여</li> <li>• 2단계 작품제출자에게 참가 초창비 4천만원 지급</li> <li>• 작품접수 52개</li> </ul>
순천시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설계공모(공개), 2단계 심사</li> <li>• 작품접수 23개</li> </ul>
종로구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설계공모(공개), 2단계 심사</li> <li>• 작품접수 24개</li> </ul>

## 2) 작품의 제출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콘셉트 디자인 등만 포함하도록 한다. 이후 2차 제출도서에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의 설계도면과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품의 제출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통일하여 별도의 출력인쇄비의 낭비를 막아 보다 많은 작품의 출품을 유도해야 한다.

[표 5-13] 고양시 신청사 작품 제출 도서

<p>1. 참가자는 고양신청사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제출한다.</p> <p>2. 온라인 제출 자료 목록 : 참가의향서(배치도 및 단면도, 개념도 등 관련 이미지 파일)</p> <p>3. 참가 의향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국제공개 설계공모 참가의향서는 A1(594mm × 841mm) 크기로 작성하며 4매로 제한한다.</li> <li>• 필수적으로 제안되는 기본 아이디어를 포함한 비전 및 접근방향을 제안한다.</li> <li>• 모든 제안은 자유롭게 표현(텍스트, 다이어그램) 할 수 있으나, 색상 및 재료가 적용되는 Sketchup 이미지는 불가하다</li> </ul>	
내용	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신청사 랜드마크 전략과 매스디자인 개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향후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랜드마크 전략을 제안하며 주변 맥락을 고려한 배치와 내부 프로그램의 성격 및 기능에 맞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한다.</li> </ul> </li> <li>• 주변환경 연계 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양신청사는 기존 청사와 입지가 상이하므로 기존 청사 주변의 도시조직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li> <li>- 기존의 대장천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 디자인을 제안한다.</li> <li>-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행, 외부공간 등과 연계가 원활하도록 제안한다.</li> </ul> </li> <li>• 평면 및 단면 개념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실, 과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며 특히 민원, 대민 활동이 높은 부서의 공간을 저층부에 구성하여 시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계획한다.</li> </ul> </li> </ul>	4매

2차 제출도서는 1차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설계도면집, 설계모형, 심사발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한다.

**[표 5-14] 2단계 제출도서 예시**

제출물	수량	서식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1식	별도서식 참조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1식	별도서식 참조
관련법규검토서	1식	별도서식 참조
개략공사비 내역서	1식	별도서식 참조
설계도판	1식	A1 × 8매
설계설명서	20부	A4 20페이지 이내
설계도면집	20부	A3 30페이지내 이내
모형	1식	A1 크기

**[표 5-15] 주요 설계공모전 제출도서**

구분	1차	2차
창동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의향서(A3 표지포함 3매 15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도판 1부(10mm 폼보드 위에 부착된 A0 3매)</li> <li>설계설명서 20부(A4 세로방향, 총 10매 이내)</li> <li>발표자료 20부(A4 가로방향, 단면 인쇄)</li> <li>설계 모형(800mm x 800mm, 축척 1/400)</li> </ul>
국립도시건축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도판(디지털패널, 1,219.2 * 685.8, 최대 30MB 이하)</li> <li>설계설명서(A4 10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도판 1부(10mm 폼보드 위에 테두리 없이 부착된 A1 8매)</li> <li>설계설명서 15부(A4 15매)</li> <li>발표자료(15분 이내)</li> </ul>
창동상계 세대공유형 창업센터 및 50플러스 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공모 참가신청서 1부</li> <li>1단계 아이디어 설계설명서 15부 (A3 4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도판 1부(10mm 폼보드 위에 부착된 A0 2매)</li> <li>설계설명서 15부(A3 30매)</li> <li>설계모형 1작품(1/300, 700mm*600mm 이내)</li> <li>심사발표 1식(PPT)</li> </ul>
청주시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제안서</li> <li>1단계 설계도판(A1 4매)</li> <li>1단계 설계설명서(A3 10페이지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제안서</li> <li>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li> <li>관련법규검토서</li> <li>개략공사비 내역서</li> <li>도판(A1 8매)</li> <li>설계설명서(A4 20페이지 이내)</li> <li>설계도면집(A3 30페이지 이내)</li> <li>모형</li> </ul>
순천시청사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시설별 면적표 / 추정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 관련법규검토서 / 심사용 설계도판(A1 4매) / 설계설명도면집(A3 30페이지 이내) / 모형 1개	
종로구청	참가신청서 1부 / 설계도판 1식(A0 3매) / 설계설명서 1식(A3 30쪽이내) / 모형 1식(A1) / 발표용 파일	

## 2. 설계지침

### 1) 건립비전 및 방향

건립비전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사회에 열려 있는, 지속 가능한 신청사로 제안하였다. 또한 청사가 가져야 하는 광역, 지역, 건축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청사,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 스마트 청사의 5개로 세분화 하였다.

[표 5-16] 고양시 신청사 건립비전 및 세부 목표

<p>1. 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사회에 열려 있는, 지속 가능한 신청사</li> <li>• 광역사회 역할 : 평화역사, 자연생태, 첨단지족, 문화복지, 균형소통</li> <li>• 지역사회 역할 : 필요기능 설정(복합화), 주변지역 연계</li> <li>• 건축물로서의 역할 : 디자인적 측면,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li> </ul> <p>2.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으로서 남북 평화의 중심 도시로서의 상징성 부여</li> <li>• 군 시절부터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까지 고양시의 역사성 보존</li> </ul> <p>3.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장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추구</li> <li>• 기존 도시조직과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 실현</li> <li>• 고영대로, 호국로 등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가능한 청사 구현</li> </ul> <p>4.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복합화</li> <li>• 행정업무와 함께 시민 향유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li> <li>•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 부여</li> </ul> <p>5.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건립</li> <li>•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건축물로서의 가치 추구</li> <li>•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안전한 청사 구현</li> </ul> <p>6.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스마트 청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혁신적인 업무 공간 조성</li> <li>• 스마트오피스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업무 효율성 증대</li> <li>•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계획</li> </ul>
---

## 2)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주요영역별 고려사항은 본 국제설계공모의 범위를 제안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크게 청사영역, 의회영역, 시민공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존 청사 및 시의회, 문예회관의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청 사무공간은 각 국, 실, 과의 업무성격에 따라 배치하고 독립적인 공간 또는 공유 오피스 등 혁신적인 공간을 창의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시민공간은 접근성이 좋은 저층부에 계획하며 어떤 시설을 복합할 것이지에 대해 추후 보다 구체적인 안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회공간 역시 향후 특례시 권한 강화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 [표 5-17]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설계의 영역은 청사영역, 의회영역, 시민공간영역으로 구분한다.</li> </ul> </li> <li>2. 기존 청사와 신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청사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새로 건립된 청사로 이전 후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의 배치계획 및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li> <li>• 기존 청사의 경우 철거가 예상되는 청사를 제외하고 시의회 건물과 문예회관의 활용 및 신청사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li> </ul> </li> <li>3. 시청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실, 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배치하되, 민원인과 소통이 필요한 과는 시민 이동 동선과 가깝도록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li> <li>• 보안 등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공간 구성 또는 공유 오피스 등을 사용한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li> </ul> </li> <li>4. 시민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저층부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주변 지역의 동선과 연계하여 구성한다.</li> </ul> </li> <li>5. 의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공간은 고유 업무의 효율 및 특례시 지정에 따른 권한 상승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li> </ul> </li> </ol> |
|--|

### 3) 설계방향

설계방향으로는 입지적 공간계획,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 교통 및 동선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입지적 공간계획으로는 고양시 신청사가 지향해야할 미래 비전, 도시의 맥락, 남북 평화의 중심지 등의 상징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배치계획에서는 현재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대장천의 활용, 기존 청사, 문예회관, 시의회 건물과의 연계, 대중교통 확충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외부공간계획으로는 주요 도로로 인해 단절된 대상지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가 핵심이며 주변의 보행가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연계 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교통 및 동선계획에서는 식사트램, 고양선, 교외선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확충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주변 교통의 흐름 반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공간 혁신 계획으로는 스마트 오피스, 업무공간과 민원인 공간의 분리, 특히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가변성 있는 공간구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친환경 스마트 빌딩 계획에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명시하였으며 평면계획에서는 주민 편의시설의 접근성, 기능별 영역의 분리,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가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참가자의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출을 권장하였다.

#### [표 5-18] 세부지침

##### 1. 입지적 공간계획

-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의 미래 비전이 제시하는 독창성과 공공성을 가지며 설계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한다.
-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자족도시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의 연계를 바탕으로 계획한다.
- 접경지역으로서 남북평화의 중심도시로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 배치계획

-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대장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물 배치를 계획해야 하며 대장천을 조경 및 정원의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
- 기존 청사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참가자의 제안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남기는 등 기념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문예회관과 시의회 건물의 경우 향후 활용 및 연계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향후 대중교통 확충(식사트램, 고양선, 교외선)에 대비하여 대상지 북측에 10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선을 둔다.
-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과 부지위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하고 건물의 배치와 외부공간 조성을 동시에 고려하

- 여 외부공간이 주변지역 보행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 향후 업무환경변화로 인한 수평이나 수직 증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외부공간계획
- 원당로, 호국로, 고양대로로 인해 단절된 대상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측과 동측의 기성시가지와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 주변의 보행가도와 연계된 입체적인 동선계획을 통해 가로 및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며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4. 교통 및 동선계획
- 향후 대중교통 확충(식사트램, 고양선, 교외선)에 대비한 신청사의 진출입부 및 교통상황에 따라 최적의 교통계획을 제안한다.
  - 차량이 대상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5. 공간 혁신 계획
-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된 미래지향적인 업무방식과 조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계획한다.
  - 업무공간과 민원인 공간, 휴식공간이 분리연계되는 조화로운 디자인을 제안한다.
  -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장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하며 가변성 및 융통성이 있는 공간 구성과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를 추구한다.
6. 친환경스마트 빌딩 계획
- 환경 친화적 건축물로서 제어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우수활용, 에너지 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취득을 감안한다.
  -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건축물을 고려하도록 한다.
7. 평면계획
- 민원 관련 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은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개방성이 높고 공유 가능한 실들을 집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간의 연결성을 증대시킨다.
  - 기능별 영역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평면을 구성하여 혼잡성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인원, 장비의 증가 및 개편을 수용하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향하며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 사무공간에는 Co-working 스페이스와 직원들의 휴게공간 및 복지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한다.
  - 실별 면적계획을 기준으로 업무적 연관성을 고려해 국부서별 조닝(Zoning)하고, 복합화를 통해 이용이 증진되거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시설 및 영역은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공간의 부서별 배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다.
8. 단면계획
- 계획된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층고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수직, 수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보안계획



- 신청사 출입 동선은 시민공간, 민원공간(민원실), 사무전용공간, 의회공간으로 분류하며, 사무전용공간은 별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분하여 출입관리 시스템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청과 의회는 방법 및 보안을 위한 당직실 등 관리공간에 대한 별도의 출입동선과 각종 기기의 반입, 폐기물 처리 등 청사의 서비스용 통로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추가 아이디어 제안

- 공모 지침 외에 통합구청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기능,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추가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 6 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 제절 연구결과 종합

### 1. 공공청사 건립 및 갈등유형 사례 조사

본 연구는 고양시 신청사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건립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사의 개념과 흐름을 고찰하고 다양한 공공청사 건립 사례를 분석하였다. 시대별로 청사는 획일화,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 내의 행정·복지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며 랜드마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고양시청사는 업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본청사 주변에 외부청사가 산재하여 있어 대민업무에도 차질이 있는 상태이다. 본연의 행정업무 기능 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 도시건축물로서의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수의 공공청사 건립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본연의 건립 목적 및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규모와 함께 시민 문화기능을 복합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흥행을 유도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방안 도출을 위해 공공사업 시 갈등 유형과 관리방안 및 갈등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갈등완화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중재개입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었다. 타지자체의 청사 건립시 주요 갈등 요인과 해결방안 등을 고찰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공공청사 건립 비전 설정

고양시 신청사의 건립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크게 광역사회 역할, 지역사회 역할, 건축물로서의 역할의 세 가지 분류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로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청사의 개념과 흐름 및 현 고양시청사의 기능역할을 고찰하였다. 2000년대에 공공청사 건립이 활발해지면서 외관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2010년대에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설계공

모가 의무화되면서 건축물의 창의성 및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복합청사 건립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청사는 업무공간이 현격히 부족하고 주차공간 및 민원인 이용 공간 부족으로 대민업무기능도 저하된 상태이다. 지역의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어려우며 안전이나 친환경 건축물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건축물로서 역할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디자인적 측면, 향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전·환경적 측면, 행정업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의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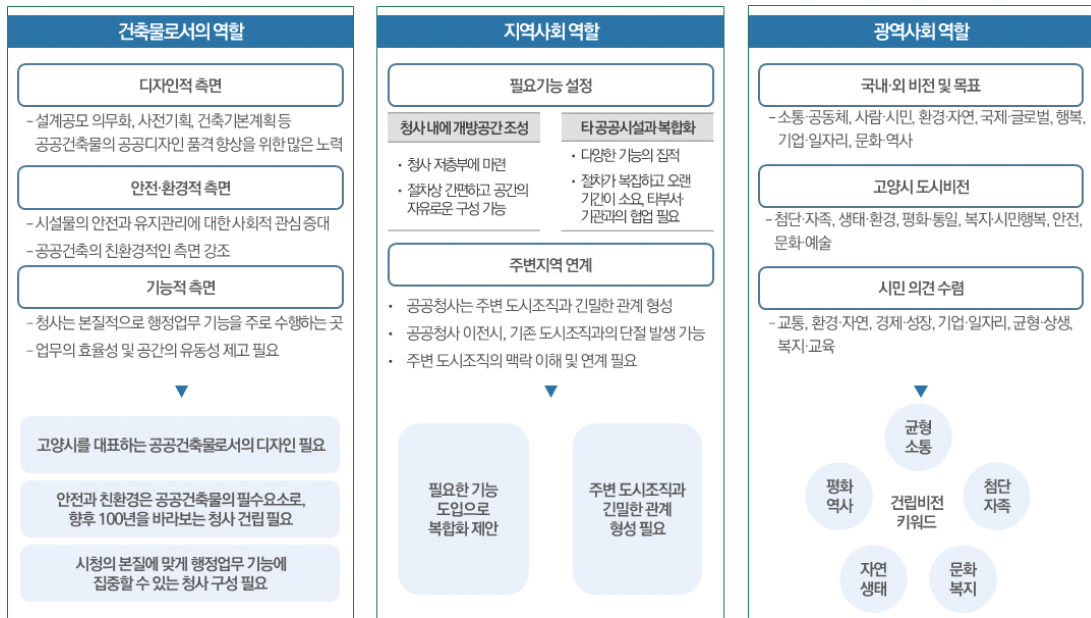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지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주변환경과 생활 SOC를 분석하였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으며 대장천이 흐르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현 시청사 부지와 거리가 있으며 교외선, 고양대로, 호국로 등의 도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청사 주변의 도시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설계 아이디어 도출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행정기관간의 소통부재, 디자인 철학의 부재 등으로 주변 환경과 단절된 건축물이 건립되어 도시의 단절요소로 작동하였다. 청사 이전시 주변 도시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공공청사는 행정중심이자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복합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양시 생활 SOC를 경기도와 고양시 전체, 고양시 3개구, 현 시청사가 입지한 주교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를 파악하였다. 청사 내에 시민개방공간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타 공공시설과의 복합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기능은 고양시와 덕양구, 주교동 일대로 나누어 고려하되 향후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할 역할로 주변지역 연계와 필요기능 설정(복합화)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광역사회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도시들의 비전 및 고양시의 도시비전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각 관련계획들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화역사, 첨단자족, 자연생태, 문화복지, 균형·소통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수도권, 경기지역으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될 평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이 있으며 수도권, 경기지역의 발전을 이끌 최첨단 자족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강 수계와 인접한 도시

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불균형적 도시성장에 따른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건축물로서의 역할(디자인적 측면, 안전·환경적 측면, 기능적 측면(행정)), 지역사회 역할(필요기능 설정(복합화), 주변지역 연계), 광역사회 역할(평화역사, 자연·생태, 첨단자족, 문화복지, 균형·소통)로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사회에 열려 있는, 지속 가능한 신청사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림 6-1] 건립비전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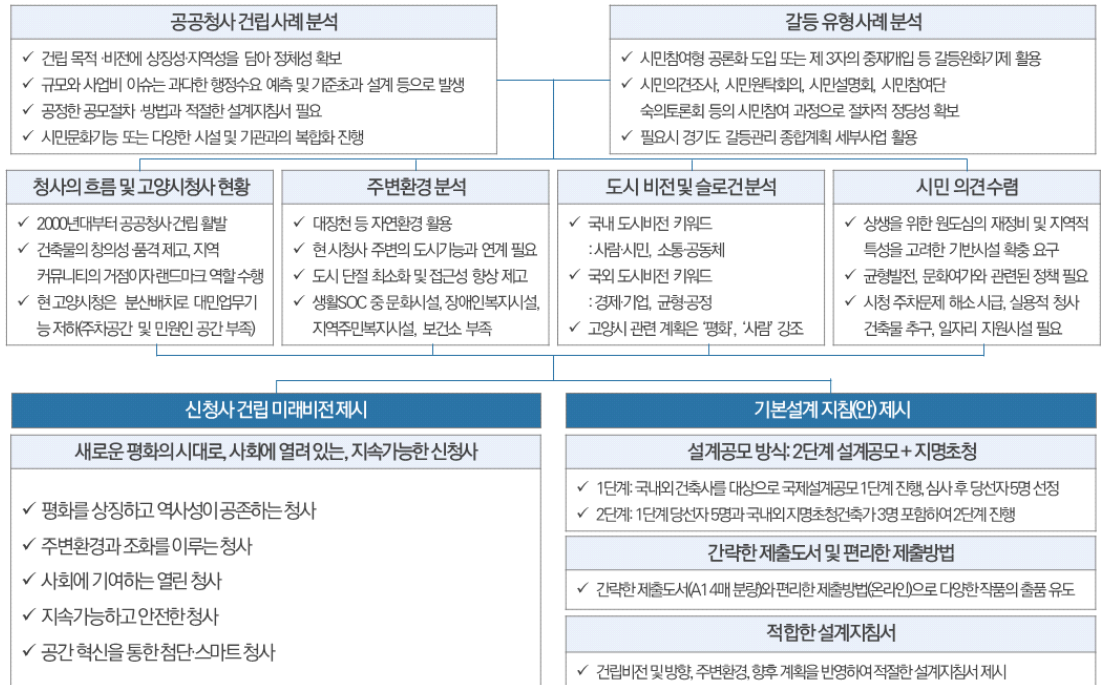


### 3. 국제설계공모 지침(안) 작성

고양시신청사는 2020년 9월 국제설계공모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설계 공모를 위해 공공건축 및 설계공모 절차를 분석하였고 기본설계지침(안)을 제안하였다. 2007년 건축기본법,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공공건축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면서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시행중이나 아직 고양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중이며 공공건축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가 남아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설계 공모 대행업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건축관리자(PA, Project Architect)의 위촉과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설계공모지침서는 일반지침과 설계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계공모 방식과 작품의 제출이다. 공모방식으로는 국제적인 고양시의 홍보, 설계공모의 흥행, 신진 건축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출품 등을 위해 2단계 설계공모와 지명초정방식의 혼용을 제안하였다. 작품의 1차 제출도서는 최소한도로 간략화하여 보다 많은 작품의 제출을 유도하였다. 설계지침은 앞서 도출된 비전을 토대로 평화를 상징하고 역사성이 공존하는 청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사,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청사, 가능하고 안전한 청사, 공간 혁신을 통한 첨단 스마트 청사의 5개로 세분화하였고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및 설계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림 6-2] 연구의 종합





## 제2절 정책 제언

###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결과, 국제설계공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우수한 공공건축관리자(PA)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이끌게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된 공공건축관리자(PA)를 추후에 고양시 총괄건축가로 임명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심사위원 추천 등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므로 공공건축관리자(PA)와 마찬가지로 시정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계공모의 성패는 심사위원에 달려 있다. 심사위원의 수준과 역량은 작품의 수준과 참가,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사위원은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서 이미 설계공모의 공정성, 참신성, 기획의도 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설계공모 대행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므로 시와 대행업체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정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2. 주민의견 수렴 및 복합화 대상 시설 검토

고양신청사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으며 입지가 정해졌으나 향후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추진과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청사 건립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 공공청사는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공공청사가 복합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청사 내부 또는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합 복합행정타

운을 건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양시의 생활 SOC를 분석하여 고양시와 덕양구, 주교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참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지향할 수 있는 시민복합문화시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모일정, 예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참고하여 고양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 3. 기존 도시조직과 신청사 간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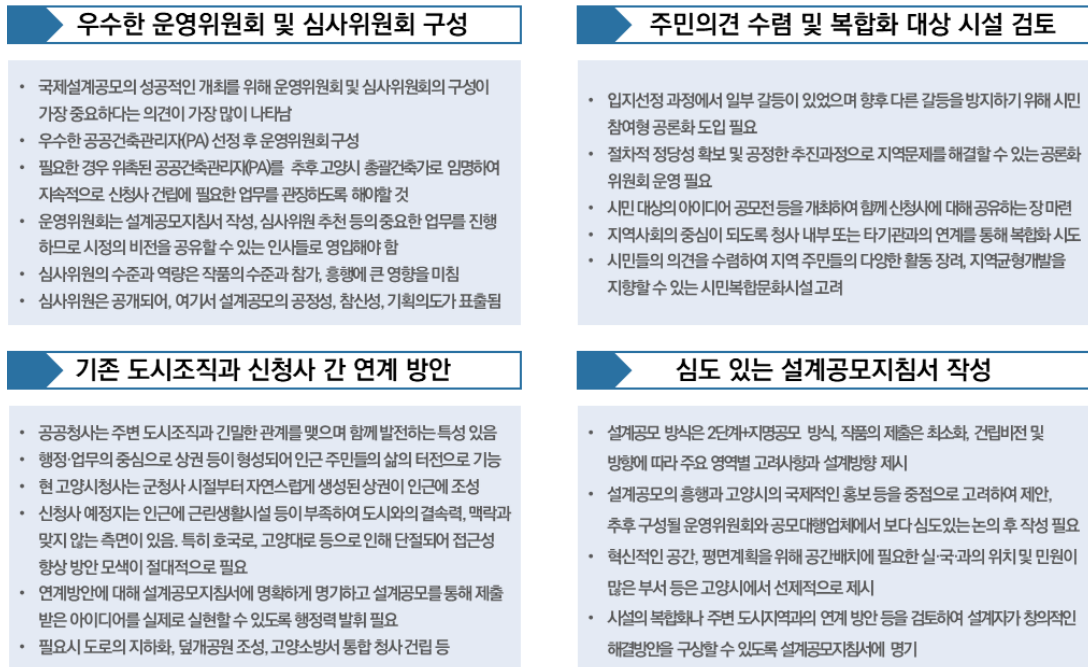
공공청사는 주변 도시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행정업무의 중심으로 상권 등이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현 고양시청사는 군청사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상권이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고양시 신청사 예정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부족하며 도시와의 결속력, 맥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양대로, 호국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양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계방안에 대해 설계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명기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제출 받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조직의 단절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도로의 지하화, 덩개공원 조성, 고양소방서 통합 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의 현실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4.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본 연구에서는 일반지침(설계공모 방식, 작품의 제출), 설계지침(건립 비전 및 방향, 주요영역별 고려사항, 설계방향)에 한하여 제안하였다. 설계공모 방식은 2단계+지명공모를, 작품의 제출은 최소화하여, 건립비전 및 방향에 따라 주요영역별 고려사항과 설계방향을 제시하였다. 설계공모의 흥행과 고양시의 국제적인 홍보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제안하였으며 추후 구성될 운영위원회와 공모대행업체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설계공모지침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적인 공간, 평면계획을 위해서는 공간

배치에 필요한 실, 국, 과의 위치 및 민원이 많은 부서 등은 고양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설의 복합화나 주변 도시지역과의 연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지침서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그림 6-3] 정책 제안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기도청(2020). 2020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 경기도청(2020).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
- 구기욱(2019). 퍼실리테이션과 협상의 협력적 분쟁해결. 협상연구 제22권 제2호, p.77-97
- 김도희(2013). 공공정책갈등의 제3차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p.31-54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세스 mapping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 박형서(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울시(2019). 2019 서울갈등포럼 자료집
- 신준섭(2014). 갈등관리 Role Model 확산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 이용환(2018). 시민참여를 통한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경기연구원
- 이순자(2012).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74권, p.195-220
- 이재광(2014).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정정화(2012).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p.1-22
- 황창호(2019).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6권 제1호, p.31-61
- 염철호 외(2018).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박형서 외(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 이재광 외(2014).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순자 외(2012).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청주시청.
- 송성욱 외(2020).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순천시청.
- 한국경제행정연구원(2015). 성남시-의회-구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원가계산보고서. 성남시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 연구소(2008). 지자체 청사 건설사례.
- 김중겸-제갈성(2005). [프로젝트 리포트]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대한건축학회.
- 용인시(2016).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교통영향평가(사후변경신고).
- 감사원(20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방청사 건설실태.
- 청주시(2020).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단계 지침서.
- 순천시(2020). 순천시 시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지침서.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0). 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건 확정.
- 종로구(2020).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지침서.
- 종로구(2020).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종로구(2020). 종로구 통합청사 설계공모 지침서-시설별 세부지침서.

경기도(2020). 경기도 갈등관리 매뉴얼(2020)  
 경기도(2020).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경기도(2015). 경기비전 2040.  
 서울특별시(2014). 203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원시(2018).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인시(2018).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성남시(2020).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창원시(2016).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변경.  
 부천시(2017). 2030 부천도시계획(변경).  
 김포시(2015).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  
 파주시(2017).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  
 양주시(2014). 2020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반정화 외(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파리. 서울연구원.  
 이정찬(2019).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해양부 외(2009).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09.4. 변경사항 반영.  
 경기도(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경기도(2015).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경기도(201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고양시(2016).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고양시 내부자료(2020).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고양시(2016).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박종혁 외(2019).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재수립 연구-고양비전2030-. 고양시정연구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서울특별시(2017). 공공건축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  
 서울갈등포럼 자료집(2019)

#### [기타자료]

주간경향(2009). 호화청사, '국민의 눈' 무서운 줄 모른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0912101358111>.(접속일 2020.09.23.)  
 용인시공식블로그(2018). 용인시 시민여식장에서의 품격있는 작은 결혼식.  
<https://blog.naver.com/govlrodtnr/221398907123>.(접속일 2020.09.23.)  
 아시아투데이(2016). 용인시청 광장 '사계절 잔디공원'으로 변신...시민의 품으로  
[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3010001444](http://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3010001444).(접속일 2020.09.23.)  
 서울신문(2005). 용인시 새청사 덩치 시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0715202001>.(접속일

- 2020.10.05.)
- 경향신문(2019). 용인시청사 ‘호화청사는 옛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22045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22045005).(접속일 2020.10.05.)
- 성남비전(2019).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인기 ”북캉스 족“ 하루 400명 찾아. <http://snvision.seongnam.go.kr/10622>.  
 (접속일 2020.09.23.)
- 성남비전(2015). 성남시민 개방 시설 인터넷 예약 68개로 확대. <http://snvision.seongnam.go.kr/4863>.(접속일 2020.09.23.)
- 성남비전(2012). 성남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려. <http://snvision.seongnam.go.kr/2060>.(접속일 2020.09.23.)
- 성남비전(2018). 성남시의회, “BOOK 돌음” 도서관 개관식 가져. <http://www.seongnamvision.com/10615>.(접속일 2020.09.23.)
- 조선일보(2008). 3222억, 성남시 ‘호화 신청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005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0059.html).(접속일 2020.09.23.)
- 뉴스한국(2010). 성남시청사 ‘호화’ 아니라니까”...1월 중 밝혀질 듯.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112204914n5213](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112204914n5213).(접속일 2020.10.05.)
- SBS 뉴스(2017). 호화청사’ 아닙니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성남시청.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2762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27624).(접속일 2020.10.05.)
- 그린포스트코리아(2011). ‘찜통청사’ 성남시청이 친환경 건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접속일 2020.10.05.)
- 경인일보(2011). 성남시청 냉동청사... 화려한 외양 불구 에너지 효율 낙제 찜통논란 이어 또.  
<http://m.kyeongin.com/view.php?key=618470>.(접속일 2020.10.05.)
- 조선일보(2010). 에너지효율 ‘낙제’...성남시 시설개선 나섰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2211.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2211.html).(접속일 2020.10.05.)
- 연합뉴스(2010). ‘아방궁’ 성남시청 시장실이 달라졌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100628077200061>.  
 (접속일 2020.10.08.)
- 중앙일보(2014). 성남시청사 개방 연간 100만명 다녀가. <https://news.joins.com/article/14418961>.(접속일 2020.10.08.)
- 스노헤타 홈페이지(2020). Cheongju New City Hall. <https://snohetta.com/projects/517-cheongju-new-city-hall>.  
 (접속일 2020.09.22.)
- 충청리뷰(2020). 미래 청주시청사 이렇게 짓는다. [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18](http://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18).(접속일 2020.09.22.)
- C3KOREA(2020).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스노헤타’ 당선.  
[www.c3korea.net/snohetta-wins-the-international-competition-for-cheongju-new-cityhall](http://www.c3korea.net/snohetta-wins-the-international-competition-for-cheongju-new-cityhall).(접속일 2020.09.22.)
- 뉴스프리존(2020). 청주시청사 조감도 공개.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48>.  
 (접속일 2020.09.22.)
- 건설경제(2020). 해외지명 건축가 2단계 직행...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논란’.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1161415423810120>.(접속일 2020.10.08.)
- 충북일보(2020).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공정성 논란.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08349>.  
 (접속일 2020.10.08.)
- 열린뉴스통신(2020). 청주시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전면 공개한다.  
<http://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0464>.(접속일 2020.10.08.)

- 순천광장신문(2019). 순천시 신청사, 시민 주도로 기본계획 공청회 열린다.  
<http://agor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666>.(접속일 2020.09.25.)
-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홈페이지(2020).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당선작.  
<http://www.scnewcityhall-compe.org/>.(접속일 2021.02.06.)
- 순천독립신문(2020). 순천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선정, 국비 15억 확보  
[http://www.sunchon123.com/kr/bbs/board.php?bo\\_table=subpage\\_01&wr\\_id=1069](http://www.sunchon123.com/kr/bbs/board.php?bo_table=subpage_01&wr_id=1069).(접속일 2020.10.19.)
- 한국일보(2019). 순천시 시민주도 신청사 건립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51413080021>.  
 (접속일 2020.10.19.)
- 대한전문건설신문(2020). 순천시 신청사 건립 탄력..행안부 타당성 조사 통과.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98>.(접속일 2020.10.19.)
- 매일경제(2019). 종로구 신청사, 광화문-종각역과 연결된다...연내 설계 공모.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52560/>.(접속일 2020.10.08.)
- 뉴데일리경제(2017.2.7.). 경기도청 이전 갈등 일단락, 6월 광고 착공.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7/02/07/2017020710056.html>.(접속일 2021.02.11.)
- 염철호·임현성, 공공청사 건축 디자인 기준 설정 방안 연구, 2010.
- 고양시,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사업(기본)계획서, 2020.
- 경기관광포털사이트(2012). 고양시문예회관. <https://url.kr/DFvWRU>.(접속일 2020.11.03.)
- 대한민국구석구석(2020). 고양시문예회관, 대한민국구석구석 <http://me2.do/GHMafzhG>.(접속일 2020.11.04.)
- 문예회관(2020). 체육관 안내. <http://www.gys.or.kr/goart/intro/infor.php#>.(접속일 2020.11.04.)
- 고양시청갤러리 600(2017). 2017년 3월 전시소개. <https://url.kr/aGmUW0>.(접속일 2020.11.04.)
- 폴리뉴스(2011). 고양시, 에너지절약 작은 실천부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79629>.(접속일 2020.11.05.)
- 고양일보(2020).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 총력. <http://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9>.(접속일 2020.11.05.)
- 공공프리즘(2020). 오래된 고양시청사를 시민문화갤러리로 “고양시청갤러리600”. <https://url.kr/Db6yfm>.(접속일 2020.11.05.)
- 국민참여입법센터(20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019120/detailR>.(접속일 2020.11.09.)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2018). 건강한 도시 등 3대 도시상 제시하는 ‘2050 도시비전’(영국 에든버러시).  
<https://www.si.re.kr/node/60146>.(접속일 2020.11.05.)



# 부록

민간 전문가 현황



##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박인석 (명지대 건축대학 학장)
-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 건축문화진흥 분과위원회
- 강예린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김기수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 김아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 김영욱 (세종대 건축공학부 교수) / 국토환경디자인 분과위원장
- 김영철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 김정임 (㈜ 서로아키텍츠 대표)
-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박철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장)
- 이경아 (한국전통문화대 전통건축학과 교수)
-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 이효원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 전속희 (와이즈건축 대표)
- 전영훈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 정책조정 분과위원장
- 정명철 (㈜에이엠지그룹건축사 사무소 대표)
- 최동희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한영근 (㈜아키펴리건축사 사무소 대표)

## 2. 민간전문가(총괄, 공공건축가)

### 1) 서울시

명칭	지역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시기	임기
		성명	소속		
총괄건축가	서울시	김승희	서울대학교	2019.01.	2년
지역총괄계획가	서울시 서대문구	주대관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2015	1년
총괄건축가	서울시 은평구	한영근	(주)아키펠리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승현	스튜디오인로코 (StudioinLoco)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정은	건축사사무소 에브리아키텍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제용	이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진구	아이엠에이(IMA)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곽은선	이에스건축이엔지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구선주	구우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경은	오피스 경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용규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집단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이철	갓고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태원	토호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현정	아키에듀 건축연구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권현효	건축사사무소 삼간일목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경남	(주)본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낙훈	유아이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도훈	OFFICEUNKNOWN 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동규	무유기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미희	소수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민석	노선 아키텍처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민찬	(주)디에스엔유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병찬	한국예술종합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선욱	종합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세진	스키마(skimA)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수석	SKA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승훈	브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시영	에스와이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영아	스튜디오오리진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영옥	나비연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윤수	바운더리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은진	에스엔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이홍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재운	플레인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정민	(주)월드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정섭	(주)건축사사무소 에프엘아키텍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정수	명지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지혜	봄도시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진호	건축사사무소 시움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철호	스튜디오포마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태영	스튜디오메조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현숙	(주)이엔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현아	아이엔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효영	김효영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희진	(주)선인터라인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나승현	(주)에이그래프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남기봉	남기봉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남정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LIM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류정민	구미리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류종미	류와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맹필수	(주)엠엠케이플러스 (MMK+ Inc.)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문정환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민서홍	MMKM ASSOCIATE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선영	오-스케이프아키텍트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성기	(주)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수정	(주)건축공방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영아	아틀리에 미추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윤경	매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재광	(주)목양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정환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종훈	(주)비컨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주연	TEA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현진	에이치제이피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배지영	시와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백창용	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서재원	에이오에이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석정호	HOGA Architecture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성나영	(주)에이비씨티건축사사무소 (AbCT,Inc.)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명숙	슬로프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민재	에이앤엘스튜디오건축사사무소 (AnLstudio)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성진	볼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지현	스페이스숨건축사사무소 명지대학교 건 축대학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현보	BO.PUB.신현보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호섭	(주)건축사사무소 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안기현	한양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안택진	이상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양근보	근보양 앤 파트너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염상훈	연세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오상훈	단국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오정식	(주)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왕성한	소솔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원홍재	건축사사무소 도시공작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경동	이이케이건축사사무소 (eek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대웅	(주)건축사사무소 시월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종수	(주)코어건축사사무소(CoRe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석민	사이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종인	아이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지호	(주)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근식	LKSA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도은	건축사사무소 이와임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동복	아이에이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명호	mInp 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민선	(주)메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성재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용주	이용주 건축스튜디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원석	W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유정	YL Architecture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재원	제이이즈워킹 건축사사무소(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주영	지오아키텍처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주한	(주)피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주형	(주)에이알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중희	투엠투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지영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도리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지혜	배재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혜승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뮤트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호준	건축사사무소 노드아키텍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근풍	에이아이엠건축/ 인하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미정	stpmj Architecture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수현	와이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승모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지환	제로투엔 건축사사무소 종합건설(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장수정	건축권장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장유진	인시추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보림	(주)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상규	보편적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원	건축사사무소 숲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재영	(주) 건축사사무소 오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필준	Studio 李心田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성철	사이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우석	건축사사무소 공장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은주	(주)건축사사무소오드투에이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의엽	(주)에이엔디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재학	상하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혜진	도시건축사무소 어반아키움/경북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윤희	구보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장희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주희	아르키바우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진만	조진만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한무	디어건축사사무소 (DEARARCH)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주성용	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주순탁	플롯아키텍처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채순화	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천경환	깊은풍경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천장환	경희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교식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여진	플롯아키텍츠 Plot 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재복	오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정우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창규	로에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혜진	오즈앤엔즈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한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현승헌	(주)선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현창용	건축사사무소H2L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홍규선	여느건축디자인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홍양표	(주)에이오씨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홍영애	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병국	와이드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승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호원	스튜디오보이드건축사사무소/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고영선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구승희	(주)크라프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경희	(주)건축사사무소 모도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도연	건축사사무소 도연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도훈	(주)건축사사무소 코비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동진	(주)로디자인 도시환경건축연구소/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동희	건축사사무소케이디디에이치 (KDDH)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범중	(주)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성한	홍익대학교(주)건축사사무소 아크바디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수영	(주)숨비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시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원운	현인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은미	이엠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인화	건축사사무소 다인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재성	홍익대학교 / CSDG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종범	건축사사무소 주우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주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지철	(주)기용건축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진숙	공명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태균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택빈	이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현우	SNH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남옥재	경민대학교 이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남지연	(주)건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노휘	디디스튜디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마성호	(주)엠과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민경식	(주)민경식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상욱	(주)건축사사무소 자향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성기	노마드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성준	(주)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성철	(주)에이플레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성현	(주)씨드아키텍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세희	(주)지안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영일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종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향섭	가천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현진	(주)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백현아	비앤제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변정석	건축사사무소 레드박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서윤주	(주)디안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송하엽	중앙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종환	(주)맥스트랫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심재현	세종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오섬훈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오영섭	지우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오혁근	(주)건축사사무소 프로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우의정	(주)건축사사무소 메타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상미	마디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규섭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윤종수	아리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강수	생각나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경선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관직	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상대	(주)스페이스연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성석	하우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순석	(주)건축사사무소더블유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옥화	(주)HOM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용우	칸도시건축사사무소(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지영	청주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영환	홍익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재연	(주)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정택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권식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병욱	건축사사무소 이마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성은	(주)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전유창	아주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교선	종합건축사사무소 간향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문철	디자인그룹 플라보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민희	주식회사 엔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성원	세종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승권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재희	홍익대학교S cubic design lab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진오	(주)에스지종합건축사 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협	(주)제이에이치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체니퍼리	ObraArchitects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성욱	조성욱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성주	(주)엠오엠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재용	(주)종합그룹환경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주현	건축사사무소 디랩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조준호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차선주	건축사사무소 선재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차성민	(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남석	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홍종	건축동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한중국	(주)진양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허진성	난두루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홍만식	(주)리슈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홍성용	건축사사무소 NCS lab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황근옥	태두A&C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황보성희	(주)에스이에이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곽재환	칸건축사사무소(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경희	종합건축사사무소 연희엔지니어링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재헌	(주)토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정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진욱	(주)예지학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김혜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노윤경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단준배	(주)범도시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문수	(주)건축사사무소 플랜어스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박용구	(주)한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백진	서울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영천	(주)신엔드연희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신창훈	운생동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우형호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병인	(주)지평씨엠그룹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유재득	일로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공희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동훈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전공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순태	에스티엘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이은희	휴머네이처 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임지택	한양대학교Erica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장용호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정광호	삼육대학교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최운영	(주)건축사사무소 예현	2020.01.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주미경	삼육대학교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이광호	테크원 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오희명	건축사사무소 아카이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김충호	건축사사무소 재미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박승철	(주)소윤컴퍼니 이사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조민석	단아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원홍재	건축사사무소 도시공작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이주영	지오아키텍처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이종건	(주)오롯컴퍼니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김오진	핍스알엔디 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강영란	아이디어5 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마영준	(주)청담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이재관	미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최인숙	건축사사무소 한세움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김우종	한국교통대학교 조교수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임명구	(주)스틸콘 사장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강은정	(주)인굿디자인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김선아	(주)SAK 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이수경	(주)유비건축사사무소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유재근	건축사사무소 알엔케이(주)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송상환	건축사사무소 공유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원호성	동의대학교 조교수	2018.09.	2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강동구	박근만	(주)건축사사무소 엠비	2018.09.	2년

## 2) 경기도

명칭	지역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시기	임기
		성명	소속		
총괄건축가	성남시	홍경구	단국대학교	2020.02.	2년
디자인기획관	수원시	고은정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2019.03.	2년
총괄건축가	용인시	김대익	국립한경대학교	2018.12.	2년
총괄건축가	파주시	이기옥	(주)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8.	2년
총괄계획가	화성시	임승빈	서울대학교	2020.06.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고은영	열림하우징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김상혁	투비에이앤디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김용성	가천대학교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김유한	동서울대학교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김형구	어반플랫폼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박성준	우리공간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심복기	신구대학교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전연재	마니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조재용	종합그룹환경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최원석	다인조경기술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최정봉	가경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최지영	로프트도시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허길수	리얼랩 도시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성남시	홍성용	엔씨에스랩 건축	2020.02.	2년
공공건축가	용인시	구영민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정재용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김상언	에스엔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유재춘	건축사사무소 동우A&G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유준상	아뜰리에 준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이은석	경희대학교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이현화	건축사사무소 보통건축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전재영	모노그래프 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천의영	경기대학교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최재복	오드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용인시	최정우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2019.01.	-
공공건축가	파주시	우대성	건축사사무소 오피스	2019.08.	2년
공공건축가	파주시	신경선	건축사사무소 SNDI	2019.08.	2년
공공건축가	파주시	김진숙	공명건축사사무소	2019.08.	2년
공공건축가	파주시	김은진	SN건축사사무소	2019.08.	2년
공공건축가	포천시	성호진	(주)누아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김정숙	건축사사무소 옆집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정민재	엠아이엔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이옥화	(주)에이치오엠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최덕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일감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김도현	건축사사무소 유어예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서은영	(주)하우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임충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지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조영수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손장훈	(주)미래환경플랜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김한근	포천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전재영	모노그래프건축사사무소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조치웅	삼육대학교	2019.10.	-
공공건축가	포천시	윤정신	경기도시공사	2019.10.	-
도시PD	수원시	김동규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김현진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김형구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변남일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안국진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이은경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이중원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박영석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이남진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이정희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최혜영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윤재진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이송원	-	2020.08.	1년
도시PD	수원시	여성우	-	2020.08.	1년
도시계획 총괄계획가	화성시	최형석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2020.09.	2년
경관조경 총괄계획가	화성시	주신하	서울여대 조경학과	2020.09.	2년
건축 총괄계획가	화성시	이승환	IDR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 3) 광역시

명칭	지역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시기	임기
		성명	소속		
총괄건축가	인천시서구	하태석	SCALe건축사사무소	2019.01.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강정연	(주)삼정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대익	(주)건축사사무소공간공감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상철	온누리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정숙	(주)이드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현미	건축사사무소일오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박미은	희담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백현아	건축사사무소 이화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서문성배	에쓰엠에이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손도문	(주)비타그룹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송근식	(주)원명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송상열	정원도시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신중식	(주)머지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엄태희	더숨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윤희경	(주)삼희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명진	(주)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용성	(주)엘앤피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윤정	현일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종숙	건축사사무소 화담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정성목	수목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조항진	(주)광장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최익성	(주)건축사사무소 다자인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최정권	(주)시현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최종천	청운대학교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황보승현	(주)성지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황순우	(주)건축사사무소 바인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강승희	(주)노바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강주형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명재	플롯아키텍츠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미희	소수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석훈	헤이드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은진	에스엔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재정	(주)건축사사무소 다보건축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태영	스튜디오메조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현아	아이앤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김현주	(주)엠에이에스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남욱재	이숨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류정연	와이알디자인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문정환	건축사사무소 모뉴멘타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서상하	키오스크피오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심세보	디플레이스(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오승현	(주)건축사사무소 서가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윤규섭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선영	호가건축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이옥화	(주)에이치오엠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전연재	건축사사무소 마니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정화택	미메즈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최여진	플롯아키텍츠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허진성	난두루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인천시	홍승조	(주)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총괄건축가	부산시	김인철	아рки움	2019.02.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영민	민아키텍츠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원호성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남기봉	남기봉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동희	건축사사무소 재미소동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노정민	건축사사무소 라움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영재	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유종수	코어건축사 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승윤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세경	케이엠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차윤석	동아대학교(건축학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성률	리을도랑 아틀리에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허진우	디바이어스 건축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임성훈	동명대학교(건축학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오승태	건축사사무소 가가호호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전연재	건축사사무소 마니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여창호	그린지팩토리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신주영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최세별	건축사사무소 1458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안지혜	지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중희	투엠투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한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노혜영	JN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여운배	이도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신혁휴	PLS Architects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장아리	동아대학교(건축학과)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전상규	보편적인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유진	건축사사무소 리스모스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조윤경	짓다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최영준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정기	대한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박태홍	건축연구소 유토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재혁	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이종민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전성은	전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강대화	건축사사무소 토탈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두환	남동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김성수	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나춘선	동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홍순연	삼진어묵(주) / (사)삼진이음	2019.05.	2년
공공건축가	부산시	황용길	디아이 건축사사무소	2019.05.	2년
총괄건축가	대구시수영구	신창훈	운생동건축사사무소	-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강진	건축사사무소 제이강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김기석	(주)기단 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김홍수	예림 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박찬익	균자인 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안민	이코스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영구	최기현	건축사사무소 씨엔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상구	김민영	건축사사무소 아키텍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상구	동원서	디에이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상구	백한열	한남대 건축학과	2020.08.	2년
공공건축가	대구시수상구	채석중	진 건축사사무소	2020.08.	2년
총괄건축가	광주시	함인선	한양대학교	2019.04.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강필서	(주)공간동인건축사 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양병범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유형두	건축사사무소 가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정명환	(주)디에이건축사 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신영은	건축사사무소 사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정영석	(주)디자인그룹 금성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최재영	풍경플러스건축사 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신태양	前)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윤대한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김항집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유창균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주명칠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강철욱	(주)건축사사무소 에코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강형주	(주)디아이지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김경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김용춘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임승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LIM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박현진	(주)온디자인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위진복	유아이에이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광주시	이순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2019.07.	2년
총괄건축가	대전시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2020.01.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천의영	경기대학교(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송복섭	한밭대학교(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석훈	세종대학교(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강혁진	한국교통대(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중희	투엠투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노현정	모모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승재	목원대학교(건축학부)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영주	(주)건축사무소 유니트유에이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전재영	모노그래프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유복	(주)모드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문선	문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영주	배재대학교(건축학부)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강희선	한남대학교(토목건축공학부)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지은	리아키텍츠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조한재	건축사무소 예하파트너스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택구	티지엘 건축사무소(TGLAA)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남지현	에이아이엠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임재현	조형가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수석	SKA ARCHITECTS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박정민	(주)민앤동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지혜	배재대학교(건축학부)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권이철	갓고다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전상규	보편적인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오진국	(주)플로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윤종원	소솔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오숙경	에이엔오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백창용	해담은풍경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정원	충남대학교(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은경	(주)엘케이파트너스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중은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최정봉	(주)가경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조한목	건축사무소 YEHA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현상훈	이공일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조극래	대구카톨릭대(건축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홍정	(주)아이팝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최재인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손성태	아키어반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승조	(주)에스제이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재현	(주)토문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재범	쿠과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성희	(주)건축사무소 아키비전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정미숙	(주)이레 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오진식	쿠과 종합건축사무소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상우	건축사무소 예눅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한상화	건축사무소 이지도시건축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최정우	목원대학교(도시공학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김대수	대전과학기술대(도시환경조경과)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기반연구실)	2020.03.	2년
공공건축가	대전시	이시영	배재대학교(조경학과)	2020.03.	2년

#### 4) 기타 시도

명칭	지역		총괄/공공건축가		위촉시기	임기
	광역시	기초	성명	소속		
총괄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주대관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2019.06.	-
총괄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이민아	건축사사무소 협동원	2019.05.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서형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신	2019.06.	-
공공계획가	강원도	원주시	김성주	(주)도시건축이래	2019.06.	-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추소연	(주)건축사사무소RE도시건축	2019.06.	-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정이삭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2019.06.	-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나성진	얼라이브어스	2019.06.	-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박승목	아세아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임동우	홍익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이지영	(주)건축사사무소 도리건축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원주시	이영환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05.	2년
공공계획가	강원도	원주시	이선출	감자꽃스튜디오	2020.05.	2년
공공계획가	강원도	원주시	송준민	제이콥스플래닝앤디자인(주)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김남성	(주)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조호성	건축사사무소 도담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차선주	건축사사무소 선재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윤영조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전서희	바른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이영재	오앤엘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황동근	아키펠랫폼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손경민	볼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최성경	무화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심재균	더드림 종합 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전범우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나인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강원도	춘천시	이승철	건축사사무소 품은	2020.07.	2년
총괄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신춘규	CGS건축사사무소	2020.06.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황재훈	충북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반영운	충북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박성일	피에스아이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노선화	바루디자인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이재삼	강산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이영선	이솔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최은희	센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박상구	청주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오재만	지선정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심규영	충북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변문수	무운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윤선영	시아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조준희	서울시립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최민아	LH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천장환	경희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이선재	그리드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이영민	디자인랩 수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신요한	플로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박세희	지안건축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북도	청주시	조장은	지소건축	2020.07.	2년
총괄건축가	충청남도		제해성	아주대학교	2019.07.	2년
총괄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최성진	원광대학교	2020.05.	2년
총괄계획가	충청남도	당진시	차주영	(주)예지학건축사사무소	2018	-
지역총괄계획가	충청남도	부여군	강인호	한남대학교	2016	-
총괄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이창섭	원광대학교	2020.06.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장순각	한양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용환	한국교원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도용호	중부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최승희	우석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윤규섭	(주)씨와이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배천문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임호균	연세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임정택	(주)제이플러스 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정기정	유오에스 건축사사무소(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현상훈	이공일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조원규	(주)케이엔티 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백현아	비엔제이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차성민	(주)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임용민	전주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동재욱	공주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영종	(주)라움플랜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규린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최병관	공주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윤근주	일구구공 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용구	인천재능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박영준	건축사사무소 나무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주타	(주)어반트리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정재훈	한남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광현	서울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한동욱	남서울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임오연	건양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신동희	(주)자미현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우형	남서울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오형석	공주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창섭	원광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고도재	한양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시영	배재대학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윤종원	소솔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유준상	아뜰리에준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중희	투엠투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오승현	(주)건축사사무소 서가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구국현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마루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정기욱	한국디자인진흥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현진	해울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전연재	건축사사무소 마니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재원	제이이즈워킹 건축사사무소(주)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원홍재	건축사사무소 도시공작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최재복	오드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성영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도현	건축사사무소 유어예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윤성	쓰리엠쓰리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전재영	모노그래프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우준승	레스(LESS)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조경석	(주)목양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신성진	블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유경동	이이케이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박윤경	매트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조한재	건축사사무소 예하파트너스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안치훈	해밀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LIM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김대익	(주)건축사사무소 공감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서경화	플라잉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은경	(주)엘케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최규현	규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박종훈	(주)비컨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호윤정	호림 건축사사무소	2019.07.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김준경	국립한경대학교	2019.01.	-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신승수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김창균	유타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윤여갑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1.	-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조정화	독일 건축사	2019.01.	-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정효경	건축사사무소 세종	2020.03.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김상범	건축사사무소 우성빌드	2020.03.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당진시	박종기	순천향대학교	2020.03.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신현보	한남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서효석	나래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김광호	한남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차주영	공간환경건설팅 지움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김대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부여군	박인숙	(주)인환경디자인연구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홍경구	단국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남승우	어울림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고정석	CLOPEN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차성호	아원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최종화	TOW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공주시	윤석주	라온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노현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김형수	여름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김근영	조양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강인애	원광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충청남도	홍성군	강성희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산	2020.09.	2년
총괄건축가	전라북도		윤충열	원광대학교	2020.02.	2년
도시 총괄조경가	전라북도	전주시	최신현	(주)씨토포스	2019.01.	2년
주거재생 총괄계획가	전라북도	전주시	조준배	유진도시건축연구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정지상	가가 건축사사무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강미현	건축사사무소 예감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송은정	이룸 건축사사무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유희완	건축사사무소 dn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임대현	건축사사무소 보원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최형규	1010건축사사무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최정인	일상건축사사무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나민경	유피디자인건축사사무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최병숙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강현석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이승재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최용서	가이인테리어, 창년문화예술협동조합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이영호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장형철	블루오션(장애인기업)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정수경	즐거운도시연구소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고남수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김상남	도시재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	2018.02.	-
공공건축가	전라북도	전주시	황영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2018.02.	-
총괄건축가	전라남도		손승광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2020.07.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송성욱	순천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원일	이엘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변남일	비앤아이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선형종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박정현	동아보건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백재봉	백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순미	(주)건축사사무소미가운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강철욱	건축사사무소에코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정금호	전남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정명환	(주)건축사사무소지웃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박동준	(주)그룹포에이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임승완	전남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준택	전남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기준	(주)맥스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조성우	미래환경정책연구원(주)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경원	조선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재홍	순천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홍용	더엘림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병진	건축사사무소에이디디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최재영	풍경플러스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용춘	조선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충미	진짜노리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변형우	건축사사무소가인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권현아	목포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염대봉	조선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은민균	우석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김남희	서울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이형주	건축사사무소플레이스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조성민	호남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변무섭	전북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정재성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조익선	건축사사무소 선진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정종민	건축사사무소 명인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양연경	워드 건축사사무소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박병열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2019.07.	-
공공건축가	전라남도	순천시	김동인	OMA 건축사사무소	2019.07.	-
총괄건축가	경상북도		배병길	배병길건축도시연구소	2019.04.	2년
총괄건축가	경상북도	경주시	이대준	한동대학교	2019.06.	-
도시건축 관리단장	경상북도	영주시	신승수	(주)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2019.04.	-
총괄건축가	경상북도	의성군	윤철재	경북대학교	2019.06.	-
총괄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이우열	이룸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중희	투엠투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한철수	(주)아뜰리에페이퍼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박상진	(주)건축사사무소도모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동희	건축사사무소 KDDH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정효빈	HB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성배	(주)건축사사무소다솔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최창섭	(주)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양성용	(주)인터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찬우	(주)현대연합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기석	(주)기단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전성은	(주)전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황보성희	office hbsh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황현명	(주)투에이치엠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정우영	SIE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강진	건축사사무소 제이강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강정구	건축사사무소 서로가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심재익	심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종은	숨21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규린	좋은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강계숙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방재원	(주)우원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박홍근	(주)스페이스텐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문영아	이즈모어앤씨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준기	세와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신동희	(주)자미힌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영화	건축사사무소 도노바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병진	건축사사무소 에이디디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기홍	청림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윤희원	동일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태원	원건축사사무소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응직	세명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도영	안동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윤성훈	청주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용환	교원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상홍	경북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권계중	대구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정광호	삼육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중현	대전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유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강주원	영남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이형숙	경북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엄봉훈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김철영	영남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안성훈	대구대학교	2020.10.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김창혁	건축사사무소 혜인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손남영	시소건축사사무소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우대준	주.대홍토목 ENG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김철영	영남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백진욱	건축사사무소 애드이엔씨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구미시	신종훈	대구가톨릭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의성군	김택빈	이스케이프 건축	2019.12.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의성군	박찬익	군자인 건축	2019.12.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의성군	정상경	요앞건축	2019.12.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차동광	건축사사무소 아키뉴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황현혜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권계중	대구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이장우	필단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정수동	(주)건축사사무소 공작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이용환	한국교원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정홍진	홍진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정상경	(주)요앞 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조극래	대구카톨릭대학교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이광우	동림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김세희	정인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우지현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이훈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천산건축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동원서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조운근	건축사사무소 봄봄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예정우	건축사사무소 씨마(CYMA)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박재영	건축사사무소 다올	2020.09.	2년
공공건축가	경상북도	영천시	김수석	SKA ARCHITECTS	2020.09.	2년
총괄건축가	경상남도		민현식	건축사사무소 기오현	2019.05.	2년
총괄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고인석	인제대학교	2020.05.	2년
총괄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안재락	경상대학교	2020.02.	-
총괄계획가	경상남도	진주시	최삼영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총괄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오섬훈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2020.03.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고성룡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구선주	구우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민석	건축사사무소 노선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병국	루사종합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유진	건축사사무소 리스모스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정환	예원건축사 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나인혜	오브라 에이빔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문진현	인진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배종열	시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서정석	무위건축사 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송인욱	건축사사무소 사람인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신대곤	이노디자인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유방근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윤근주	일구구공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이장민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임의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정은희	디자인락 건축사사무소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정혜진	어반아키 용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조현정	(주)지문도시 건축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조형규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최정우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열	건축사사무소 시토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한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한	2019.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허정도	LH공사	2020.06.	1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박진석	경남대학교 건축과	2020.06.	1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재석	건축사사무소 고평	2020.06.	1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박선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2020.06.	1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조태근	(주)신화건축 건축사사무소	2020.06.	1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하종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강병두	경남도립 거창대학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박용수	(정보미공개)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이홍순	(정보미공개)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김성진	(정보미공개)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신을재	(정보미공개)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거창군	박정희	(정보미공개)	2019.06.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임정택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9.07.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오신욱	부산시 공공건축가	2019.07.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이장민	김해 인제대학교	2019.07.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민	동남건축사사무소	2019.07.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김병국	(주)루사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김성희	혜광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박선욱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서정석	(주)무위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김해시	박건철	구도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권오열	헤이마 건축사사무소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이상원	건축사사무소 이상·원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윤여춘	윤여춘 건축사사무소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강주형	(주)생각나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이재웅	건축사사무소 소요현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조승만	경관공작소 사이(주)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배건국	(주)어반야드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남해군	장동선	SODA 디자인 건축 미술관	2020.06.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사천시	유방근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사천시	김근성	국립경남과학 기술대학교 건축학과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사천시	박갑주	(주)동서이앤씨 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사천시	유병인	(주)지평씨엠그룹 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사천시	손성태	아키어반 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양산시	윤재균	와이피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양산시	문진형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양산시	김병국	(주)루사종합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양산시	배미선	건축사사무소 강나루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유진상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김용태	인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서정석	(주)무위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유재만	도원A&C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조만재	다림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양현숙	모두 양현숙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송인옥	사람인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배종열	시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정은희	디자인 락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의령군	남상완	사람과 건축 건축사사무소	2019.04.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박영진	건축사사무소 영진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김상부	주원청솔 건축사사무소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정창운	소윤 건축사사무소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이관직	비에스디자인건축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우대성	건축사사무소 오피스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안재락	경상대학교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강호근	거창대학교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강재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진주시	신동진	한국국제대학교	2019.01.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녕군	정연덕	건축사사무소 동우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녕군	김봉석	종합건축사(사) 비원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녕군	김태현	신창녕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녕군	김형관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녕군	김정훈	건축사사무소 우리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이문우	(주)이누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신삼호	(주)유엔에이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조용범	(주)범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박병철	(주)창원문화도시콘텐츠개발원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신명관	(주)이지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하동열	건축사사무소 시토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정성문	창원대학교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구경희	G&I 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이정민	건축사사무소 씨엘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서성희	두손도시조경기술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강재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조만태	(주)건축사사무소 미르건축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공부성	루가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박유진	시간향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김은정	건축사사무소 신우공감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양지윤	라운그룹 한 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손명준	에스엠제이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강문철	(주)지오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신용주	경남대학교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정민재	엠아이엔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김성률	리을도랑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창원시	양소정	(주)루사건축사사무소	2020.04.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강재중	경남과학기술대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김근성	경남과학기술대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김만준	한양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손경민	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양지윤	라운그룹 한 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오상훈	단국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윤석현	경상대학교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이준배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통영시	허상득	한솔건축사사무소	2020.05.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군	김윤중	하늘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군	김창성	누리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군	박병윤	오름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군	은종민	유성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하동군	이상훈	다담건축사사무소	2020.07.	2년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김병국	(주)루사종합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김상석	광개토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서정석	(주)무위 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안맹준	종합건축사사무소일안그룹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윤재균	와이피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2019.09.	-
공공건축가	경상남도	함안군	진기동	장성건축사사무소	2019.09.	-
총괄건축가	제주도		김용미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019.12.	2년
공공건축가	제주도		고성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상범	숲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종찬	제이투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현군출	(주)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정일	건축사사무소 지맥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양수웅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양건	가우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강중열	(주)건축사사무소 이즈 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창균	(주)유타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주경	(주)오우재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전영훈	중앙대학교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선아	(주)SAK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최신현	(주)씨토포스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이수학	아뜰리에 나무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소희	영남대학교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박현모	(주)아뜰리에 일일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현승훈	다랑쉬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현승현	(주)선랩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이용규	제주대학교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현숙	(주)이엔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박경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강승중	건축사사무소 낮선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정승복	리트머스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고이권	비엔케이 건축사사무소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강혁진	한국교통대학교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이준석	Mosaic Urban Design and Masterplanning	2020.01.	-
공공건축가	제주도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2020.01.	-



# Abstract

## A Study on the Future Vision for the new Goyang City Hall through the Best Cases for Public Office Building

Kwangjin Jung<sup>1)</sup>, Haesong Jo<sup>2)</sup>

Goyang City is using the government building of Goyang-gun, which had a population of less than 250,000, as a city hall until now, and the deterioration is serious. Since the area is less than the legal standard area, it is scattered in nine nearby external offices, causing a decrease in work efficiency and inconvenience to civilians. Currently, Goyang City has grown into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exceeding 1.08 million.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new government building is urgently due to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city in 2022. Accordingly, Goyang City is planning to hold a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in September 2021,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pplicant in 2018, securing the construction fun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pplicant, selecting the site for construction,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seek a successful construction plan for public Office Building by establishing a vis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c Office Building, deriving resident participation plans, and presenting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Office Building, implications were drawn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offices by case, construction vision and purpose,

---

1) Associate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scale and project cost, design competition method, and consolidation. In public projects, through the analysis of conflict types and causes of conflict, a public debate plan for conflict mitigation was derived. In order to establish the vis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in Goyang City, the role of the metropolitan community, the role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ole as a building were set and proposed. In addition, the procedure analysis of public architecture and design competition was performed, and general guidelines and design guidelines were proposed. To this end, the composi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e Judging Committee, the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and review of facilities subject to complexation,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plan between the existing urban organization and the applicant company, and the creation of appropriate design competition guidelines were proposed.